본 학술대회의 발표자료집은 200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NRF-2009-361-A00008)

통일인문학 제24회 국내 학술심포지움

포스트 통일과 민족적 연대 방안

전체 사회 : 정진아(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10:30 – 10:40	**개회사** 김성민(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장)
10:40 – 12:00	**1부. 기조발제**
	1. 연합제냐 연방제냐: 민족적 연대의 관점에서 본 국가통합방안 이종석(전 통일부장관)
	2. 포스트 통일시대, 독일사회의 가치관 변화 김누리(중앙대 독문과)
	3. 남북의 불균등발전이 남긴 폐해와 민족적 연대 방안 손석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2:10 – 13:30	점 심 식 사
13:30 – 15:10	**2부. 포스트 통일과 민족** 좌장 :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1. 포스트 통일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발표2. 포스트 통일과 민족정체성 문제: 1990년대 이후 남북 철학계의 민족 · 민족주의 이해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박민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종합토론 김창수(코리아연구원) / 이병태(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15:10 – 15:20	휴 식
15:20 – 18:00	**3부. 민족적 연대의 실천적 방안** 좌장 : 양병기(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발표3. 포스트 통일과 동아시아 지역연대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발표4.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을 통해서 본 남북연대 방안 이승환(시민평화포럼)
	발표5. 민족적 연대를 가로막는 남남갈등의 실체와 극복 방안 이창언(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종합토론 이상훈(대진대 역사문화콘텐츠학부)/서유석(호원대 교양학부)/김광남(생활자치연구소)

- 차 례 -

1부. 기조발제

1. 연합제냐 연방제냐 : 민족적 연대의 관점에서 본 국가통합방안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p.9

2. 포스트 통일시대, 독일사회의 가치관 변화
김누리(중앙대 독문과) p.11

3. 남북의 불균등발전이 남긴 폐해와 민족적 연대 방안
손석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p.27

2부. 포스트 통일과 민족

1. 포스트 통일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p.43

2. 포스트 통일과 민족정체성 문제: 1990년대 남북 철학계의 민족 · 민족주의 이해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박민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p.57

3부. 민족적 연대의 실천적 방안

1. 포스트 통일과 동아시아 지역연대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p.77

2.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을 통해서 본 남북연대 방안
이승환(시민평화포럼) p.91

3. 민족적 연대를 가로막는 남남갈등의 실체와 극복 방안
이창언(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p.117

1부
기조발제

1. 연합제냐 연방제냐: 민족적 연대의 관점에서 본 국가통합방안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2. 포스트 통일시대, 독일사회의 가치관 변화
김누리(중앙대 독문과)

3. 남북의 불균등발전이 남긴 폐해와 민족적 연대 방안
손석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합제냐? 연방제냐?: 민족적 연대의 관점에서 본 국가통합방안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1. 왜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의 인식 공유가 필요한가?

○ 남북의 극심한 불신과 대결적 상황 그리고 체제 역량의 비대칭성이 구조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불신과 대결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공유하는 '남과 북이 함께 하는 미래 비전' 필요
○ 즉, 남북관계의 확대 지향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공존형 통일방안에 대한 인식 공유 필요
○ 이 점에서 6.15 공동선언 2항의 의의 매우 큼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한반도 통일의 형태와 방식

□ 방안
○ 단일국가, 연방제, 남북연합제
○ 연방, 연합도 궁극적으로 단일국가 지향하는 과도기의 통일국가형태

□ 방식—어떤 통일?
○ 전쟁을 통한 통일
○ 북한 급변사태 통한 흡수통일
○ 점진적 평화통일

3. 연방제와 연합, 어느 방안이 현실적인가?

□ 안정적 통일을 위한 역설
○ 극심한 남북 이질화 속에서 바람직한 통일과정
- 다차원에서 이질화 극복 수반하는 점진적이고 절제된 통합과정 필요
○ 구심력의 적절한 조절과 제어를 통한 모두(남북)가 함께 "잘사는" 통일추구
○ 통일국가의 구심력이 강조된 연방은 한반도에서 실현 즉시, 단일국가로의 급격한 소용돌이 상태 초래 가능성 큼
- 연방제 실현은 흡수통일과 유사한 상황 발생시킬 가능성
○ 구심력의 적절한 조절을 제도화한 남북연합이 현실적인 방안

□ 통일방안이 낳은 희극
○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주장과 남한의 국가보안법 위반

4. 흡수통일과 점진적 평화통일 비교

□ 흡수통일 가능한가?
○ 북한체제의 안정성 진단
○ 북한주민을 “투명인간화”하는 흡수통일론
○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문제
○ 중국 변수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축으로 하는 점진적 평화통일 추구 필요

* 중립화 통일론 검토
-- 중립과 균형은 어떻게 다른가?

5. 통일방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적대성 해소를 위한 실천!

□ 통일을 위한 현 단계 핵심과제
○ 통일 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 축성 필요
○ 남북 간 적대적 불신의 해소
○ 병행하여 북미 간 적대적 불신해소- 북미관계 정상화
- 북핵문제도 북미 적대관계 해소 없이는 해결 난망

□ 통일방안은 경로제시 정도면 충분, 적대구조 해소노력이 우선
○ 개괄적인 통일경로(남북연합)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나 구체적인 방안 모색 경향은 체제대결시대의 유산. 탁상공론에 불과할 가능성
○ 더 중요한 것은 적대성 해소와 협력의 실천. 즉, 평화와 공동번영 노력
○ 통일의 방식은 폭력적 방식을 배제 전제, 남북의 통합성 증대와 함께 그 시대 남북 주민들이 판단할일.

포스트 통일 시대, 독일사회의 가치관 변화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독일인들은 어떤 국가에서 살고 싶어 하는가?
어떤 과거 위에 서고자 하며,
어떤 미래를 향하고자 하는가?"[1)]

I. 들어가며

모든 사회변동의 기저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 사회의 제 영역에서 나타나는 외적 변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닌 의식, 감성, 욕망, 자아상, 타자상 등을 통어하는 일련의 가치체제의 변화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변동의 근원적인 동인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변동의 반영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적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촉발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잉태하기도 하면서 한 사회의 가치지형을 바꾸어놓는다. 결국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변동의 모태이자 산물인 것이다.

그렇기에 가치관은 역사적 변혁기에 가장 극적인 형태로 변화한다. 구질서와 신질서가 교체되는 역사적 전환기는 구시대를 떠받치던 낡은 가치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가치체제가 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질서가 신질서로 전화하는 대신, 또 다른 기존질서에 편입되는 경우, 구질서-기존질서-신질서 사이에서 가치관의 동요는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포스트 통일 시대 독일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가치관 변화에 따른 사회변동이 동시에 표출되는 역동적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다. 특히 구동독의 몰락과 함께 급격한 체제붕괴와 문화단절을 경험한 동독[2)]의 경우 가치관의 변화는 지극히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동독인들은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의 결과 지난 40년간 자신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구성해온 가치관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가치단절의 상황에서, 서독의 가치관을 수용하거나, 과거의 가치관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해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가치관의 변화가 모든 사회변동, 문화변동의 근원적 동인이기 때문이다. 통일독일 사회의 변화, 특히 문화변동을 추동시킨 심층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탐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통일독일은

---

* 이 강연문은 졸고 『동독의 귀환. 통일 이후 독일의 가치관 변화』, 괴테연구, 제21집(2008)을 수정 재구성한 것임.

1) Der Spiegel, 10/1999, S. 33.

2) 여기서 동독과 서독은 각각 지역 혹은 국가로서의 구동독, 구서독을 뜻하고, 마찬가지로 동독인은 구동독주민을, 서독인은 구서독주민을 의미한다.

“두 은하계의 충돌”[3]에 비견될 정도로 20세기를 대표하는 거대한 두 가치체제의 충돌이 일어난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독일의 가치관 변화는 독일의 경계를 넘어 21세기의 가치지형 변화의 징후를 선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독일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살필 때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동독 지역의 가치관 변화이다. 그 이유는 우선 통일로 인해 가장 격심한 가치관의 혼란과 변화를 겪은 지역이 동독이기 때문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동독의 가치관 변화가 서독의 가치관 변화를 촉발하였고, 그 결과 통일독일의 가치지형에 일대 지각변동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오늘 이 강연에서는 독일통일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다음 세 가지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동독적 가치는 약화되었다기보다는 강화되었고, 둘째 새로운 성격을 지닌 동독 정체성이 부활했으며, 셋째 서독의 가치관이 동독의 가치관에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보면 ‘동독의 귀환’ 현상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포스트 통일 시대 가치지형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인 지표들을 통해 추적하고, 동독 정체성의 ‘놀라운’ 부활 현상을 살펴본 후에, 동독과 서독의 가치관이 수렴하면서 통일독일의 가치지형을 변화시키는 양상을 조명할 것이다. 또한 통일독일의 가치지형 변화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지닌 의미를 성찰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치관 변화가 통일독일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해보고,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볼 것이다.

II. 통일독일의 가치관 변화

1. 동서독 가치관의 변화 양상

“나는 더 많은 돈과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싼 세계는 활력을 잃고 살벌해졌다.”
(동독지역 여학생)[4]

통일 이후 독일인들의 가치관은 뚜렷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했다. 동독인들은 통일 이후 불어닥친 체제단절과 문화충격의 폭풍 속에서 유례없는 가치혼돈을 경험했고, 서독인들 또한 통일이 몰고 온 체제충격과 세계화가 초래한 체제위기 속에서 동독인 못지않은 가치변동을 겪었다. 이제 다양한 조사지표들을 토대로 체제, 이념, 자아상 등과 관련하여 동서독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자.
우선 체제의 차원에서는 현재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서독식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동독인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다. 통일독일 사회에서 서독체제가 그대로 정착된 데 만족하는 동독인은 1990년 41%에

3) Claus Detjen: Die anderen Deutschen. Wie der Osten die Republik verändert, Bonn 1999, S. 7. 데트옌은 여기서 1990년 당시 베를린 중앙은행 총재의 말이라며,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
4) Wolfgang Engler: Die Ostdeutschen als Avantgarde, Berlin 2004, S. 68.

서 2004년 28%로 급락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경제, 휴머니즘, 사회주의를 결합한 국가형태'를 선호하는 동독인은 같은 기간에 39%에서 50%로 상승했다. 동독인의 28%만이 서독 주도 통일에 만족하고, 48%가 새로운 국가형태를 원하는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서독인의 경우도 서독체제에 대한 만족도는 같은 기간에 74%에서 62%로 하락했고, 새로운 국가형태에 대한 찬성도도 3%에서 16%로 상승하였다. 서독식 체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서독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5)]

특히 서독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불만은 동서독 공히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동독의 경우 1990년 70% 중반대였던 긍정적 평가가 2005년에는 7%로 급락했고, 반대로 부정적 평가는 같은 기간에 5%에서 70%대로 급상승했다. 서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1994년에서 2005년 사이에 긍정적 답변은 60%대에서 20%대로 급격히 하락했고, 부정적 답변은 20%대에서 50%대로 크게 상승했다.[6)]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국가와 국가의 과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는 현상에서도 확인된다. 2004년 조사에 따르면 동독인의 50%, 서독인의 40%가 능력에 따른 분배뿐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도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가가 노후, 질병, 빈곤, 실업 문제 등을 책임져야한다고 보는 견해에도 동독인의 92%와 서독인의 83%가 동의를 표함으로써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7)] 같은 맥락에서 방임형 국가모델보다는 개입형 국가모델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져 2004년 조사에 따르면 동독인의 77%, 서독인의 64%가 개입형 국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방임형 국가를 선호하는 비율은 동독 5%, 서독 8%에 불과했다.[8)] 개입형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한 데에는 현재의 분배체제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독일인은 1991년 18%에서 2004년 7%로 반감했다.[9)]

현재 독일을 지배하는 서독식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이념적인 영역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빠른 속도로 고조되는 현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서독에서는 75%에서 60%로, 동독에서는 40%에서 28%로 감소하였다. 특히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만 독일에서는 15%가 떨어져, 5%가 떨어진 유럽 전체나, 9%가 떨어진 동유럽의 신생유럽연합회원국들보다도 하락폭이 컸다. 또한 2006년의 조사에 따르면 동독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34%로서 유럽 전체에서 가장 낮았다. 서독의 경우도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 최저점에 이르렀다.[10)]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다.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와 정치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동독인이 동유럽인들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은 일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고려할 때 동독인의 50%만이 현재의 사회질서를 '수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11)]

---

5) Vgl. Klaus Schröder: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München 2006, S. 492-493.
6) Vgl. Ebd., S. 502.
7) Vgl. Ebd., S. 492f.
8) Vgl. Ebd., S. 504.
9) Vgl. Ebd., S. 528.
10) Vgl. Ebd., S. 493f.

서독식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의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조사에 따르면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독일인은 동독인이 71%, 서독인이 57%였다. 특히 서독 청년세대의 사회주의 선호도는 2005년 한해 동안 무려 20%나 수직상승해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12)]

민주주의 이념과 함께 근대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이념인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선호도도 변화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유에 대한 선호도는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의 기간에 서독에서는 60% 중반에서 50%대로, 동독에서는 40% 중반대에서 30% 대로 떨어졌고, 평등에 대한 선호도는 거꾸로 서독에서는 20% 중반대에서 30% 중반대로, 동독에서는 40%에서 50% 중반대로 상승하였다.

또한 자유의 내용적 실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동서독 간에는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서독인들은 자유를 가능한 한 억압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과제도 이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정도로 한정하는데 반해, 동독인들은 자유를 누리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3)]

서독식 사회·경제체제, 민주주의, 자유, 평등의 이념에 대한 가치관이 이처럼 급격히 변화한 것 못지않게 동독인들이 구동독 사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동독인들이 구동독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다. '동독시절은 멋진 시절이었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동독인은 1994년 48%에서 2004년 54%로 상승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동독인은 26%에서 18%로 줄어들었다. '동독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시도였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동독인은 1990년 83%에서 1999년 90%로 증가했고, 그렇지 않다는 동독인은 12%에서 7%로 감소했다. 또한 '동독은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이 더 많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동독인도 1994년 35%에서 2004년 40%로 늘어났다.[14)] 다수의 동독인들이 이처럼 동독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돌아보면서 동독이 서독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15)]

동서독 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 특징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동서독의 가치관이 동일한 지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서독식 체제, 사회적 시장경제, 새로운 국가형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 등을 평가할 때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점차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사회정의, 분배, 복지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평등지향성이다. 둘째는 이러한 수렴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가치관에는 여전히 일정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독인이 평등을 중시하는 경향성을 점차 강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동독인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상호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하면, 동서독의 가치관 사이에는 가치경향의 수렴현상과 가치편차의 지속현상이 동시에 관찰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지표와 '자유-평등 선호도' 지표이다. '현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동서독인의 평가에서 관찰되는 흥미로운 현상은 동서독 공히 불신과 회의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이와 동시에 동서독 간에 불

11) Vgl. Ebd., S. 495.
12) Vgl. Ebd., S. 496.
13) Vgl. Ebd., S. 507.
14) Vgl. Ebd., S. 328-339.
15) Vgl. Ebd., S. 529.

신의 격차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약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공통된 불신의 경향은 상황적 요인에 기인하고, 균일한 불신의 격차는 구조적 요인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불평등 구조의 심화와 확산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동서독 공히 현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사회의 구조적 차이가 불신의 정도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동서독 사이에 줄곧 40%의 격차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동서독 주민의 민주주의관에는 여전히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16] 또한 '자유-평등 선호도'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 가치가 동서독 공히 하락하는 반면, 평등의 가치가 동서독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때 자유, 평등에 대한 선호도의 격차는 동서독 사이에서 지난 15년간의 변동과정에서 약 20%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동서독 간에 일정한 편차를 유지한 채 가치관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황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서독의 가치관이 일정한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동독인들이 자신을 사회적 타자로 범주화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동독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독일에 사는 외국인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17] 동독인들이 이처럼 타자 의식, 이방인 의식, 주변인 의식, 이등국민 의식을 내면화한 결과 동독인과 서독인의 삶의 만족도 격차는 동유럽인과 서유럽인의 그것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8]

2. 동독 정체성의 형성

"자유는 지금도 필연성의 통찰이다."
(동독지역 여학생)[19]

1990년대 중반 이후 동독인들 사이에 집단적인 정체성이 형성되는 현상도 통일독일의 가치관 변화와 관련하여 눈여겨보아야할 대목이다. 동독인의 정체성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동독인 특유의 가치관이 보다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다시 서독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효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동독인의 정체성은 통일 이후 서독식 제도와 관행이 일방적으로 이식되고, 이 과정에서 구동독의 제도적, 인적 인프라가 철저하게 해체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서독의 '식민지적' 지배에 항의하는 '저항적 정체성 Trotzidentität'에서 출발하여, 점차 동독의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서독인과 자신을 의도적으로 구분짓는 '배제적 정체성 Abgrenzungsidentität'으로 진화했다. 동독인이 아직도 여전히 '이등국민'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동독인이 지닌 저항적 정체성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동독인이 한사코 자신을 통일독일의 시민이라기보다는 '동독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배제적 정체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20]

16) Vgl. Ebd., S. 491.
17) Vgl. Ebd., S. 394.
18) Vgl. Ebd., S. 519.
19) Wolfgang Engler: a.a.O., S. 42.
20) 2000년 조사에 따르면 동독인의 72%가 여전히 '이등국민' 의식을 가지고 있고, 1999년 조사에 의하면 동독인의 20%만이 자신

통일 이후 동독 정체성이 확산되는 현상을 가장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는 롤프 라이시히이다. 그에 따르면 동독인은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통일 10년 이후부터 동독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져 이제는 '동독인들이 동독인으로서 집단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이의를 다는 이는 없다고 한다. 그는 동독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동독인의 자기정체화 Selbstidentifikation 현상에 주목한다. 그는 동독인의 자기정체화가 드러나는 전형적인 사례를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는 대다수 동독인들이 자신을 '독일인'이라기보다는 우선 '동독인'으로 지칭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동독인들 다수가 여전히 통일독일의 '이등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동독인들이 자신을 서독인들과 구분짓기 위해 높은 사회적 능력, 강한 정의감, 낮은 출세의식, 사회적 평등에 대한 감각 등 동독인 특유의 사회적 성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동독인과 서독인이 상호간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범주화하고, 타자의 속성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동독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21]
동독 정체성이 형성되고 강화된 원인과 동독 정체성이 지닌 독특한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볼프강 엥글러는 동독정체성의 형성을 무엇보다도 통일독일 사회에서 동독인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쾌감의 표현이라고 풀이한다.

상황은 문화적 차이에서 출발하여 차이에 대한 성찰을 거쳐 차이에 대한 분명한 가치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동독의 고유성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고, '세련화'되었다. 오늘날 동독인들은 자신의 고유성을 '근거 없이' 또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혹은 근거 없기 '때문에'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집단적인 자기표현을 위한 모든 혹은 거의 모든 자율적인 사회적, 제도적, 매체적 수단을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동기라면, 동독인의 '문화투쟁'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적인) 자존감과 (사회적인) 품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다.[22]

엥글러가 말하는 '문화투쟁'과 유사한 맥락에서 데틀레프 폴락은 동독 정체성의 형성을 동독인의 '인정투쟁'의 한 국면이라고 평가한다.

동독 정체성의 형성은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경향, 즉 동독인의 이력을 폄하하고 사회집단으로서 동독인을 평가절하하는 경향과 관계가 있다. 동독인들이 구동독을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서독인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주장의 형식이며, 이때 이러한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이식된 서독의 제도로 인해 과도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훼손당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독인의 '배제적 정체성'의 토양이 된, 불이익을 당했다는 느낌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인 것이다.[23]

을 통일독일의 시민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Vgl. Rolf Reißig: Die gespaltene Vereinigungsgesellschaft, a.a.O., S. 83.)
21) Rolf Reißig: Die gespaltene Vereinigungsgesellschaft, a.a.O., S. 93.
22) Wolfgang Engler: Sie sprechen doch Deutsch, in: Die Zeit, Nr. 35/2000, S. 9.
23) Detlef Pollack: Die ostdeutsche Identität. Erbe des DDR-Sozialismus oder Produkt der Wiedervereinigung? Die Einstellung der Ostdeutschen zu sozialer Ungleichheit und Demokrati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d. 41.42/1998, S. 22.

폴락이 동독 정체성을 통일독일의 변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과거를 인정받기 위해 꾸며낸 '자기주장의 형식', 즉 '연출된 정체성'이라고 보는 반면, 라이시히는 동독 정체성을 통일독일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에서 나온 '체험된 정체성'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동독 정체성은 통일독일에서 겪은 체험에 대한 성찰에서 배태된 '비판적 정체성'이다.

동독시민들은 그 사이에 다시 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삶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문화를 펼치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 10년 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동독을 성찰한다. 미화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꼼꼼하게 따져가며 섬세하게, 오늘날의 통일독일과 비판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이다. 동독인의 정체성 형성은 그런 의미에서 통일독일에서 동독인의 생활경험과 감정을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는 데 대한 반작용이지만, 또한 두 사회체제에 대한 경험을 새롭게 혜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동독정체성의 형성은 '전환의 모습'이지, 동독에 대한 향수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독과 집단적으로 동일시하는 새로운 동독 정체성이 아니고, 동독 속에서 또한 동독과 함께 한 공동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24]

미셀비츠 또한 라이시히와 마찬가지로 동독 정체성이 지닌 성찰적 성격에 주목한다. "뚜렷해지는 것은 성찰적이고, 공동의 동독 체험을 배경으로 형성된, 공동의 독일이라는 이해구조 속에서 획득된 '동독인들'의 정체성이다."[25]
이처럼 엥글러와 폴락이 동독 정체성을 주로 통일 이후 동독인들이 느낀 불쾌감과 소외감에서 발생한 저항적이고 배제적인 정체성으로 보는 반면, 라이시히와 미셀비츠는 동독 정체성을 구동독과 통일독일에 대한 냉정한 비교평가에서 나온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정체성으로 보는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에도 동독 정체성이 약화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압력하에 급격히 변화된 통일독일의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과거의 경험을 동원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동독과거의 '악마화'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의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3. '변화된 공화국'

"도대체 동독인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합니까?
과연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 가치가 남아있나요?"
(서독 여기자)[26]

클라우스 슈뢰더는 2006년에 나온, 독일통일의 제 국면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767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저서 『변화된 공화국』에서 통일독일의 변화상을 다음과 같이 결산한다.

---

24) Rolf Reißig: a.a.O., S. 95.
25) Hans Misselwitz: DDR. Geschlossene Gesellschaft und offenes Ende, in: Werner Weidenfeld (Hrsg.): Deutschland. Eine Nation - doppelte Geschichte, Köln 1993, S. 103-112, hier S. 111.
26) Claus Detjen: a.a.O., S. 109.

독일은 지난 16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했다. 그 결과는 정치, 일상생활, 가치관에서 나타난다. 통일독일은 서구화되었다기보다는 동구화되었고, 우경화되었다기보다는 좌경화되었으며,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회가 되었다기보다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사회가 되었고, 시장중심적인 사회가 되었다기보다는 국가중심적인 사회가 되었다.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관념, 가치관, 정치의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변화의 과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더 이상 오직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지 않고, 반대로 여러 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27)]

슈뢰더에 따르면 통일독일은 '동구화', '좌경화', '사회민주주의', '국가중심주의'라는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는 일련의 경향을 보여왔고, 동서독 사이에 가치관의 차이가 엄존하는 가운데서도 가치관 변화의 방향은 동독의 서독화에서 서독의 동독화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슈뢰더가 방대한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이르게 된 이러한 결론은 통일독일이 '서구화'되고, '우경화'된 '보수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사회로 변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비상한 주목을 요한다.
슈뢰더의 주장처럼 통일독일이 '변화된 공화국'이 된 근거로서 특히 세 가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독인의 가치관이 동독인의 가치관에 수렴하고 있으며, 둘째 동시에 동독과 서독의 가치관 차이는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동독인은 일종의 '가치공동체'로 결속되고 있고, 셋째, 통일 이후의 이러한 가치관 변화가 통일독일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서독 가치관의 수렴, '가치공동체' 동독의 탄생, 통일독일 정치지형의 변화 등의 현상을 검토한 후에,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자.

페터 슈나이더는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의 영향관계에 대해 "생활환경은 서독화되고, 생활감정은 동독화되고 있다"[28)]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생활감정의 동독화'는 「굿바이 레닌」,「존넨 알레」등 동독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서독 관객의 취향을 변화시키면서 통일독일의 영화계를 장악해가는 현상을 빗댄 것이지만, 사실 동독화되고 있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다. 서독인의 '의식' 또한 동독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 이후 서독인의 가치관은 점차 동독인의 가치관에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시장경제, 서독식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념, 국가의 역할, 자유와 평등의 선호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가치관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서독이 동독을 따라가는 경향이 뚜렷하다.[29)] 게다가 서독인이 느끼는 불안 심리마저도 동독인의 그것에 접근하고 있으며, 구동독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독인들에게 동조하는 서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서독의 가치관은 통일 이후 분명하게 동독의 가치관과 같은 방향으로 선회"[30)]한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에 있어서 서독인이 동독인을 따라가는 이러한 현상은 2000년을 전후하여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동에서 서로 향하던 가치관의 수렴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확연하게 전환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31)]

---

27) Klaus Schröder: a.a.O., S. 636.
28) Peter Schneider: Wie der Osten gewann, in: Der Spiegel, 48/2005, S. 176.
29) 이 논문 II-1 동서독 가치관의 변화 양상 참조.
30) Klaus Schröder: a.a.O., S. 602.
31) Vgl. Ebd., S. 610.

“동쪽의 이데올로기적 색깔이 서쪽으로 번져가는”[32]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하버드대학 교수 마이어는 통일 이후의 사회적 불안정과 불만에서 찾는다. “동독인들이 통일독일로 가져온 불안정성이 사회 전체를 사로잡고 있던 불만과 맞아떨어졌다. 1989년 이후 퍼져나간 멜랑콜리의 분위기 속에서 동독인들은 서독인들에게 불안정한 시대로 가고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33] 한편 데트옌은 통일독일에서 동독적 가치관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현상은 서독의 ‘정치적 태만’에 기인한다고 본다. “국가적 통일 이후에 우선적으로 경제적 과정에 집중한 것은 심각한 정치적 태만이었다. 기본법의 가치질서를 정치적으로 설명해줄 내용적 프로그램이 없었다. 정치적 마케팅도 없었다. 서독사회 자체가 자신의 가치의 토대를 스스로 충분히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34] 이처럼 동독적 가치관이 확산되는 현상을 동독인의 위협이나 서독인의 태만에서 찾는 일면적인 관점과는 달리, 라이시히는 동서독의 변화를 밀접한 상호 연관성 속에서 파악한다. “그 사이 분명하게 증명된 것은 동독의 변형과 서독의 변동은 모두 1989/1990년의 체제단절을 출발점으로 갖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두 과정이며, 한 쪽이 병합하고 지배할 경우라도 예상했던 사회와는 다른 사회가 생겨난다는 사실이다.”[35] 그는 동독과 서독의 변화의 출발점을 독일통일의 시점으로 보면서, 더 강한 사회라도 합병과 지배과정에서 의외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흡수당한 사회가 흡수한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다. “동독이 서독 및 통일독일을 이미 상당 정도 변화시켰다.”[36]

그러나 동서독의 가치관이 일정한 수렴 현상을 보인다는 말이 곧 동서독 사이에 가치관의 차이가 사라졌다거나 혹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동서독의 가치관 변화에서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동독과 서독 간의 가치관 차이는 사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보다도 더 크며, 여전히 그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37] 동독인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키워왔고, 공동의 의식과 가치 하에 결속해왔다. 동독인들은 오늘날 일종의 “가치공동체”[38]로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동독인들이 공유하는 가치는 ‘노동자적 사회’[39]라는 특수한 사회구성체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동독인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기억의 산물이다. 이러한 ‘동독적’ 가치들은 서독사회가 지니지 못한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동독의 ‘노동자적 사회’의 평등은 극히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다. 교육과 자격 수준은 높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공장 내의 ‘권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권력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행사했다. 동독사회는 높은 정치적 감각을 지닌 사회였다. 여성의 평등은 향상되었다. 또한 동독에서도 가치변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회적 다변화와 생활세계의 변화의 결과였다. [.....] 자신에 의해 시작되고 전개된 민주적 변혁의 경험을 가진 것은 바로 동독인들이었고, 이 변혁은 서독의 68세대들과는 달리 모든 사회계층의 의식을 각인했다.[40]

---

32) Elisabeth Noelle-Neumann,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7.03.1999.
33) Charles S. Maier: Das Verschwinden der DDR und der Untergang des Kommunismus, Frankfurt am Main 1999, S. 460.
34) Claus Detjen: a.a.O., S. 116.
35) Rolf Reißig: Die gespaltene Vereinigungsgesellschaft, a.a.O., S. 142.
36) Klaus Schröder: a.a.O., S. 550.
37) Vgl. Ebd., S. 507.
38) Rolf Reißig: Die gespaltene Vereinigungsgesellschaft, a.a.O., S. 86.
39) 볼프강 엥글러에 따르면 '노동자적 사회'란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하거나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이며, 노동이 모든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이다.(Vgl. Wolfgang Engler: Die Ostdeutschen. Kunde von einem verlorenen Land, Berlin 2000, S. 198f.)

이처럼 높은 교육수준, 생산체제 속에서 제고된 노동자의 위상, 높은 정치감각, 향상된 여성지위, 민주혁명의 전통 등 구동독은 사회주의통일당(SED)의 권위주의적 통치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장점을 지닌 사회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동독적' 가치가 통일독일 사회에서 확산되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가치공동체로서 동독은 통일독일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치유할 단초를 풍부하게 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독인의 가치관은 "고전적인 제3의 길"의 가치관에 가깝다.[41] 그것은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시장지향적인' 서독인의 가치관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동독의 '노동자적' 사회와 서독의 '시민적' 사회가 상이한 역사적 대척점을 이루고 있기"[42]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주의관, 자유와 평등의 선호도, 정의, 평등, 자유의 내용 규정,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컨데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선호도는 동독에서는 대략 70%대, 서독에서는 30-40%대로 나타나, 동독에서 서독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 이것은 '동독에 대한 향수어린 미화'나 '일당의 권력독점에 대한 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를 선호'하는 동독인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43]
통일 이후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져가는 이데올로기적 채색'은 또한 독일의 정치지형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간 유지되어온 안정적인 좌우균형의 서독형 정치구도가 좌파과반의 형국으로 재편된 것이다.

동독 유권자들이 정치적 스펙트럼 전체를 좌측으로 이동시켰다. 이것은 또한 개별정당의 강령논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때 좌파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많은 국가개입과 더 많은 재분배를 옹호하고, 개인의 위험과 개인적 책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함을 의미한다. 동독인들 다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각에 그 사이 많은 서독인들도 동조하고 있다. 접근의 과정이 서에서 동으로 진행되고 있다.[44]

이처럼 동독인들이 통일독일의 정치지형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치관이 "사회적이면서 민주적인 사회라는 고전적인 모델"[45]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 동독인들은 대체로 중도좌파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동독인의 12,4%가 자신을 극좌파로, 23,2%가 온건좌파로, 52.5%가 중도로 인식하는 반면 자신을 온건우파로 보는 동독인은 9%, 극우파로 보는 이는 2,8%에 불과하다.[46] 이처럼 좌파 성향의 유권자가 우파 성향의 유권자보다 3배 이상 많은 동독의 특수한 정치구도가 통일독일의 정치지형에 편입되면서 독일의 정치체제는 "동독의 충격에 의한 강력한 동요"[47]를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40) Rolf Reißig: Die gespaltene Vereinigungsgesellschaft, a.a.O., S. 87f.
41) 동독인들 다수는 의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양립가능하다고 보고, 자유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이념을 결합한 국가를 선호한다. (Vgl. Klaus Schröder: a.a.O., S. 492f.)
42) Rolf Reißig: a.a.O., S. 89.
43) Vgl. Ebd., S. 89f.
44) Klaus Schröder: a.a.O., S. 600. 또한 낮은 투표참여, 빈번한 정당교체, 정당보다 인물을 중시하는 태도 등 선거행태에 있어서도 서독이 동독에 동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Vgl. Ebd.)
45) Rolf Reißig: Anspruch und Realität der deutschen Einheit, a.a.O., S. 307.
46) Rolf Reißig: Die gespaltene Vereinigungsgesellschaft, a.a.O., S. 86.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독의 가치관이 동독의 가치관에 수렴하였고, 동독이 독특한 형태의 '가치공동체'로 변모하였으며, 정치지형은 좌파과반의 형국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세계화, 유목민화, 식민화 요인이다.

우선 서독의 가치관이 동독에 수렴되는 현상은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세계화의 굴레에 포섭된 통일독일 사회는 사회정의가 붕괴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으며, 구서독이 자랑하던 사회복지국가의 면모는 크게 훼손되었다. 자유에 대한 불신과 평등에 대한 요구가 통일 이후 갈수록 고조되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화의 현실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동독인 못지않게 서독인들 또한 피해자로 만드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과정'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복지국가에 대한 냉전'인 것이다.[48]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급속히 심화되는 현실 앞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서독인들이 보다 평등지향적인 동독인들의 가치관에 동조하게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동서독에서 공히 개입형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사회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좌파 우위의 정치지형이 형성된 것은 크리스토프 디크만이 묘사하는 바, '자본의 지배에 따른 국민의 유목민화' 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대자본의 시녀로 강등되고 있다."[49] 국가는 자본에 반대하는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자본주의적 논리의 결과를 개혁이라고 팔아먹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긴장은 고조되고, 계급적 분열은 심화되어, "국민은 산산이 쪼개지고, 계급이 귀환한다"[50]는 것이다. "우리는 뿌리 뽑힌 국민으로 변하고 있다. 패치워크의 이력이 정상이 되었다. 노동관계, 거주기간, 결혼은 짧아진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충성심도 짧아진다. 국민은 유목민화하기 시작한다."[51] 사회적으로 뿌리 뽑힌 채 유목민처럼 부유하는 국민을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의 권력을 제어하고 사회적 정의를 재정립할 개입형 국가인 것이다.

동독인들이 가치공동체로 결속하면서 점차 강한 좌파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또한 독일의 통일과정이 식민화 방식으로 진행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구동독의 경제와 사회를 식민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독 시민들에게 서독의 가치와 생활방식, 노동양식을 가능한 한 빨리 내면화하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식민지 지배자적 사고방식이다."[52] 이러한 식민화 테제에 동독인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53]은 동독인들이 가치공동체로 귀속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준다. 사실상 통일독일 사회에서 동독인의 처지는 이주민의 처지와 크게 다를 게 없어서, 그들에게 통일은 "스스로 인종적 자각을 하는 과정 Selbstethnisierung"[54]에 비견될 정도이다. 이처럼 서독이 동독을 식민화하는

47) Gerhard Ritter: Über Deutschland. Die Bundesrepublik in der deutschen Geschichte, München 1998, S. 15.
48) 김누리: 머릿속의 장벽. 통일 이후 동서독의 사회문화 갈등. 독일통일을 말한다 1권, 한울 2006, 50쪽.
49) Christoph Dieckmann: Rückwärts immer. Deutsches Erinnern, Berlin 2007, S. 238.
50) Ebd., S. 235.
51) Ebd., S. 240.
52) Peter Christ und Ralf Neubauer: Kolonie im eigenen Land. Die Treuhand, Bonn und die Wirtschaftskatastrophe der fünf Bundesländer, Berlin 1991, S. 216.
53) 동독인의 절반이 식민화 테제에 공감하고 있으며, 동독인의 2/3가 "서독인들이 동독을 식민화 방식으로 정복했다"는 진술에 동의하고 있다. (Vgl. Klaus Schröder: a.a.O., S. 394.)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결과 동독인들 사이에서 저항적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그들만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독특한 가치공동체로 발전한 것이다.

III. 기로에 선 통일독일과 한반도

"단순한 합병은 결코 통일이 아닙니다.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곳에서
약자가 사는 곳은 '문제 지역'이 되고 맙니다.
두 국가의 서로 다른 장점과 경험이 유익하게 사용되고
창조적으로 어우러지는 곳에서는
어느 한쪽도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피워낼 것입니다."
(폴커 브라운)[55]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25년, 오늘의 시점에서 독일통일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제 동서독 가치관의 변화와 수렴 현상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통일독일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해보자. 나아가 통일독일이 분단 한반도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짚어보자.

우선 서독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동독을 건설한다는 구상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전제된 청사진, 즉 동독지역에 서독을 똑같이 모방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청사진은 어쨌든 실현되지 않았다. 구조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서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고유의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혁신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분위기가 도처에서 감지된다. 독일통일은 흡수통일의 경우라도 "목적론적이고 일직선적인 적응과 동화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전제가 작용하는 고유한 동학을 지닌 과정으로 진행된다"[56]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이 '고유한 동학' 속에서 두 체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적 과정이라면, '추격과 적응의 시나리오'에 기초한 지금까지의 통일전략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독일통일은 동독체제의 와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존의 서독사회를 40년간 유지시켜온 '독일모델'의 종언을 의미한다. 통일 이후 독일모델의 제도적, 이념적 토대가 급격히 붕괴되었고, 그 결과 현재의 통일독일은 구서독과는 상당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 "성공적이었던 '구'서독도 오늘날 1990년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 있다. '새로운' 독일은 단순히 확장된 '구'서독이 아니다. 아무것도 과거와 같이 남아있는 것은 없고, 거의 어떤 것도 그것이 마땅히 되어야할 형태로 되지 못했다."[57] 이제 "동서독의 체제대립의 종식과 동독의 종말과 함께 구서독의 종말도 시작된"[58] 것이다.

지금 독일은 역사적 분수령에 서 있다. 독일통일, 유럽통합, 세계화의 시대적 격랑 속에서 기존의 '독일모델'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통일독일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 힘겹게 고투하고 있다.

---

54) Klaus Schröder: a.a.O., S. 634.
55) 김누리 외: 변화를 통한 접근. 통일주역이 돌아본 독일통일 15년. 통일독일을 말한다 2권, 한울 2006, 186쪽.
56) Rolf Reißig: Anspruch und Realität der deutschen Einheit, a.a.O., S. 308.
57) Ebd., S. 308.
58) Ebd., S. 311

“지금까지의 독일모델은 동독인들에게도 예전의 광채를 잃었다. 통일독일은 정치, 경제의 통합과 세계화와 유럽화의 결과 새로운 분수령에 서 있다. 대안적 발전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혹은 사회복지국가적인 개념과 가치관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통일독일은 근본적인 변화 과정 속에 있다.”[59] 이러한 위기와 변화의 정세 속에서 향후 통일독일의 미래는 무엇보다도 목전에 닥친 두 가지 과제의 해결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장벽 붕괴 이후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에도 동서독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머릿속의 장벽’을 허물고 동서통합을 이루어내면서, 이를 넘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견인할 문화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위기에 처한 ‘독일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안과 이념적 패러다임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데 동독인 특유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독정체성은 동독인의 문화적 기억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성찰적 정체성’으로서 ‘독일모델’을 혁신하는데 유용한 구실을 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동독정체성은 차단과 배제의 정체성으로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내장하고 있다. “동독정체성의 형성은 동시에 차단막을 품고 있다. ‘우리와 저들’이라는 구도는 항상 어디에서나 배제와 차단의 계기를 지닌다. 동서독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특히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다른 나라 출신의 동료시민에 대한 차단과 배제는 통합을 가로막는 요소이다.”[60] 이러한 ‘동독정체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동독인들 특유의 ‘비판적 정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동독지역에서 관찰되는 극우주의 정치성향의 확산은 동독정체성이 오도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동독 정체성의 형성은 동서독의 통합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단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상으로 비치는 것이 중기적으로는 참여와 평등한 통합으로 가는 다리임이 밝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은 결국은 무엇보다도 동독인들의 자기주장과 성장한 우리의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통일독일의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러한 강화된 자아와 우리의식 없이는 문화적 정신적 해방과 통합으로의 진보는 상상하기 힘들다.[61]

또한 ‘독일모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동독인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일례로 사회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사회정의와 분배를 중시하는 동독인의 평등지향적 성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세계의 비참’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동독이 지닌 “문화적 이점”[62]임이 분명하다. 동독인들은 특유의 사회적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조화시키는 아방가르드로서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을 창안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유와 평등은 동일한 기원에서 나온 근대의 요구이고, 또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 요구이다.

---

59) Ebd., S. 105.
60) Ebd., S. 96.
61) Ebd.
62) Rolf Reißig: Anspruch und Realität der deutschen Einheit, a.a.O., S. 306.

사회적 평등이 공산주의 하에서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확장된 것이 사실이라해도, 거기서 평등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거꾸로 자유에 복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출신과 현재의 위치로 인해 동독인들에게 부여된 어떤 고유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등과 자유를 서로 화해시키는 과제일 것이다.[63]

이처럼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새롭게 조화시킴으로써 동독이 사회주의의 전통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부활시킬 '신사회주의'의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동독에서 사회주의를 여전히 독일의 기본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보는 정서가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지배하는 한, 동독은 새로운 좌파를 위한 모판이 될 것이다."[64]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새로운 좌파로서 동독인들은 통일독일 사회를 개혁하는 아방가르드로 부상할지도 모른다. "동독인들이 동독 특유의 주제인 노동-정의-인정을 통일독일 전체의 개혁 테마이자 미래테마로서 보다 강력하게 주제화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실천해나간다면, 동독인들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자, 경고하는 자, 기껏해야 요구만하는 자로 인식되지 않고, 전독일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 개혁자, 선구자로 인식될 것이다."[65]

통일독일 25년은 분단의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통일 이후의 가치관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동서독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문화통합을 이루려면 쌍방의 동시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통일이 동서독 사회를 동시에 변혁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지 않고, 동독이 서독 모델에 동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통일독일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통일 이전보다 오히려 약화되었다. 오늘날 독일이 안고 있는 제반 갈등과 모순은 일차적으로 여기서 잉태된 것이다. 또한 동시변혁은 '동서독의 문화적 융합'으로 이어져야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 개인적 능력과 사회적 정의,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의미 있는 결합"[66]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독인이 중시하는 자유, 개인적 능력, 대의민주주의의 가치가 동독인이 강조하는 평등, 사회적 정의, 직접민주주의의 가치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야말로 통일독일이 추구해야할 미래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도 통일을 북의 변화와 남의 변혁을 동시에 실현할 기회로 인식하는 탄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통일은 언제나 재통일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가야할 신통일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남한 자본주의를 혁신하고, 북한 사회주의를 개혁하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67]

둘째, 통일과정은 다양한 사회적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동독이 서독의 체제와 가치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방식으로 통일과정이 진행됨으로써 동과 서 어디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실험은 부재했다. 통일이 쌍방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고 새로운 국가적 전망을 열어줄 수 있는 사회적 실험과 모색의 과정이 되지 못한 것이다. "출발사회의 제도적 인적 잠재력은 가능한 연결지점이 아니라 오직 시급히 극복되어야할 유산으로 간주되었다. 통일과정

63) Wolfgang Engler: Die Ostdeutschen als Avantgarde, a.a.O., S. 33.
64) Claus Detjen: a.a.O., S. 115.
65) Rolf Reißig: Die gespaltene Vereinigungsgesellschaft, a.a.O., S. 110.
66) Rolf Reißig: Anspruch und Realität der deutschen Einheit, a.a.O., S. 306.
67) 이해영: 독일통일 10년의 정치경제학, 푸른숲 2000년, 28쪽.

은 출발사회와 도착사회의 매개로서, 하나의 과도기사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즉 모색과 실험의 과정으로서 이해되지 못하고, 동독이 서독에 단순히 동화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서독에 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68] 흡수통일로 인해 '동독과 서독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지양하고, 두 사회의 진보적인 요소들을 계속 발전시키며, 통일을 통해 사회적 발전과 해방의 새로운 질을 창출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그 결과 "동독은 독일경제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신의 실험장"[69] 으로 전락했다. 남은 정상사회요, 북은 비정상사회라는 식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한, 그리고 이러한 편협한 이분법에 기초하여 통일을 북한의 일방적 동화과정으로만 인식하는 한, 통일과정을 새로운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창조적 실험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한 독일의 실패를 우리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독일통일은 두 개의 이질적인 사회가 통합될 때 차이에 대한 관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동독 정체성이 강화되고, 동서독 가치관의 차이가 엄존하며, 동독인과 서독인 간에 틀에 박힌 타자상이 고착되는 현상은 상대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사실 장기간 대립해온 두 이질적인 사회가 결합될 때 가치관, 정체성, 자아상, 타자상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문화적 정신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70] 독일의 경우 이러한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오용함으로써 동서독 간에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68) Rolf Reißig: Anspruch und Realität der deutschen Einheit, a.a.O., S. 311.
69) Klaus Steinitz (Hrsg): Vereinigungsbilanz. Fünf Jahre deutsche Einheit, Hamburg 1995, S. 65.
70) Rolf Reißig: Die gespaltene Vereinigungsgesellschaft, a.a.O., S. 12.

남북 불균등 발전의 폐해와 민족적 연대 방안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문제제기

미국 국가정보자문회의(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는 2000년 12월에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15' 보고서에서 2015년에는 남과 북이 통일하고 동북아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리라고 전망했다(NIC, 2000).

NIC 보고서는 한국이 2015년이면 통일이 되리라고 전망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된 2000년에 남북정상 회담이 이뤄지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사실에 주목하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낙관적 분석들이 적지 않았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으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때는 물론,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으로 10.4선언이 발표되었을 때도, 2009년 미국에 오바마 정권이 들어설 때도 그랬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 시기에도 '2013년 체제'라는 담론(백낙청, 2012)이 희망적 관측을 담고 한국 지식사회에 퍼져갔다.

하지만 NIC 전망과 달리 실제 2015년의 남북 관계는 15년 전 정상회담을 할 때의 상황에 견주어 되레 악화되었고 충돌 위기 상황까지 맞았다. 정치군사적 상황만 후퇴한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지만, 2000년 남북 정상이 공동선언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은 전혀 나아질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과 북 사이에 경제력 차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2015년 12월 나온 '201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명목 기준)은 34조 2,360억 원으로 남한(1,496조 6,000억원) 경제규모의 2.3% 수준이다. 남한 경제 규모는 1997년 북한의 31.3배 수준이었으나, 2001년 36.0배, 2007년 41.9배, 2014년 43.7배로 북한과의 차이를 갈수록 더 벌려가는 모양이다. 1인당 GNI는 남한 2,968만원, 북한 139만원으로 21.4배 차이가 났다.

남과 북의 불균등 발전을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이라는 흡수통일 정책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문제는 통일대박론이 선언만 있을 뿐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통일대박론은 '대박'과 달리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민족적 연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미국 NIC가 2012년에 발간한 'Global Trends 2030'에서는 남북통일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팽팽한 교착상태가 빚어지며, 한국은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을,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년에는 한국이 2015년에 통일되리라고 보았던 미국 국가정보자문회의가 2030년에도 남북 사이에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IC, 2012).

주관적 희망과 예단으로 제시하는 낙관적 통일 전망에서 벗어나 분단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 이 글은 남북의 불균등 발전을 냉철하게 짚고, 그에 근거해 민족적 연대 방안의 실마리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2. 불균등 발전의 개념과 이론

1945년 8월 남북이 분단되고 새로운 세기를 맞기까지 남과 북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큰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에 큰 세계적 변화는 분단의 한 축이었던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이다.

중국이 1978년 이후 시장개혁에 나서고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에 이어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는 지구의 지배적 체제로 보편화했다.

자본주의가 세계를 통합하면서 체제를 위협하는 대안이 약해지자 자본주의의 특성은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은 끊임없이 경쟁한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자본이 다른 자본보다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은 필연이다. 자본은 축적은 물론, 생산을 더 효율화하기 위해 이윤의 일부를 쉼 없이 투자해야 한다.

자본의 경쟁은 한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불균등 발전의 폐해를 빚는다. 더구나 한 사회, 한 국가 내부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자본의 증식 욕망은 출발부터 세계를 무대로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줄기차게 넓혀왔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경쟁의 결과로 자본이 집중되며 독점자본이 등장한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도 경쟁은 멈추지 않는다. 독점자본의 위치를 노리는 자본이 언제나 어디서나 있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폐해도 그만큼 클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를 '불균등 발전'으로 분석한 선구적 저작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이다. 그 뒤 불균등 발전은 경제학의 '법칙'으로 논의되어왔다. 사전적 의미로 불균등 발전의 법칙(law of uneven development)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기업)간, 생산 부문간, 국가 간의 발전이 불균등하게 진전되는 법칙"을 이른다.

레닌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영국에서 확립된 자본주의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① 생산과 자본 집적의 고도의 발전에 기초한 독점의 형성 ②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으로서의 금융자본의 출현과 금융과두제의 성립 ③ 상품수출과 구별되는 자본수출의 역할 증대 ④ 국제 독점체에 의한 세계의 경제적 분할 ⑤ 열강에 의한 세계의 영토적 분할의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Lenin, 1916).

레닌의 독점자본주의, 곧 제국주의 분석이 지닌 타당성은 2차 세계대전의 참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카우츠키가 초제국주의(Ultra-imperialism)론을 전개하며 제국주의들 사이에 이해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망한 분석과 달리 독점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수천만 명을 살상하는 전쟁이 1차, 2차 세계대전의 현실로 나타났다.

그런데 1945년 이후 열강에 의한 세계의 영토적 재분할이나 과거와 같은 열강들 사이의 군사적 대결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은 현실 적합성을 점차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최신 발전 단계를 '제국주의'로 규정한 레닌이 독점자본주의의 역사적 지위를 "기생적이고 부패한 자본주의"로 분석하고 "사멸하는 자본주의"라고 단언한 예측은 21세기인 오늘날에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서면 경쟁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 규모로 벌어지고, 세계시장에서의 자본 사이의 경쟁이 국가를 매개로 한 자본들의 경쟁으로 전개되면서 군사적 개입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다름 아닌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지의 보수적 칼럼니스트 프리드만(T. Friedman)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1999년 3월 28일자). 프리드만은 "세계화 과정의 지속은 우리 국익에 최우선의 과제"라며 "세계화는 곧 미국"이라고 단정 지었다. 이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주먹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맥도널드는 F-15 제조업체인 맥도넬 더글러스 (McDonnell Douglas) 없이는 번창할 수 없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기술을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주먹은 미 육군과 공군, 해군과 해병대"라고 강조했다.

남북의 불균등 발전을 논의하면서 자본주의 독점단계의 제국주의 성격을 새삼 조명하는 이유는 남과 북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가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불평등한 위계구조로서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이며, 구체적으로 미 제국주의의 패권적인 세계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정성진, 2003).

물론, 레닌의 불균등 발전에 근거한 제국주의론이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식은 이어가되 개념과 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미 개념의 재정의가 이뤄지고 있다. 캘리니코스는 "자원과 영향력과 영토를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 하며, 외교적으로도 서로 대결을 벌이고 더 극단적으로는 군사적 대결"을 벌이는 지정학적 경쟁에 주목하고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이 자본주의의 경쟁 논리에 통합되고 종속되는 현상"으로 제국주의 현상을 새롭게 풀이했다.

제국주의는 "제 나라 자본가계급을 온갖 수단으로 지지하는 중심국들이 세계경제를 지배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주변국에 대해 지배와 권력을 행사하는 세계체제"라거나 "패권 국가들과 약소국들의 관계에서 군사적 정복과 경제 제재의 위협, 다른 나라 정부와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힘의 행사"라는 정의도 나왔다(Tabb, 2001: 123). 제국주의 중심국들이 주변국이나 약소국을 지배하기 위해 이뤄지는 패권 경쟁 또한 불균등 발전에서 비롯한다.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의 경제성장 속도가 기존 패권국가의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른 현상이 지속될 때 패권의 부침으로 이어질 수 있다(하영선, 2007). 불균등 발전과 제국주의적 패권 경쟁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맞닿아 일어난다.

'제국주의'는 국제학계에서 '시민권'을 지닌 학문적 개념이지만, 한국 학계 안팎에서 그것은 여전히 낯설고 그것을 미국과 연관 지어 논의하기는 더 그렇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떠나 학문적 대화와 설득력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패권주의'(hegemony)로 개념화—사실 그렇게 판단하며 그 말을 바꿔 쓰려는 시도야말로 '제국주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자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역으로 입증해준다—할 수도 있다.

제국주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 또는 그것을 패권주의로 부르든 21세기의 남과 북 모두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국들이 세계경제를 지배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주변국에 지배와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 속에 놓여있다는 현실 인식, 그 세계 체제는 불균등 발전으로 인해 '패권 국가들과 약소국들의 관계에서 군사적 정복과 경제 제재의 위협, 다른 나라 정부와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힘의 행사'가 벌어지는 무대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불균등 발전과 패권주의(또는 제국주의)를 개념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미국 NIC가 2015년

에 남과 북이 통일하리라고 본 2000년 전망이 왜 어긋났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다. 남북이 2015년에 통일되리라고 전망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을 시기에 미국은 대선을 치렀고 2001년 1월 조지 부시 정권이 들어섰다. 2009년 1월까지 8년 동안 집권한 부시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화해정책을 견제하고 나섰으며 북을 이라크, 이란과 더불어 '악의 축(Axis of Evil)'국가로 규정했다.

미국 부시정권은 북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몰아세우고 '체제 전환'을 거론하며 8년 집권 내내 적대적 정책을 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부시의 적대적 정책과 크게 다르리라 기대했지만,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남쪽은 이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대결주의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었다.

미국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과 그에 동조한 남쪽 내부의 반북주의 세력으로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시점에서 점점 후퇴해갔다.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에 근거해 민족화해와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숙의하고 실행에 옮겨가야 할 시기에 미국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통제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듯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초강대국으로서 21세기에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해 나가려는 목표를 지닌 패권주의 국가라는 명확한 사실을 모든 남북 관계를 논의할 때 전제해야 한다. 남북의 불균등 발전을 논의하는 데도 미국의 패권주의는 배제해서는 안 될 상수로 존재한다. 앞으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이 북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3. 남북 불균등 발전의 세 층위와 폐해

남북의 불균등 발전을 논의할 때 흔히 남과 북 사이의 불균등 발전에 국한한다. 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불균등 발전에만 주목할 때, 현실을 파악하거나 전망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에 따른 실천도 변화를 추동해내지 못할 수 있다. 불균등 발전 개념과 이론으로 남북을 분석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층위(level)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과 북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한반도(조선반도) 사이에 불균등 발전, 남과 북 사이에 불균등 발전, 남과 북 각각 내부의 불균등 발전이 겹쳐있다. 세 층위의 불균등 발전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폐해를 빚고 있다.

1)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의 불균등 발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한반도(조선반도) 사이에 불균등 발전은 20세기 전반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정책에서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제국주의가 노골적인 정치군사적 행태로 나타났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조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휘둘리며 사회구성원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쟁에 내몰렸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제국주의 또는 패권주의의 규정력은 앞서 불균등 발전의 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강력하다. 남쪽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견고하게 자리 잡았고, 북쪽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채

북미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계속 이어가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빈약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분단 이후 내내 늘어난 남과 북의 군사비는 21세기의 두 번째 10년대에 들어서서도 남과 북 모두의 경제발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 남과 북 사이의 불균등 발전

남과 북 사이에 불균등 발전은 들머리에 인용한 통계청의 2015년 자료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연결된 남쪽과 '자립경제'를 내세운 북쪽 사이에 가장 큰 '불균등'은 대외 거래 부문에서 나타난다. 2014년 북의 무역 총액은 76억 달러로, 남(1조 982억달러)의 144분의 1에 그쳤다. 수출에선 181.2배, 수입에선 118.1배 격차다. 무역만이 아니다. 산업생산 능력에서도 불균등 발전의 차이는 크다. 자동차 생산량은 남이 452만 5,000대, 북이 4,000대로 1,131.2배다. 철강 생산량도 남이 7,154만 3,000톤, 북이 122만 톤으로 58.6배다. 발전 설비 용량에서도 북은 725만 3,000㎾이고 남은 9,321만 6,000㎾으로 13배의 차이가 난다.[71]

남북 사이에 불균형발전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일찌감치 공론화되었다. 심지어 노태우 정부조차 1992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맞춰 발표한 '남북교류협력부문계획'에서 남북 균형발전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당시 통일원은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단기적으로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의 정착과 남북한 동포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사회공동체의 실현 및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통일원, 1992).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은 2000년 남북공동선언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공식 명문화됐다. 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불균등 발전은 두 정상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3) 남북 내부의 불균등 발전

남과 북 각각 내부의 불균등 발전은 남북 사이의 불균등 발전 못지않게 심각하다. 북쪽에 비해 경제규모가 43.7배라는 남쪽 경제는 '헬 조선'이나 '대한망국'은 물론 '흙수저와 금은동 수저'라는 말들이 젊은 세대 사이에 대량 유포되고 있을 만큼 부익부빈익빈이 빚어내는 민생 위기를 맞고 있다.[72]

남쪽사회는 10년 넘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로, 연간 10만 명 중 약 29.1명(세계 평균은 12.4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출산율, 노동시간, 사회복지를 비롯한 삶의 거의 모든 수준에서 남쪽 사회는 선진 자본주의 체제와는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71) 북이 앞서는 것은 국토 면적과 일부 천연 자원 분야였다. 국토 면적은 북한(12만 3,138㎢)이 남한(10만 284㎢)보다 1.2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생산량(남 174만 톤, 북 2,709만 톤)과 철광석 생산량(남 69만 톤, 북한 548만 톤)은 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철도 총연장도 북(5,302㎞)이 남(3,590㎞)보다 길었다. ("남북 경제규모 44배 차이… 격차 점점 벌어져" 한국일보 8면1단 2015년 12월15일).

72) 2016년을 맞아 남쪽의 거의 모든 신문들이 진보든 보수든 수구든 '경제위기'를 의제로 설정하고 나섰다. 2016년1월1일자 신년호에서 '통일 대박론'을 무분별하게 추종하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들이 경제 위기를 부각했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로 청년들의 문제를 의제로 설정했다.

그럼에도 남쪽의 정치경제 체제를 주도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세계적 성공모델'로 확신하거나 홍보하고 있으며 남쪽 체제로 북쪽을 흡수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쪽을 남쪽 자본의 시장, 곧 불균등 발전의 내부 식민지로 삼겠다는 자본의 논리가 그것이다.

내부의 불균등 발전은 자본주의를 도입한 남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인 북쪽도 전쟁 직후 농업 집단화와 중공업 우선의 불균등 발전전략을 내걸었다(김세균, 2006:90). 과도한 명령경제 체제가 이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에는 대규모 '아사 사태'를 맞았다.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지만 다수 민중(인민)의 삶은 여전히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73]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2015년 10월 발표한 세계식량농업백서에 따르면 이북 도시와 농촌의 빈곤 차이가 중국이나 몽골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크다. 북 어린이 4명 중 1명이 영양부족상태인 저체중으로 동아시아에서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74]

더 큰 문제는 불균등 발전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은 법으로 "량정기관과 연료공급기관은 식량과 연료의 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주민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제때에 정해진 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바로 이어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에 공급할 식량과 연료를 《수도폰드》로 계획화하고 우선적으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시관리법, 36조).

그 뿐이 아니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평양시의 상업, 급양, 편의 봉사부문에 필요한 설비, 상품, 원자재의 보장체계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먼저 공급하여야 한다"(37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45조)며 수도인 평양에 대한 "우선"적 특권을 입법화 해놓았다. 제1조에 선언했듯이 "평양시는 혁명의 성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도 평양과 '비평양 지역'이 서로 다른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불균등 발전이 심각하다.[75] 남쪽의 서울과 비서울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평양과 비평양 사이에 불균등이 엄존하고 있다.

---

73) 경제 위기를 인식한 김정은 제1비서는 2016년 1월1일 신년사에서 인민경제를 가장 강조하고 나섰다. 신년사는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 내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 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우리 당은 인민생활 문제를 천만가지 국사 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74) 이북의 농촌 지역에서 4명 중 1명인 27%의 어린이가 저체중인 반면, 도시는 7.6명에 1명인 13%이다(연합뉴스, 2015년10월15일 "북, 도시농촌 빈부격차 크다"). FAO는 동아시아 식량부족 상태 국가로 북, 중국, 몽골을 꼽으며 이 가운데 북의 상태가 가장 나쁘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도시 1.3%, 농촌 4.4%이고, 몽골은 도시 2.8%, 농촌 7.3%다.

75)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인 월간 런민원자이(文摘)는 2014년 12월 "평양 시내에서 도보로 30분 거리 안에서는 24시간 전기를 쓸 수 있다. 1990년대 대기근 기간에 평양에서 아사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도 평양 위주로 자원을 분배한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며 북한의 지방 주민이 평양 사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평양몽(平壤夢)"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출신의 북 연구자 안드레이 란코프에 따르면 북은 '새로운 부르주아계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빈부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평양과 비평양의 차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북 지도부가 평양을 '혁명의 성지'로 인식하는 한, 평양과 비평양 사이에 불균등 발전이 멈출 가능성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4.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와 민족적 연대

1)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

남북 불균등 발전의 세 층위는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거나 단계별로 작동하지 않는다. 세 층위는 서로 얽혀 상위 층위가 하위 층위를 포함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불균등 발전의 세 층위는 3중구조(Triple structure)로 개념화할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의 불균등 발전이 상층위을 이루고 남과 북 사이의 불균등 발전이 중층위, 남북 내부의 불균등 발전이 하층위다. 하지만 세 층위는 경직된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불균등 발전이 상층위, 중층위, 하층위 순으로 피라미드식 구조를 이루지 않는다는 뜻이 다.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는 <그림1>에서 보듯이 상층위인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의 불균등 발전이 중층위와 하층위의 불균등 발전을 두꺼운 테두리(frame)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과 북 사이의 불균등 발전이든 남쪽 내부와 북쪽 내부의 불균등 발전이든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의 불균등 발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상층위인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규정력은 남쪽의 자본주의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1950년대에 이승만 정권이 부패로 경제발전에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남북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커지자 당시 제3세계의 경제발전에서 소련식 모델과 경쟁하고 있던 미국은 남쪽의 경제성장에 적극적인 관여를 한다. 1961년 당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국가안보 고문으로 지명된 로스토우는 그의 동료 로버트 코머(Robert Komer)와 남쪽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 CIA의 국가평가국에서 오래 활동한 코머는 1961년 3월15일 '한국에서의 행동'이라는 비망록에서 코머는 "다음 10년간 미국이 주력할 주요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1. 단기 속성개발 2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창출과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을 지도 감독하는 일에 미국이 정력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록했다(Cumings, 1997). 두 달 뒤 한국에선 쿠데타가 일어났고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을 강하게 추진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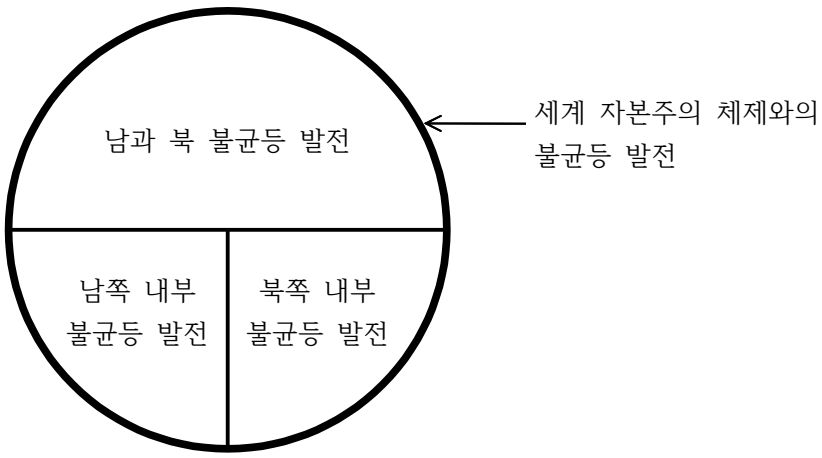

그림1. 남북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

남쪽의 경제성장이 반드시 미국 때문이라고 분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시 북쪽의 경제성장이 괄목할 만큼 실현되지 못했다면, 미국은 남쪽의 경제성장에 큰 이해관계를 갖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박정의 정권에게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종용했고, 결국 일본의 차관을 받았다. 미국 대통령의 핵심참모 로스토우와 코머의 비망록은 미국 자본의 이해관계가 남과 북의 불균등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그것이 남쪽 내부의 불균등 발전을 어떻게 빚어냈는지를 유기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역사적 문건이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남북 최고책임자가 합의했음에도 남과 북 사이의 불균등 발전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사실에서도 3중구조에서 세계적 층위의 강력함을 추론할 수 있다.

남북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는 세계자본주의와의 불균등 발전이라는 두터운 '외피'가 '남과 북 불균등 발전'은 물론 '남쪽 내부 불균등 발전'과 '북쪽 내부 불균등 발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1>로 표현할 수 있다.

남북의 분단현실을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 개념으로 파악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 가지 층위가 얽혀있는 3중구조를 풀어가지 않을 때, 최소한 3중구조의 외피인 상층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때, 남과 북 사이에 논의되거나 추진되는 통일은 가능하지 않으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내온 제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합의는 하층위의 불균등 발전, 곧 남쪽과 북쪽 내부의 불균등 발전을 풀어가려는 장기적 과정을 전제해야 한다.

셋째, 3중구조의 상층위인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3중구조 해결의 가장 근본적 방안은 하층위인 남쪽 내부와 북쪽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2) 통일인문학과 통일민족경제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를 인식할 때 남과 북 내부에서 불균등 발전에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인식과 실천 의지를 갖춘 주체가 시대적 요청이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제도적 통일 방안을 찾아온 기존의 통일 담론과 달리 사람의 문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하다.

남과 북의 사회구성원들이 통일에 당위론을 펴면서도 실제로는 무관심이나 거부감까지 보이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통일 담론들이 "사람다운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와 큰 상관이 없는 체제·이념·제도의 차원에서 통일을 주로 이야기해 왔기 때문"이다(김성민, 2015). 따라서 통일 담론은 무엇보다 분단으로 빚어진 고통에 주목하고 "지금 당장의 고통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차원의 사유가 필요하다(이병수, 2011).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벗어나 분단의 고통과 아픔을 해소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인문학의 논리로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를 볼 때 가장 중시해야 할 곳은 하층위다. 남쪽 내부의 불균등 발전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민중과 북쪽 내부의 불균등 발전으로 고통 받는 대다수 인민이 3중구조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남과 북은 분단과 경쟁체제로 각각 서로를 배제하며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두 극단적인 체제를 이어왔다. 서로 타자성을 인정하며 고통 받는 사람들을 우선에 두는 통일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다.

3중 구조를 해결하는 과제는 불균등 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족적 연대를 이루는 방안과 이어져있다. 연대(solidarity)는 각 개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며 결합한다는 점에서 단결과 차이가 있다. 남과 북의 연대는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라기보다 둘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둘을 둘로 놓아두지 않고 함께 결합시키는 것이다. '단결'보다는 통일을 만들어 간다는 관점 속에서 '차이의 연대'를 사유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때 민족적 연대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 기획적 창조행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박영균, 2015). 앞서 분석했듯이 통일은 남쪽과 북쪽 내부의 불균등 발전을 풀어가려는 장기적 과정을 전제하기에 더욱 그렇다.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로 남쪽은 극단적인 시장경제 체제(신자유주의 체제), 북쪽은 가장 극단적인 계획경제 체제(주체경제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명령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남과 북의 차이를 인정할 때, 일차적으로 남쪽 내부의 불균등 발전과 북쪽 내부의 불균등 발전을 극복하겠다는 남북 각각의 주체적 역량이 중요하다.

문제는 남쪽과 북쪽 모두 지배적 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관계다. 남쪽은 수출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근거한 자본이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경제·문화를 주도해나가고 있고, 북쪽은 명령경제 체제에 근거한 당과 행정 관료들이 경제와 정치·사회·경제·문화를 주도해나가고 있다.

연구자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가 상극에 가까운 남과 북을 통일하는 하부구조로서 '통일민족경제'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76)]

인구가 7,500만이 넘고 북쪽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며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통일민족경제는 비현실적 몽상이 아니다. 남북을 아우르는 경제권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06)만의 구상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을 분석한 경제학자 조동호와 이상준도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으로 제시했다. 그랜드 디자인에서 남북경제의 균형발전은 "공간적인 측면의 지역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부문 간의 균형발전"을 의미하며, "성장이 집중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는 경제와 환경의 균형적 발전"이다(조동호·이상준, 2009:142). 그랜드 디자인은 남과 북의 통합적 발전전략의 분야별 과제로 '한반도 국토 발전의 기본구도'를 수립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설정, 자연자원의 활용과 보전 및 관리, 정주환경의 관리, 인적 역량 육성, 제도적 기반과 조달을 꼽고 있다. 핵심전략으로는 핵심성장 동력의 육성과 산업벨트 구축, 생태자원 벨트 구축,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의 육성, 개방적 제도와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 네 가지를 제시했다(조동호·이상준, 2009:147~170).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은 건축학자 김석철의 국토 균형발전 구상에서도 나타난다(김석철,

76) '통일민족경제' 개념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2006년 발간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에서 처음 제시됐다. 통일민족경제는 현재의 남과 북이라는 '지역경제'를 단순히 합치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 역사에서 남과 북을 아우르는 경제발전 구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현실의 연장선에서 남과 북의 경제발전이 지닌 한계에 주목한 통일민족경제론은 통일을 실제로 이루려면 한반도(조선반도) 경제권에 대한 총체적인 구상을 제안했다. 통일민족경제의 비전 아래서 각각의 지역 경제가 재편되고 수렴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일민족경제 개념은 그 뒤 '남북통일의 하부구조'로 재정의 되었다(손석춘, 2014). 박현채에게 민족경제론이 "민족주의운동의 경제적 기초"라면, 통일민족경제론은 '통일운동의 경제적 기초'이다. 남북통일의 하부구조로서 통일민족경제는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되 박현채의 핵심적 문제의식인 '민중의 생활상의 요구'와 '경제잉여의 배분에서 민중의 참여 확대'를 통일의 지평까지 확대해서 살려내는 개념이다.

2013). 김석철은 남북한 전체의 균형발전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 공동의 프로젝트로 '두만강 하구 다국적도시'를 제안했다.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중국 동북3성의 중공업과 농축산업이 얽힌 두만강 하구의 지리적 이점에 주목한 그는 두만강 하구가 중·일·러 3국과 남북한 모두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에너지·공산품·물류·관광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 동해의 블루오션으로 키워낼 다채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동서관통운하와 백두대간 에너지도시'는 한강 하구와 함경도 원산을 추가령구조곡을 이용한 운하로 잇겠다는 '동서관통운하'계획은 물 부족과 에너지 고갈 문제를 각각 백두대간의 물과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로 해결하자는 정책이다. '에너지 운하'를 따라 금강산 부근에 도농복합 도시, 철원고원에 에너지도시, 한강 하구에 디자인도시를 세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동호·이상준의 연구와 김석철의 제안 모두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과 2012년 대선후보들의 통일정책을 각각 염두에 두었기에 구체적이다. 통일민족경제는 남북을 아우르는 경제권 구상이라는 점에서 그랜드 디자인과 성격이 같지만, 남쪽의 신자유주의 경제를 넘어서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77]

통일민족경제는 흡수통일론의 하부구조인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체제'와 다른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상하기에 불균등 발전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중시한다. 남과 북이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로 통일민족경제를 구현해나갈 때 남쪽은 불균등 발전을 심화해온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에 맞설 내부 토대가 분단 체제일 때보다 훨씬 튼실해진다. 북쪽 또한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압박하고 있는 '경제봉쇄'를 넘어설 수 있다.

통일민족경제는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불균등 발전으로 인한 남쪽 민중과 북쪽 인민의 고통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 남과 북의 7500만 인구를 기반으로 균형 발전을 일궈갈 주체를 사유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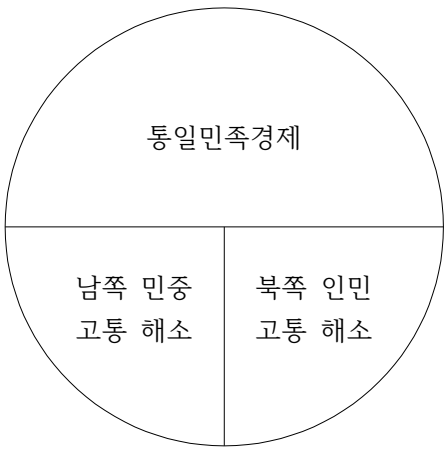

그림2. 3중구조의 대안: 통일민족경제

<그림2>의 통일민족경제는 <그림1>의 3중구조와 달리 규정력을 갖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외

77) 통일민족경제는 노동의 창조성을 성장 동력으로 한 '노동중심 경제'로 기업 경영에 노동자의 전면 참여와 금융 공공화를 뼈대로 하며, 남쪽의 전자 응용기술과 북쪽의 위성발사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첨단산업의 공동개발을 제안한다(손석춘, 2014).

피가 두껍지 않다. 남과 북을 아우른 경제권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교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통일이 과정이라는 통일인문학의 명제에 근거하면, 통일민족경제는 남쪽 민중과 북쪽 인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는 과정이 곧 형성 과정이다.

현 단계에서 통일민족경제의 주체는 남쪽의 수출대기업중심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불균등 발전을 확대해나간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담당해야 한다. 당과 행정관료 중심의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북쪽 명령경제 체제에서 불균등 발전의 3중 구조를 주체적으로 풀어갈 역량이 형성되기는 아무래도 남쪽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가 빚어내는 폐해를 벗어나려면 3중구조의 각 층위와 조응하는 민족적 연대가 필요하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민족적 연대가 중층위 중심으로 논의되었지만, 중층위의 해결을 위해서도 하층위는 물론 상층위의 해결이 필요하다.

한반도(조선반도)에 20세기 전반기는 일본제국주의의 규정력이 압도적이었다면 1945년 이후 후반기는 미국의 패권주의 규정력이 강력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일본은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인적·물적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한반도(조선반도)의 이익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21세기인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은 단연 미국이다. 6자 회담의 틀로 남과북에 영향을 끼치는 특정국가의 패권주의를 중화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 중화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과 미국 사이의 대화와 국교정상화가 불균등 발전을 해결하는 우선적 방안이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통일민족경제가 형성되어갈 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는 동아시아지역공동체의 형성도 추동해갈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층위의 불균등 발전이 하층위의 그것과 현실적으로 이어져있다는 점이다. 그 구조를 풀어가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상적으로는 남쪽의 극단적인 시장체제와 북쪽의 극단적인 명령체제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민족적 연대를 형성해 옳다. 극단적인 시장체제가 빚은 무분별한 개방과 극단적인 명령체제가 빚은 폐쇄가 남과 북 각각에 불균등 발전을 빚었기 때문이다.

민족적 연대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 기획적 창조행위'라면, 그것은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남쪽이 신자유주의식 경제를 벗어나 민주경제 체제를, 북쪽이 주체사상식 경제체제를 벗어나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경제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옳다. 그때 통일민족경제는 비로소 남북연대와 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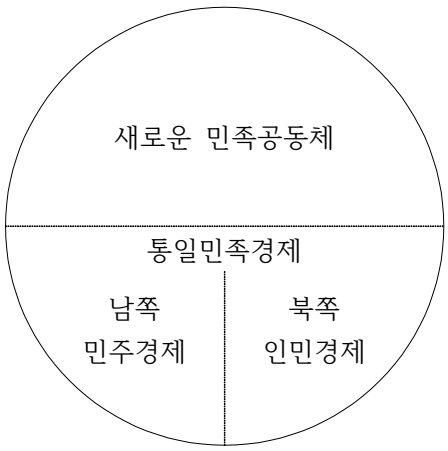

그림3. 3중구조와 민족적 연대

<그림3>에서 남쪽의 민주경제와 북쪽의 인민경제는 통일민족경제를 형성하며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하부구조가 된다. 그 경계를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경계선을 넘나드는 소통으로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남북의 불균등 발전 3중구조로부터 고통당하는 민중과 인민들이 지금 당장 정치적 연대와 통일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성도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연대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남과 북 내부의 불균등 발전을 해결해가면서 남과 북 사이의 불균등 발전을 해소해가고 세계 자본주의와의 불균등 발전 문제를 풀어가려면 주체적 역량 강화가 관건이다.

5. 결론과 제언

지금까지 분석했듯이 남과 북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에 갇혀있다. 그 객관적 조건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통일을 섣부르게 전망하거나 연대를 쉽게 논의할 수 없다. 3중구조에서 민족적 연대의 전망은 밝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남과 북 사이의 대화와 교류가 줄어들고 심지어 적대감마저 높아가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쪽은 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기관에 더 깊숙이 뿌리내렸고, 북쪽은 백두혈통의 유일사상이 정치경제와 사회문화·언론기관을 더 강력하게 주도해가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미국 패권주의 영향도 여전히 강력하다.
따라서 민족적 연대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연대 방안과 단기적 연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에 근거한 중장기적 민족 연대 방안은 다음 두 가지를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제도의 통일이전에 '사람의 통일'이 중요하다면, 남쪽과 북쪽 모두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에 놓여있다는 현실 인식을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한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남북 사이의 불균등, 남과 북 사이의 불균등, 남과 북 각각 내부의 불균등 발전이 빚어낸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가겠다는 윤리적 가치판단과 실천 의지를 남과 북의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한다. 민족적 연대는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를 넘어서는 창조적 기획이라는 공감을 남과 북에서 넓혀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둘째, 남쪽이 북쪽과 연대하는 방안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남쪽의 신자유주의 체제 못지않게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명령식 경제체제'로는 불균등 발전의 3중 구조를 풀어가기 힘들다는 진실을 북쪽과 갖는 모든 차원의 대화에서 직간접으로 알려가야 한다. 통일민족경제를 구현해갈 남쪽 내부의 주체적 역량을 모아가기 위해서라도 신자유주의 체제 못지않게 북쪽의 명령식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명시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통일민족경제의 구체적 정책과제도 더불어 논의해가야 한다.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를 해결할 중장기적 연대 방안과 더불어 단기적 연대 방안도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남과 북에서 3중구조의 현실인식을 넓혀가기 위해 남쪽부터 신자유주의체제를 넘어 불균등 발전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가 곧 민족적 연대의 출발이라는 판단을 공유해야

한다. 1980년대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은 둘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 '2010년대 버전'은 남북 불균등 발전의 3중 구조를 전제한다. 그 전제에서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형성해내는 운동과 통일운동이 둘이 아니라는 명제를 내올 수 있다. 통일운동의 한 부문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학술운동으로 통일인문학을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둘째, 중층위의 남북 당국자 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 남쪽과 북쪽에 내부의 불균등 발전 해결에 적극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남북 당국자들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이 '북핵 폐기'를 내세움으로써 대화보다 대결국면으로 치달아 왔지만, 결과는 북핵 위기의 심화다. 수소폭탄으로 진화하고 있는 '북미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가 절실하다. 북쪽 지도부도 불균등 발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갈망하고 있다. 미국과 북이 국교를 수립하고 수출입을 하게 되면 북쪽 사회도 선택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봉쇄'를 풀어야 북쪽 사회 스스로 더 나은 체제를 구성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북쪽이 미국의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는 데 남쪽 정부가 적극 연대해야 옳다.

중장기적인 근본적 연대 방안과 단기적인 당면 연대 방안 모두 실천이 쉽지 않고 더러는 남과 북의 당국자들부터 억압받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다. 남쪽 정부가 민족적 연대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대결주의를 실행하며 '통일대박'론을 되풀이 할 때, 남쪽 사회에서 아래로부터의 압력, 통일운동, 연대운동이 필요하다. 바로 그 점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와 명령경제 체제를 넘어서려는 주체들의 연대가 민족을 통일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남과 북 내부의 주체 역량 강화를 민족적 연대의 필수 조건으로 경직되게 인식할 필요는 없다. 불균등 발전의 3중구조는 단계적 접근보다 동시적 접근을 요구하며 통일과 연대운동의 주체들이 국면마다 상황에 적실한 연대 방안을 실행해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석철(2012).『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 2013 대통령 프로젝트』, 창비.

김성민(2015).『통일인문학 인문학으로 분단의 장벽을 넘다』, 알렙.

김세균 외(2006).『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대출판부.

박영균 (2015).「통일의 변증법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 통일인문학, 61, pp33-6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06),『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창.

손석춘(2014).「남북 통일사상의 하부구조에 관한 연구」, 통일인문학, 60.

이병수(2011).「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사상이념팀 엮음,『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패러다임』, 선인.

정성진(2003).「21세기 미국 제국주의 : 맑스주의적 분석」, 사회경제평론 제20호. pp.109-151 한국사회경제학회.

조동호·이상준(2009).「이명박 정부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전략」,『남북경제협력 정책과 실천과제』, 한울. pp115~1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시관리법(199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6호.

통일원(1992). 남북교류협력부문계획(요약). 한겨레 1992.8.13. 5면.

하영선(2007).『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Callinicos,A(2009). Imperialism and Global Political Economy, 천경록 옮김(2011),『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책갈피.

Cumings, B.(1997). Korea's Place in the Sun : A Modern History. 김동노 옮김(2001),『한국현대사』, 창비.

Lenin, V. (1989). Imperialism, 남상일 옮김(1989),『제국주의론』, 백산서당.

Tabb, W. (2001), The Amoral Elephant, 이강국 옮김(2001), 『반세계화의 논리』, 말.

2부
포스트 통일과 민족

1. 포스트 통일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 포스트 통일과 민족정체성 문제: 1990년대 이후 남북 철학계의 민족·민족주의 이해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박민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포스트 통일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1. 들어가며: 통일, '하나의 민족'이라는 믿음?

두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합치는 통일을 외칠 때,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하나의 민족'이라고 믿고 있다는 '믿음의 체계'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의 정치, 문화, 혈연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혈연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그들은 하나의 국가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게다가 두 국가를 하나로 합치는 '통일'은 서로 다른 두 국가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국민으로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정서-문화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통일을 외치는 것은, 이런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합치려는 민족적 동일화의 욕망, 즉 '하나의 민족'이라는 믿음과 더불어 그것을 실현하려는 강력한 민족적 환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믿음과 욕망만으로 통일을 만들 수는 없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믿음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동력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의 통일론은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와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론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족주의에 근거한 통일론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기 십상이다.[78)]

민족주의에 근거한 통일론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동일성에 근거하여 통일을 정당화하고 민족동질성의 회복 또는 확보를 통일의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그것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과 북이 가진 가치-정서-문화적 차이들을 억압 또는 배제하는 '폭력'으로 전화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민족적 일체감에 대한 낭만주의적 열정은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만나 '차이'를 접하게 되면 그 '차이'를 극대화하고 오히려 상대를 부정하는 적대적 감정으로 전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족적 일체감'보다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달라진 '차이'들을 찾아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통일을 민족동질성의 회복으로 보고 이를 만들어가는 방안을 찾는 것은 오히려 통일에 저해 요소가 될 뿐이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민족의 이질화'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하나로 동질화할 수 있는 방식은 남과 북 둘 중에 어느 한쪽에 맞추거나 아니면 분단 이전의 문화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현재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차이'들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일은 남 또는 북 중 어느 하나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

독일 통일 이후 '오씨(Ossis)', '배씨(Wessis)'하면서 진행되었던 동·서독 간의 사회적 갈등에

78) 분단-통일과 관련하여 민족, 민족주의가 가진 긍정성과 부정성 및 한국에서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박민철, 「통일의 동력으로서 민족이라는 새로운 '환상체계'」, 『한국학연구』 52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를 참조하시오.

는 경제적 격차의 문제도 있었지만 서독이 동독의 문화를 이류로 단죄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배제하거나 억압했던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차이'는 내게 없는 것으로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 민족적 역량을 증대하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차이'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 자체로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독일이 통일된 지 5년이 흐른 해이자 남북이 분단된 지 50년이 되던 해인 1995년 송두율은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의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썼다.

"통일된 독일이 여전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장벽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필자가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를 너무나 모른다는 데에 있다. 더구나 독일과는 달리 동족상잔까지 경험한 남북이 서로 알게 모르게 쌓은 마음의 장벽이 너무나 높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서 우선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서 … 한 권의 책에 담아보았다."[79]

그러므로 통일은 '하나의 민족'이니까 '합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민족'이지만 그들은 서로 같지 않으며 통일의 진정한 문제는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독일통일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 통일'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만든 신조어(新造語)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포스트 통일'이라는 말은 분단된 두 국가가 합치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 즉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이전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이후에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2. 인식의 전환: '포스트 통일'이라는 문제 설정

'포스트 통일(post unification)은, '통일(unification)'에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를 붙여 만든 말이다. 'post'는 '이전, 앞'이란 의미를 가진 'pre'와 대비적으로 '이후', 또는 '다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post'를 붙여 만든 단어들로는 'post modern', 'postmodernism', 'postindustrial society' 등이 있다. 이들은 '탈(脫)현대(탈근대)', '포스트모더니즘', '후기산업사회(탈산업사회)'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따라서 'post'는 '후기산업사회'와 같이 '산업사회 이후, 다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탈현대', '탈산업사회'와 같이 '현대' 또는 '산업사회'를 벗어나거나 넘어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포스트 통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포스트 통일'은 '이후'란 의미와 동시에 '탈(脫)'이란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통일 이후'는 통일 이전과 대비하여 그 이후이며 통일된 상태를 넘어서거나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스트 통일'에서 '포스트'는 '이후'라는 의미를 가지든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든 간에 모두다 '통일'된 상태를 함축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 통일'이라는, 새로운 조어에 대해 "통일이면 통일이지, 통일된 다음을 가리키는 '이후'는 뭐며 통일됐으면 된 것이지 통일된 다음에 통일을 '넘어선다'는 게 뭐냐"는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포스트 통일'이라는 조어가 노리는 '효과(effect)'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통일을 분단된 두 국가, 두 체제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로 합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두 국가가 하나로 합치면 통일에 관한 의제는 끝나는 것이지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의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독일통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통일은 두 국가, 두 체제를 하나로 합침으로써 종료되는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 '마음의 장벽'을 거론한 송두율은 독일의 현장에서 통일을 직접 체험하면서 독일에서의 통일

79) 송두율,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사, 1995, 8쪽.

은 정치적으로 성공적이었지만 통일 이후, “동서독 사람들 사이에 생긴 마음속의 장벽”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80]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독일통일 및 통일 이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깊이 있게 연구해 온 김누리는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고 있다. “오늘날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극심한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은 우리에게 통일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정한 통일은 단순히 이질적인 정치·경제 체제를 통합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체제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 즉 그들의 의식과 정서와 심리가 갈등하고 소통하는 과정의 문제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제 통일을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로,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파악하는 인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81]

그러나 통일을 체제 통합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전통적 관점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부차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통일이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의 두 국가, 두 체제를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의 과제’라는 것도 결국은 ‘정치경제적인 체제통합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포스트 통일’은 통일 이후 제기되는 문제들을 초점화하여 이를 주제화한다(thematization). 즉, ‘포스트 통일’은 통일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통일 이후’에도 남는 문제들을 ‘통일 이전’의 문제들과 구별하여 ‘독립적 과제’로 분리정립하고 ‘통일’을 전체적으로 사유하도록 ‘문제설정’을 바꾸어 놓는다.

바로 이런 점에서 ‘포스트 통일’이라는 문제 설정은 김누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통일을 ‘정치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화의 문제’로, ‘체제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간의 문제’로 파악하는 “인식의 일대 전환”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인식의 전환’은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 통일’이라는 말로 통일 이후의 문제들을 주제화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남는다. 그것은 바로 ‘포스트 통일’이라는 새로운 조어가 지닌 혼란들, 즉 ‘포스트’라는 일상 언어가 사용될 때 습관적으로 계열화되는 의미체계들이 불러들이는 문제들이다. 이런 혼란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포스트 통일’이라는 신조어는 ‘통일’을 기점으로 하여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를 나누기 때문에 양자의 과제를 서로 분리하여 ‘통일 이전의 과제=정치경제적인 체제통합’, ‘통일 이후의 과제=사회문화적 통합’과 같이 이분법적 이해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포스트 통일’은 일상 언어 용법 상 ‘통일 이전’, ‘통일’, ‘통일 이후’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적 연속성은,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과제를 뒤에 오는 과제의 원인 또는 보다 더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는 우리의 습성과 결합되어 ‘통일 이후의 과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이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왜냐 하면 통일을 체제통합의 관점에서 보는 이전의 전통적 관점이 ‘이전’과 ‘이후’라는 시간적 연속성에 대한 관념 속에서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회문화적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남북은 체제통합을 이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차후의 과제라는 식의 단계론을 취하면서 이 문제를 받아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의 문제’를 ‘문화의 문제’로, ‘체제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 전환시킨 인식을 다시 뒤집는 것이다. 여기서 우위에 서는 것은 ‘정치의 문제’, ‘체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포스트 통일’이 제기하는 ‘인식의 전환’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보다 근본적(radical)이다. 그것은 ‘통일 이전의 과제’가 주로 ‘정치경제적’인 반면 ‘통일 이후’에

80) 같은 글, 13쪽.
81) 김누리 편저, 『머릿속의 장벽』, 한울아카데미, 2006, 5쪽.

는 '사회문화적 통합'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절충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정치경제적인 체제 통합' 이외에 '사회문화적 통합'도 필요하다는 식의 보충도 아니다. 그것은 정확히 양자의 관계를 전복적으로 뒤집어 놓는 것이다. 즉, 여기서 요구되는 '인식의 전환'은 '정치'에 대한 '문화'의 우위, '체제'에서 대한 '인간'의 우위라는 인식의 뒤집기, 다시 말해서 정치경제적 체제 통합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간의 통합이 우선한다는 관점의 역전이다.

물론 송두율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 통일에서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을 발견한 것은 독일통일 이후이다. 또한,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통일 이후의 사회적 문제들을 가지고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과제들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 '통일 이후'의 과제이거나 당장의 체제적 통합에 비해 부차적인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습성, 기계적 연속성을 따라 인과율을 결정하고 시간적인 선후를 따라 일의 비중을 결정하는 습성이 낳은 오류일 뿐이다.

1997년 한 신문과의 대담에서 송두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과제는 단순하게 '경제의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특히 '사회·문화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식량위기에 처한 북을 돕는 행위도 결국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은 각계각층의 폭넓은 접촉과 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가 통일을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까닭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의 지평을 넓혀간다면 통일이 담는 삶의 형식과 내용에서 많은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82]

그렇다면 '현재 식량위기에 처한 북을 돕는 행위'처럼 송두율이 말하는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과제' 및 '사회·문화적인 논리'의 개발은 통일 이후에나 주어지는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아직 분단되어 있는 남과 북 사이에서 작동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포스트 통일'이라는 문제 설정은 첫째, 통일을 '정치의 문제'에서 '문화의 문제'로, '체제의 문제'에서 '인간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인식의 전환'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런 '인식의 전환'은 두 과제를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로 나누거나 양자가 절충 또는 보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통합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의 통합이기 때문에 양자를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관계성을 바꾸어 놓는다. 즉, 이전의 문제 설정에서는 '정치경제적인 체제통합'의 우위라는 관점 속에서 '사회문화적인 사람의 통합'이라는 관점이 결합되었다면 '포스트 통일'의 문제 설정에서는 '사회문화적인 사람의 통합'이 '정치경제적인 체제통합'에 대해 우위라는 관점 속에서 통일에 대한 문제 설정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통일'이라는 문제 설정은 둘째, '사람의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서 정치와 경제를 통합시키고 통일 이전과 이후의 과제를 통일이라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통합시키는 데 있다.

3. '사람의 통일': 통일의 최종목표이자 통일의 최종심급

'포스트 통일'의 문제 설정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의 통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통일의 최종 목표일 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정에서 경로와 형태를 결정하는 최종심급이기도 하다. '포스트 통일'의 문제 설정은 국가 또는 체제통합의 과제를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통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국가나 체제 통합'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통합'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나 체제 통합의 문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꾸

82) 송두율,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2000, 188-189쪽.

어 놓는다. 예를 들어 앞에서 송두율이 말하고 있는 식량난에 처한 북을 돕는 논리가 그러하다. 그것은 '국가나 체제통합'을 먼저 내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민족에 대한 호혜적 선의를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송두율이 말하는 '식량난에 처한 북을 돕는 논리'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그가 말하는 '사회문화적 논리'를 발견한 이후에야 깨달은 것은 아니라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부터 서독이 했던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서독은 동독의 제품을 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었으며 동독이 지고 있는 빚에 대한 지불 보증을 서주면서 동독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83] 따라서 '사회문화적 논리'의 작동은 독일통일 이후에야 비로소 작동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정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 것은 독일통일에서 '체제통합'만을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통일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는 상반된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라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통일 이후 전개된 통일 후유증이다. 전자는 독일통일의 흡수통일을 사례로 들면서 남의 체제 우월성으로 북을 민주화하고 이를 남쪽이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는 독일통일의 후유증을 사례로 들면서 독일식 통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늘어놓으면서 북은 동독과 다르기 때문에 독일통일을 가지고 한반도통일을 말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양자의 대립은 하나의 전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독일통일이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로, 서독의 자본주의체제가 체제 우월성을 힘으로 밀어붙여 동독의 사회주의체제를 흡수한 '체제통합'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물론 체제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통일은 '흡수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대등한 통일이었다면 서독과 동독은 새로운 통일헌법을 만들고 이를 국민투표로 채택하는 과정을 밟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실제로 진행된 통일은 동독 사람들이 자신의 헌법을 버리고 서독 헌법을 선택함으로써 서독 국민이 되는 방식을 따랐다. 따라서 독일통일 당시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듯이 통일의 헌법적 절차를 둘러싼 논쟁, 즉 기본법 23조와 146조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도 문제적(problematic)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도한 쟁점화 또는 비판은 '진정한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왜냐 하면 '흡수통일'이라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작 그런 결과를 만들어왔던 역사적 과정들을 간과하는 우(愚)를 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은 동독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서독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독에 의해 흡수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독주민들은 독일통일을 만드는 데, '주역'이자 '주체'였다. 그들은 동독의 민주화 이후 통일을 요구했다. 물론 서독의 막강한 부와 자본이 투자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은 사실은, 독일통일을 만들어간 실질적 힘은 1989년 9월부터 시작된 동독주민들의 투쟁과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동독 주민들은 1989년 9월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시작하여 11월 베를린 장벽을 해체하고 1990년 3월 의회선거에서 병합·통일을 추진했던 '독일연합'에 표를 몰아주었다. 그것은 '연합' 형태의 단계적 통일 방식을 병합이라는 급속한 형태의 통일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이 또한

83)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69년 동방정책이 시작된 날로부터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날까지 20년 동안 서독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교회 등 민간에 넘겨 동독에 지원한 돈과 물자가 1044억 마르크나 되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576억 달러 정도다. 20년 동안 576억 달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갔는데, 연간 규모로 따지면 약 29억 달러다."(정세현, 「통일은 구심력부터 키워야 가능해진다」, 한반도평화포럼, 『통일은 과정이다』, 서해문집, 2015, 51쪽).

그들의 선택이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에고 바(Egon Bahr)는 후일 독일통일에 대해 '흡수통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독일인 특히 동독인을 모독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질타했다. 왜냐 하면 그가 보기에 "독일 통일은 동독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서독에 흡수된 게 아니라 동독인들이 선택한 방식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84]

그렇다면 독일통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흡수통일'이라는 결과가 아니다.[85]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던 독일통일의 '경로 및 과정'이다. 결과만을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독일통일을 한반도 통일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거나 아니면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용불가능하다는 식의 논점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독일통일에서 통일의 경로 및 통일 형태에 대한 결정은 언제나 '경로-의존적'이었다. 거기에는 미/소 열강을 비롯하여 통일을 둘러싼 다양한 세력들, 동·서독 정치 지도자들과 주민들 상호 간에 중층적으로 뒤엉킨 복잡성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통일은 이런 관계들의 중층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물론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았을 때, 연방제보다는 연합제가, 흡수통일 방식보다는 대등통일 방식이 더 생산적이다. 통일이 가져올 사회적 충격이나 후유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동·서독의 차이를 활성화하여 역량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논리적으로 그러할 뿐이다. 독일통일이 급속한 병합통일로 귀결되었던 것은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헬무트 콜이 애초 그렇게 기획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추진했던 통일방안도 단계적인 통일방안인 연합제였다. 하지만 동독주민들은 즉각적인 병합 형태의 통일을 지지했다. 그렇다면 동독주민들처럼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상적인 통일방안이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보다 긍정적인 통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는 예측불가능하다. 198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독과 동독에 살았던 사람들은 통일이 그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생각과 달리 너무 빨리 통일은 왔으며 그것도 당시 동독의 변혁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나 서독의 정치가들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왔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주어진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거나 더 좋은 통일시나리오를 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독일통일을 참조하여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논하는 데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식의 전제에서 출발하는 통일론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악적이다. 왜냐 하면 흡수통일에 대한 원론적인 설교 또는 흡수통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대립만을 늘어놓을 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논리가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

---

84) 임동원, 「'사실상의 통일'과 남북연합」, 한반도평화포럼, 『통일은 과정이다』, 서해문집, 2015, 198쪽.

85) 한운석은 서독의 강력한 경제력과 사회-정치적 우월성이 동독을 흡수했다고 하면서 아데나워의 독일정책이 옳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궤변은 동·서독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분단이 낳은 상처들을 얼마나 많이 치유할 수 있었는지(그 단적인 예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이었다), 장기적으로는 공개적인 체제경쟁을 통해서 동독인들에게 그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서독사회에 대한 동경을 강화시킴으로써 서서히 체제를 약화시켰다는 것, 그리고 동·서독인들이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통일이 낳은 문화적 충격을 상당히 완화시킴으로써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 등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한운석,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과거-20세기 독일민족과 통일문제』, 신서원, 2003, 70-71쪽).

이다. 따라서 개개의 정세변화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독일통일에서 보면, 통일의 경로 및 통일 형태를 결정지었던 것은 '독일의 주민', 특히 '동독의 시민들'의 향방이었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비록 한 민족이 분단되어 2개 국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서로 외국이 아닌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민족 동질성 유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었습니다. … 동독에 매년 평균 32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을 제공하며 매년 수백만 명의 왕래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분단으로 인한 양측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이렇게 하여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해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독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민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86]

따라서 최종심급에서의 결정은 '민심(民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통일은 그런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심지어 헬무트 콜이 이끄는 기민당 정부는 빌리 브란트의 사회당과 다른 보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빌리 브란트의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동독을 도와주는 대신에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확장시켜갔다. 1983년 서독정부는 10억 마르크에 대해 지불보증해준 데 이어 1984년에도 9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에 대한 지불을 보증해주었다. 이것을 결정한 것은 정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이끈 것은 '사회문화적 논리'이다.

서독정부는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인 손익계산을 하기 보다는 양국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민심이 연결된 것은 동독에 대한 서독의 대대적인 지원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있다.[87] 그렇다면 독일통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통일 과정 및 형태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최종심급'은 '민심'이며 '민심의 연결'만이 통일을 만드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점이다.

4. 민족적 연대의 원칙: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 '통일을 지향하는 두 국가'

'민심'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심성에 기초해야 한다. 민족이 하나가 되려는 '민족적 동일화'의 욕망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는 '문화민족' 또는 '의식민족'이라는 개념 아래 '두 국가 한 민족'라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동독은 '서독의 부르주아-자본주의적 민족' 대 '동독의 진보적-사회주의적 민족'이라는 '두 국가 두 민족'을 내세웠다. 그러나 통일을 더 적극적으로 원한 것은 동독의 주민이었으며 결국 동독 주민들은 동독을 버리고 서독이라는 국가의 국민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1989년 11월 라이프치히 시위가 결국 '독일, 하나의 조국'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은 그들 사이에 특별한 감정, 민족적 동일화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88]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서독이 잘 살았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물질적 부와 풍요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서독'인가

86) 임동원, 「'사실상의 통일'과 남북연합」, 한반도평화포럼, 『통일은 과정이다』, 서해문집, 2015, 199-200쪽.
87) 정세현, 「통일은 구심력부터 키워야 가능해진다」, 한반도평화포럼, 『통일은 과정이다』, 서해문집, 2015, 51쪽.
88) 한운석,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과거-20세기 독일민족과 통일문제』, 신서원, 2003, 104쪽.

의 문제는 남는다. 남과 북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잘 살아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과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북의 주민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와 통일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 국가들의 관계와는 다른, 외교관계를 벗어나는 '초과하는 어떤 것'이 있다. '동일화의 욕망'은 바로 이 '초과하는 어떤 것'이다. 남과 북의 관계의 독특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초과하는 어떤 것'에 대한 승인 및 이런 리비도적 흐름에 대한 긍정 없이 작동할 수 없다.

분단 이후 남북당국자가 처음으로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1972)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원칙에 대한 합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열정에 기초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단되어 살아온 상황에서 남과 북은 두 개의 국가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국민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일화의 욕망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둘'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며 타자를 자신의 동일성 내부로 동화시키려는 '폭력'으로 전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후 가속화된 남북의 체제경쟁은 바로 이것을 보여준다.[89]

송두율이 보았듯이 A=A라는 '동일률'은 'A'와 'A 아닌 것' 사이에 '제3'을 허용하지 않는 '배중률'을 불러들인다. 그가 보기에 남과 북이 분단 속에서 작동시키는 동일률은 남과 북 사이에서 그 어떤 중간도 허용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작동하는 논리는 '남 또는 북', '남이거나 북'이라고 하는 양자택일적 논리이다. 하지만 기묘한 것은 바로 이 양자택일적 논리가 작동하는 근거가 바로 '한반도'라는 전체성이라는 점이다. '휴전선'은 '분단'이 일시적-잠정적이라는 점, 그리하여 남과 북이 언젠가는 그것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즉 한반도라는 전체성을 보여준다.[90]

그렇다면 문제는 남북의 상호의존성이 긍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민족'이 분단된 상태에서 남과 북이라는 분단국가가 민족의 동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제 또는 억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두율은 동일성의 논리 'A=A'가 아니라 'A'도 'non-A'도 아닌 '제3'이라는 경계를 고수한다.[91] "'경계인'은 기존의 경계선을 허문다. '경계인'은 … 이쪽과 저쪽이 모두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만드는 사람이다."[92]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남 또는 북'이라는 논리로부터 '남과 북'이라는 논리의 전환, 즉 "'북한 살리기'나 '남한 살리기'의 양자택일 아니라 '남북한 다 살리기'라는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93]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남과 북', '한반도 전체'를 사유하는 인식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열정, 또는 민족적 동일화의 욕망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는 남과 북이 하나라고 말하는 대신에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이라는 경계를 고수한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니라 "집합적 단수로서의 우리"이다. 그것은 '우리'라는 한반도 전체성 안에 묶여있지만 항상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집합과 더불어 있는 '집합적 단수로서의 우리'이다. 남과 북의 관계는 '하나의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남과 북이라는 '둘'이 존재한다.

---

89)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이와 관련된 실제적인 전개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박영균, 「남북의 통일원칙과 통일과정의 기본가치: 민족과 평화」, 『시대와 철학』 25-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118-119쪽.

90) 송두율,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2000, 87쪽.

91) 송두율, 『미완의 귀향과 그 이후』, 후마니타스, 2007, 100쪽.

92) 같은 책, 101쪽.

93) 송두율,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사, 1995, 235쪽.

그러므로 남과 북 사이에서 소통을 만들어가는 것은 '민족의 동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열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열정으로부터 벗어나 남과 북이라는 '둘'을 인정하고 '둘의 차이'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연대성'의 관점을 취했을 때에만 남과 북의 관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관점이 그들의 관점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와 그들의 관점은 곧 수렴될 수 있고 또 쉽게 서로 배울 수 있다"는 관점이다.[94]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둘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둘을 '연대의 두 주체'로 바꾸어놓아야 한다.

1969년 사민당과 자유당의 연정에 의해 새로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동독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할슈타인 원칙'과 같은 동독고립화정책을 폐기하고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방향으로, 그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그 결과, 1972년 11월 동·서독은 <기본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체제에 대한 인정, 즉 '서독과 동독은 각국의 통치권을 자기의 영역으로 국한한다'든지, '각자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존중한다'와 같은 원칙으로부터 시작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 후, 동·서독 간의 이산가족이 재결합하고 친지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약 6백만 명의 서독인들이 동독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빌리 브란트는 1974년 그의 비서 귄터 기욤이 동독의 간첩이라는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실각되었으며 동·서독 관계도 일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헬무트 콜 수상은 빌리 브란트의 정책을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갔다. 1987-1989년 사이 서독과 서베를린을 방문한 동독인들의 숫자는 해마다 5백만 명 이상이었으며 1989년 중반까지 동독인들 4명 가운데 1명은 서독이나 서베를린을 한 번 이상 방문했을 정도였다.[95]

그러므로 민족적 연대는 첫째, 독일의 할슈타인 원칙의 포기에서 보듯이 '하나의 민족'을 고집하면서 서로 민족의 적자임을 주장하는 '정통성 경쟁'에서 벗어나 '두 국가'에 대한 상호인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뒤이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여기에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체제인정'의 원칙을 확인했다.[96] 하지만 그것은 독립적인 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관계에서의 국가에 대한 인정과 같은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남과 북의 관계는 다른 외교적인 국가들의 관계로 환원되며 '민족적 동일화'의 욕망이 억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점을 선(先)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 두 국가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한에서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루어진 두 국가, 두 체제에 대한 승인은 두 국가를 통일을 만들어가는 두 주체로 바꾸는 데 있었다. 즉, '둘'은 둘이지만 둘로 남아 있는 '둘'이 아니라 '하나'를 지향하는 '둘'인 것이다. 따라서 '민족적 연대'는 다른 연대와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민족적 연대는 다른 연대들과 달리 '초과하는 어떤 것'에 대한 욕망 및 '민족적 유대'의 감정에 기초할 때에만 작동가능하다.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2000년 <6.15공동선

94) 송두율, 『전환기의 세계와 민족지성』, 한길사, 1991, 38-46쪽.
95) 한운석,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과거-20세기 독일민족과 통일문제』, 신서원, 2003, 68쪽.
96) 남북유엔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와 '둘'의 변증법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박영균, 「남북의 통일원칙과 통일과정의 기본가치: 민족과 평화」, 『시대와 철학』 25-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131-132쪽.

언>과 2004년 <10.4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정립된 '통일을 지향하는 두 국가'라는 민족적 연대의 원칙 위에서 서로의 '공통성'(<6.15공동선언>)을 찾고 '상생(win-win)'의 민족공동체(<10.4선언>)로까지 논의를 발전시킨 것이었다.[97] 그런데도 그 이후, 이와 같은 성과들은 '상호주의' 및 '대북 퍼주기 사업'라고 단죄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남북 간에 작동하는 '민족적 연대'의 독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98] 남북 간의 민족적 연대는 상호주의와 같은 등가교환의 법칙에 의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해관계'나 '계산적 이득'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외교적 국가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초과하는 어떤 것', '동일화의 욕망' 작동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유대관계가 없는 남남들의 관계처럼 등가적 교환 또는 상호주의를 요구할 경우, 그것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송두율은 현대성이 낳은 '위험사회의 극복 과제'는 '분단사회의 극복 과제'와 결합되어 있다고 하면서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은 "민족 간 내부거래"를 통한 "민주적 복지사회의 건설"[99], 즉 "하나의 민족경제권을 건설한다는 전망 밑에서 남북을 아우르는 구조조정"[100]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5. 나가며: 또 하나의 남북연대, 고통과 아픔의 연대

독일이 통일된 지 25년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동안 독일은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통일의 후유증은 독일이 통일 이전부터 서독과 동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독일통일 자체가 두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갈등을 경험했던 것은, 가치·정서·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더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사회문화적 통합이 정치경제적 체제통합보다 선차적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여기서 당장 시작되어도 결코 늦지 않다.

게다가 제도와 체제를 통합하거나 바꾸는 것은 비교적 쉽다. 하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에 아로새겨진 가치·정서·문화는 생활 속에서 체화되고 내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기도 어렵지만 한 번 바꾸면 쉽게 바뀌지 않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향한 '길 닦기'가 '불가역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를 '분단의 사회적 신체'에서 '통일의 사회적 신체'로 바꾸고 남북 주민들의 마음을 서로 연결해가는 '사람의 통일'에 '정치적인 약속이나 제도화' 등 정치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복무하고 공헌해야 한다. '정치경제적 통일' 노력이 '사회문화적 통일' 노력으로 발전하기 못할 때, 그것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972년 동·서독이 맺은 <기본조약>과 1991년 남·북이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은 두 국가, 두 체제를 인정하는 데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 <기본조약>은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을 확장하면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면 한반도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양자 간의 교류협력을 확장시키기는 고사하고 이미 합의한 '상호 체제에 대한 인정'조차 지키지 않

97) 각 합의문에서 나오는 원칙 및 가치에 대한 논의는 박영균, 「남북합의문에 나타난 통일의 인문학적 가치」, 『조선대학교 학보』 25, 조선대학교출판부, 2015를 참조하시오.
98) 민족적 연대가 지닌 독특성 및 보편적 가치, 연대 개념에 대한 논의는 박영균, 「통일의 변증법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 『통일인문학』 61,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를 참조하시오.
99) 송두율, 『21세기와의 대화』, 한겨레신문사, 1998, 67-69쪽.
100) 같은 책, 90쪽.

는 사문화된 협정문으로 전락해버렸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1990년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많은 코리언들은 독일보다 훨씬 강한 민족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통일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고취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조선)반도의 분단은 독일과 같은 통일로 나가기는 고사하고 동북아의 신(新)냉전을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동서냉전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탈냉전-남북화해협력 무드가 조성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탈냉전-남북화해협력 무드는 남북 간의 상호 적대성을 부추기는 '증오의 정치학'[101]에 의해 파괴되었다.
오늘날 '증오의 정치학'은 분단이 낳은 전쟁의 상처,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죄의식을 상대에 대한 원한감정과 '타자'의 악마화로 전치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중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남과 북은 '민족=국가'라는 근대국가와 달리 '민족≠국가'라는 어긋남을 가진 "결손국가(a broken nation states)"[102]이다. 따라서 분단국가는 구조적으로 자신의 결핍을 감추고 민족의 대표자로 상징화하는 분단 재생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103] 바로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민족적 연대는 독일과 달리 '분단트라우마'를 '치유(healing)'하는 '고통의 연대', '상처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고통의 연대', '상처의 연대'는 '상처'나 '고통' 그 자체를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남과 북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아픔과 상대의 아픔'을 연결시키면서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보듬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북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진 상처가 궁극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국권의 상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런 역사를 한민족 공통의 '서사'가 아니라 분단국가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서사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과 이산, 분단은 모두 다 동일하게 '민족≠국가'라는 어긋남이라는 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화'에서 시작되었다. 식민화 이후, 코리언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로의 이산되었으며 분단은 '8.15해방'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따라서 식민 트라우마는 '분단'과 '이산'의 상처를 낳은, 도미니크 라카프라가 이야기하는 '근원적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민족적 연대에 요구되는 '고통의 연대', '상처의 연대'는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라는 지역을 넘어서며 근대 동아시아의 비극적인 역사 및 서구 제국주의 지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재일 조선인'의 학자, 서경식은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라는 책의 서문에서 한국어 때문에 고민하다가 "타자로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놓고 대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차이를 불러온 역사적 원인이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같은 동포라는 일체감을 공유하고 싶은 바람을 누르고 존재하는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어떤 연대의 길이 가능한지 찾아보고 싶었다. … 한국 국민들

101) 스피노자는 폭군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혼들의 슬픔을 필요로 하며 슬픈 영혼들은 자신들이 가진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 폭군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통일시키는 것은 삶에 대한 증오이며 원한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증오의 정치학'은 바로 이와 같은 슬픔의 정서를 타자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어 권력의 힘을 키우는 정치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남북관계에서는 남북의 적대성을 활용하여 정적을 탄압하거나 공격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102)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모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쪽.
103) 프로이트는 '반복강박증'과 '공포증'의 원인을 '실재적 불안(realistic anxiety)'보다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ety)'에서 찾았지만 분단 트라우마는 '실재적 불안'과 '기억의 환기'를 통해서 작동한다(박영균, 「분단의 사회적 신체와 심리 분석에서 제기되는 이론적 쟁점들」, 『시대와 철학』23-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2, 241-242쪽).

과 재일조선인이 서로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지난한 대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분단이라는 역사를 공유하는 '새로운 우리', '미래의 우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104]

그렇다면 민족적 연대로서 '고통의 연대', '상처의 연대'는 남과 북 주민들 사이의 상처와 고통의 연대를 넘어서며 제국주의 역사에 의해 억압받는 자들의 연대로, 민족적 연대를 해방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대로 나가야 한다.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일본이라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억의 투쟁은 한국에서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 투쟁하고 서로 깊이 연결돼" 있으며 "연결해야만" 한다.[105] 여기서 "'민족'은 '혈통'이나 '문화'나 '민족혼'처럼 소위 '민족성'이라는 실체를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민족'은 고통과 고뇌를 공유하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지향함으로써 서로 연대하는 집단을 가리킨다."[106]

104) 서경식,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철수와 영희, 2009, 5-6쪽.
105) 같은 책, 235쪽.
106) 서경식, 임성모.이규수 옮김,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2006, 10-11쪽.

〈포스트 통일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에 대한 토론문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

※별지첨부※

포스트 통일과 민족정체성 문제: 1990년대 이후 남북의 민족·민족주의 이해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박민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1. 들어가며: 남북 민족·민족주의의 이중적 흐름과 한반도 통일문제

'민족' 개념 및 이와 연관된 여러 개념들은 그 자체의 이론적 맥락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실천적 맥락 사이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민족정체성이 '특정 민족의 고유한 특성 내지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족정체성은 한반도의 통일을 가깝게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기반으로 중요시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동안 필연적 연계 속에서 다뤄져왔던 통일과 민족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한 무렵, 민족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전환을 맞는다. 서구의 민족주의 연구성과 및 탈현대 담론의 수용,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본격화 속에서 구축된 '자본주의 초국가체제'의 경험, 다문화·다민족사회로의 진입, 남북의 적대적 대립의 심화 등은 민족·민족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불러왔다. 이러한 변화는 민족·민족주의가 여전히 분단극복을 위해 실천적으로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긍정과, 반대로 통일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어떠한 실천적 기능도 담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공존하게 만들었다. 민족정체성의 논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늘날 통일과 관련해 민족정체성을 고민하는 논의에는 통일을 위해 생래적으로 주어진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해갈 것인지를 묻는 흐름과, 반대로 통일한반도의 정체성을 민족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구성하자는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의 입장은 민족을 통일주체로 설정하면서 민족동질성에 기반한 민족정체성의 '확립'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후자는 민족 대신 '시민'을 통일의 주체로 설정하고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집단정체성 구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양자에 대해 우리는 막연한 민족적 전통을 강조하거나 추상적인 수준에서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주장하는 방식 그리고 여전히 강한 현실적 규정력을 갖는 민족이념을 용도폐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식 모두가 과연 얼마만큼 정치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비판을 던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통일 '이후'를 염두에 둘 때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그동안 통일 '이후'를 고민하는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독일통일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통일 이후의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한쪽 주도의 제도적 통합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정서·심리적 통합은 일방의 주도로 달성될 수 없는, 여전히 독일통일의 완수되지 못한 영역이다. 실례로 서독인들은 독일정체성이 아니라 '서독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독 주도의 흡수통일을 과정 속에서 동독인들이 경험한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자기 동일성으로서 '동독 정체성'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107]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정체성의 충돌은 현재까지 동서독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107) 문태운,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의 장애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0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86-87쪽.

독일통일의 사례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정체성'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을 미리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서로 구분되는 남북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그 특징, 정체성의 병존과 마찰 가능성, 통일한반도의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때 이러한 논의는 '민족정체성'을 그 분석대상으로 삼고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분단 이후 남북한 모두는 일정정도 민족주의를 남북통일과 사회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족·민족주의 이념은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논의와는 별도로 현 시점에서 '가장 앞 서 있는' 정치적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민족·민족주의를 발전시켜왔다. 남북의 적대적 대립은 서로 다른 민족을 개념화하게 된 이유였으며, 나아가 '반공'과 '친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서로 다른 민족주의를 만들어낸 이유가 되었다. 남북 민족·민족주의의 이질적 이해는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인 민족정체성의 적대적 대립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 진정한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은 분명하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대립된 두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직시하는 것은, 통일 이후 정체성의 충돌이 어떤 영역에서 발생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해결방안을 미리 고민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남북의 민족·민족주의의 이해가 서로 얼마만큼 달라지고 있는 확인함으로써, 통일 이후 민족정체성의 충돌과 분열지점을 미리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①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남북의 철학문헌과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민족·민족주의 이해의 특징을 해명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것이다.[108]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곧 민족·민족주의의 현실적 전개양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민족주의의 현실적 전개는 민족정체성의 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 철학계로 국한시킨 이유는 북한의 사상적 주도성을 갖고 있는 문헌들이 철학을 주제어로 선택하고 있기에 학문영역으로서 '철학'을 분석대상의 중심에 두는 것이 민족·민족주의 이해의 차이와 대립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를 기준점으로 삼은 이유는 민족·민족주의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각각 '민족주의 해체의 흐름'과 '맑스-레닌주의의 탈피'로 인한 남북 사상계의 이질적 이해양상이 본격화되었던, 사상사적 변곡점이기 때문이다. ② 나아가 남북 민족·민족주의 이해의 최종적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비판하고 통일 이후 정체성 충돌가능성과 그 해결방안을 시론적으로 탐색할 것이다.

2. 민족·민족주의의 원심력적 분산: 1990년대 이후 한국 철학계의 민족·민족주의 이해의 특징

한반도의 민족·민족주의 개념 이해는 한반도가 처한 특수한 현실로부터 출발했다. 1900년도 초반 한반도로 수용된 민족 개념은 일제강점기의 자주독립과 해방 이후 남북분단의 극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사회역사적 존재로서 개념화되었

108)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는 북의 문헌은 북한의 사상이론잡지인 『철학연구』(1990-2009년)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2005-2009년)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제목으로 포함되고 있는 약 90여 편의 글이며, 남의 문헌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철학'을 주제어로 삼고 있는 전문학술지 『철학』, 『범한철학』, 『시대와철학』, 『철학연구』, 『사회와철학』 등에서 발표되었거나 개별 철학전공자들이 발표한 '민족' 관련 약 70여 편의 글이다.

다. 식민과 분단의 역사가 요구한 민족 이해 방식은 오랜 기간 전승된 혈연、언어、역사、문화와 같은 공통된 요소들로 민족의 기초가 이뤄진다는 원초론적인 입장을 자연스럽게 강화시켰고, 나아가 이러한 공통요소들에 기반하여 민족적 감정과 귀속감 등이 형성된다는 민족주의 이해방식을 일반적으로 통용시켰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자신의 이념적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다는 주장으로 대표되는 서구 민족주의 연구경향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민족、민족주의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예컨대, '발명된 민족(E. 겔러)', '만들어진 전통(E. 홉스봄)', '상상된 공동체(B. 앤더슨)'와 같은 용어들은 이 시기 민족、민족주의를 규정하는 한국 학계의 '또 다른' 학술 언어이기도 했다. 특히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들은 민족의 구성적 성격을 지적하고, 민족주의가 개인의 억압과 타자의 배제를 수행하는 배타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이른바 '포스트 담론'들에 의해 민족、민족주의 개념에 함유된 대중동원 효과와 특정집단에 의한 이데올로기주입 효과의 위험성이 폭로되었으며, 민족、민족주의는 더 이상 사회구성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포스트 담론의 핵심에 위치했던 철학계의 1990년대 민족、민족주의 개념 이해방식도 이러한 흐름에 벗어나지 않았다. 이전 시기 민족、민족주의는 철학계의 전면적인 관심대상이 결코 아니었다. 민족、민족주의 개념이 역사학에 의해 그 구성요인과 성격, 특징과 의의, 한계와 전망 등이 폭넓게 조망되었던 데 반해, 철학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철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1990년대는 민족、민족주의를 철학의 이론적 분석대상으로 삼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했다. 한편으론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믿음이 여전히 유지되는 데 반해, 다른 한편으론 그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주도적으로 제기되었다.

북에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주창되고 있었던 1992년, 한국철학회에서 발행하는『철학』에는 새로운 문제제기를 담고 있는 4편의 기획논문이 실렸다.[109] 이 논문들은 철학계에서 민족을 전면적인 철학적 논의의 주제로 삼고, 이른바 탈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려고 한 최초의 시도였다. 이 글들은 민족이 근대 국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국가적 관점에서 구성된 허구적 개념이며, 민족주의 역시 근대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산출된 부산물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나아가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분법적 사유에 기반하고 결국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기능하화는 민족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팽창주의,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동시에 이 논문들은 공히 국제적, 탈민족적, 개방적, 시민적인 성격으로 민족주의가 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리 말하자면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 철학계의 민족、민족주의 이해와 관련된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은 '홍익인간', '단군사상', '화랑도', '화쟁사상', '풍류도', '유교'와 같이 본질적인 한민족 고유의 사상체계가 유지、계승되고 왔음을 주장하는 소수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단일민족의 자주의식과 평화주의를 고취하는 방향으로 민족주의의 지향이 맞춰져야 함을 주장한다. 두 번째 흐름은 원초론적 관점을 거부하고 구성주의적 민족、민족주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민족주의를 재구성하려는 목적에서 한반도의 저항적 민족주의 흐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려는 입장이다. 이 흐름은 배타적이고 폐쇄적 민족주의를 극복할 대안으로 '열린 민족주의'를 주장한다. 세 번째 흐름은 포스트 담론의 관점

109) 박순성,「문화적 민족주의: 그 의미와 한계」; 신귀현,「민족주의: 그 분열과 통합의 논리」; 이성규,「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이진우,「개방적 민족주의와 세계평화」. 이 모두『철학』제37집, 한국철학회, 1992.

에서 구축된 탈민족주의론이다. 이 입장은 민족주의의 폐쇄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민족주의를 재구성하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민족주의의 해체를 주장한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재구성'과 '해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족주의 담론의 위험성을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철학계의 민족담론은 그 대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대안적 재구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 철학계는 대체적으로 1980년대 서구 탈민족담론의 연구에 기반하여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근대적인 구성주의적 관점을 공유했다. 구성주의는 민족구성의 선험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거부하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 여러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 민족과 민족주의가 고안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족은 '구성원들의 동의 내지 동화를 유발할 수 있는 상상된 내용을 담고 있는 상상된 공동체', '자기들에게 고유한 주권 국가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으로 규정되었으며, 민족주의는 '근대 사회에서 근대적 매체들을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한 전체주의적 일체화 관념'[110]등으로 규정되었다. 반대로 혈연·언어·문화의 고유성을 가지고 오랜 동안 형성되어 온 한민족이라는 규정은 극히 드물었다. 달리 말해, 이 시기 철학계는 기존의 민족담론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홍윤기는 2000년 이후 급속화된 탈민족담론의 유행을 평가하면서, 탈민족담론은 결국 민족담론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한국적 민족 담론이 지닌 부정성의 범위',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반성', '한국 민족주의의 현재적 요구에 대한 평가', '민족주의와 현대성 성취의 관계', '민족해체와 세계시민으로의 이행'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평가한다.[111] 그러한 '검증'에 따라 민족에 대한 원초론적 입장은 다수의 철학연구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원초론적 입장은 때때로 민족개념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피의 동일성'과 '대지(영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피의 동일성은 "동일률에 입각한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자 애당초 불가능한 설정이며, 대지에 대한 강조는 "단지 생존을 위한 영토가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와 욕망의 혼합물에 의해 추구되는 당시의 제국주의적 영토에의 확장욕을 보여"[112]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민족·민족주의이라는 이념지향은 다른 이념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거나 해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증에 따라 민족·민족주의 이념이 분단극복과 통일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수단으로써 필요하다는 인식 역시도 공존하고 있었다. 이는 한반도 민족·민족주의 전개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민족주의 자체를 모두 편협하고 폐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피상적이고 위험하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전제는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민족주의의 실천적 이념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에 대한 전적인 긍정을 찾을 순 없다.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란 서술은 이 시기 민족·민족주의를 다루는 철학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던 수사였다.

이렇듯 비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족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반도 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설득력을 확보했다. 따라서 민족주의가 여전히 통일에 대한 접근방법인 동시에 통일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통일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민족주의는 "'민족' 지향적인 사유체계와 자기 제한적 급진주

110) 김원열, 「동북아시아 삼국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대와철학』 제16권 제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5, 132쪽.
111) 홍윤기, 「이산과 집산의 민족정체성」, 『황해문화』 통권 35호, 새얼문화재단, 2002.
112) 최상욱, 「민족 개념에 대한 하이데거와 히틀러 사상의 비교」, 『철학연구』 제52집, 철학연구회, 2001, 127쪽.

의 혹은 동어의 이중주의적 해석의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배제"[113]된 새로운 민족주의여야만 했다. 이때 새로운 민족주의는 배타적이고 억압적 민족주의가 아닌,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결합된 민족주의로 규정되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철학계의 민족담론은 '열린 민족주의'로의 전환과 이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앤더슨이 지적했듯이 민족·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정치적으로는 위력이 있는 반면 철학적으로는 내용이 빈곤하고 일관성마저 결여되어 있다."[114] 1990년대 철학계는 민족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고 가치론적 도약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민족·민족주의가 근대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의 이론적 요청일 수는 있지만, 현실화된 힘을 갖는 민족주의를 이론적 분석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115]는 '아포리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할 경우, 민족주의에 대한 맹목성이 분출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원초론적 관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한국의 경우, 민족주의가 곧 '반여성적·반주변문화적·반제삼세계적 독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당연한 것이었다.[116] 더군다나 20세기의 세계역사가 보여주듯 민족주의의 강화는 침략과 저항을 불러오면서 국가 간의 갈등을 야기했다는 사실, 더불어 남북 민족주의가 정치이데올로기화하면서 남북의 통합을 오히려 가로막고 적대적인 대립을 양산했다는 사실은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전적인 긍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민족과 민족의식이 근대적 개념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거부하고 '한민족의 고유성'이 존재한다는 철학계의 소수의 관점에서도 강조되었던 부분이었다. 결국 민족·민족주의 발생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가졌던 이들 모두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거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민족주의의 자기반성은 19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기도 했으며, 이는 열린 민족주의의 출발점이 된다. 열린 민족주의의 핵심은 민족 개념의 독단적 기능과 민족주의의 배타성을 경계했고 끊임없이 보편적 가치와 결합하길 요구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시기 철학계는 한반도 민족주의가 '개방적 민족주의', '융화적 민족주의', '시민적 민족주의', '사회적 민족주의', '민주주의적 민족주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인간주의적 민족주의', '진보적 민족주의', '성찰적 민족주의', 심지어 '생태적 민족주의'와 같이 보편이념과 결합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주의의 개방성과 포용성이 강조된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된 이후 열린 민족주의에 대한 긍정은 힘을 잃게 되었고, 민족주의 자체에 대한 거부가 큰 흐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은 민족주의 자체의 매커니즘으로 인해 열린 민족주의로의 전환을 꿈꾸는 철학적 기획이 결국 실패할 것이며, 긍정성을 인정받았던 저항적 민족주의 역시 궁극적으로 타자를 억압하는 기능에 종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좋은 민족주의'와 '나쁜 민족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지배적 민족의 민족주의만 아니라면 좀처럼 나쁘기 힘들다는 형이상학적 관념"이거나 "민족주의에 대한 관념적인 낙관을 불러들일 수 있다"[117]는 주장이

113) 이헌근, 「민족주의 담론과 한민족통합」,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4집, 한국시민윤리학회, 2001, 186쪽.
114)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3, 24쪽.
115) 최윤수, 「동도서기 논리와 민족담론의 해석」, 『동양철학연구』 제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296쪽
116) 황필호, 「민족주의와 종교민족주의」, 『철학연구』 제48집, 철학연구회, 2000, 7-8쪽.
117) 진은영, 「탈민족시대의 국가, 민족정체성에 대한 고찰」, 『시대와철학』 제19권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 268쪽.

힘을 얻게 되었다. 민족주의의 패권주의적 자기중심적 경향과 이로부터 야기되는 타자에 대한 일방적인 위계화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저항적 민족주의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된 성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들은 한반도 민족주의의 현실적 전개과정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점차 정당화해나갔다. 다시 말해 이러한 주장은 ① 권력담론에 봉사한 민족주의 흐름에 대한 비판, ② 민족주의의 전통주의적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 ③ 더 큰 보편주의를 추구하기에 결국 민족주의는 자기해체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윤기는 "혈통적 순수성과 단일성에 기초하여 모든 분야에서 최고와 승리를 추구하는 민족지상주의의 명분은 남북한 지배층의 권력담론으로 봉사하면서 도리어 민족의 통합을 억압하고 반인륜적 작태를 정당화"[118]시켰다고 비판한다. 곧이어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비판은 북의 민족주의 이해와 전면적으로 충돌한다. 특히 남쪽의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기각은 다문화주의와 세계화가 급속하게 전개된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철학계의 민족·민족주의 이해는 세계화 시대의 보편성, 탈식민주의적 혼종성, 디아스포라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탈민족주의의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민족·민족주의의 '원심력적 분산'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송두율과 같이 '편협한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가 가지는 허위적 보편의식'[119]을 지적하는 민족-탈민족주의에 대한 이중비판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오히려 세계화 시대 탈민족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하버마스가 제시한 'Ethnos(종족)' 와 'Demos(민주)'의 구도가 이 시기 철학문헌들에서 자주 인용되었던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에트노스가 습속·풍습·식민·이주에 대한 기억을 근거로 혈통적 공통성으로 묶여진 인간 집단을 의미한다면, 데모스는 원초론적인 지표를 초월하여 평등한 시민권을 가진 지역 구민을 의미한다. 이때 하버마스는 시민권에 입각한 민족주의와 민족성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구분하고 전자의 논리가 후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시민주의의 토대로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통일과 민족의 강한 결합으로 인해 그동안 유지되었던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한편의 지지를 해체시켰다. 에트노스의 지배체제가 원초적 요소와 신화적인 요소로 결합된 민족주의라고 한다면, 데모스의 지배체제는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통일한반도는 에트노스의 관점에서 민족을 복원하기보다는 데모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120]들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3. 민족·민족주의의 구심력적 수렴: 북한 철학계의 민족·민족주의 이해의 특징

북한의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의미와 특징 등을 분석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졌다.[121] 이들 연구는 북한이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민족·민족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시

118) 홍윤기, 「다민족연방·민족연대체로서 '연성국가'」, 『인문연구』 제43, 44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263쪽.
119) 송두율, 『경계인의 사색』, 한겨레신문사, 2002, 123쪽.
120) 한승완, 「통일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시론」, 『사회와철학』 제1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01.
121) 조민,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민족사상연구』 제4호, 경기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1997; 정영철, 「북한의 민족·민족주의」, 『문학과 사회』 제16집 제4호, 문학과 지성사, 2003; 김갑식,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통일문제연구』 제18집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6;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이중구조 연구」,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3호, 평화문제연구소, 2010; 김광운,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환경」, 『한국사연구』 제152집, 한국사연구회, 2011; 차성환, 「북한의 산업화정책과 민족주의」, 『담론 201』 제16집 제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3.

기별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북한 민족·민족주의 이해가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일종의 전환기를 맞는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연구들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 북한 민족주의가 '내외부 위기에 대한 대응담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민족·민족주의의 우선성과 긍정성이 강조된다고 주장한다.[122]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부터 북한의 민족주의가 지배체제의 강화와 정당화를 위한 신화화된 통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였다고 지적한다. 개별 연구자들이 수행했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의 결과는 상호충돌하지 않고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김일성·김정일 저작의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민족·민족주의의 전개양상을 구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1990년대 이후 북한 민족·민족주의 이해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 민족·민족주의 개념 규정의 변화를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60년까지 북한의 민족 규정은 '언어', '영토', '문화', '경제생활', '심리상태'의 공통성을 중요시한 스탈린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지만 196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스탈린의 민족개념을 유지하면서도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에 따라 '혈통'이 추가되고 '언어의 공통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이후 북한 민족 개념은 1970년대 말부터 스탈린의 규정이었던 경제생활과 심리상태가 제외된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민족 개념에 대한 규정은 1980년대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민족주의와 관련하여선 이른바 확장이 엿보인다. 이를테면 이전 시기 민족주의를 부르주아 계급이데올로기와 등치시키고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던 규정은 사라지고, 1986년 김정일의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등장 이후 1990년의 전환에서부터는 민족주의를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참다운 민족주의'로 구분하고 후자가 보편적인 시대정신 혹은 통일 이념으로서 규정된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민족·민족주의 개념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민족·민족주의 언급에 전거를 두고 '혈연, 언어, 지역, 생활문화의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 집단'과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사상이론 문헌들을 분석할 때, 특히 김일성·김정일의 규정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내용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사상계' 내지 '철학계'의 경직성은 민족·민족주의 연구에 있어서 이론적 확장을 낳을 수 없게 만들었다. 1990년『철학연구』에 실린 강승춘 글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북한 민족·민족주의 이해방식의 전형을 드러낸다. 강승춘은 민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요인들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 '령토와 문화의 공통성'으로 규정한다. 이때 민족의 위치는 사회주의사상의 핵심 가치인 '계급'을 포괄하는 사회관계의 최종심급이다. 따라서 민족주의 역시 '민족 공동의 이익을 반영한 사상,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성원들의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념으로 설정된다.[123]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한 사상이론문헌의 민족·민족주의 이해방식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족에 대한 원초론적 개념규정의 공고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를테면 '혈연, 언어, 영토, 생활문화의 공통성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사회적 집단'으로서 민족이라는 규정은 이미 이전 시기 확립되었지만, '민족성'과 '민족전통'의 강조는 1990년대 이후의 특징을 드러내는 양

122) 정영철에 의하면 북한이 1990년대 민족주의를 재해석하게 된 이유는 첫째, 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체제 수호의 요구, 둘째, 1990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셋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때문이다. 정영철,「북한의 민족·민족주의」,『문학과 사회』제16집 제4호, 문학과 지성사, 2003, 1670-1677쪽.

123) 강승춘,「민족문제해결의 독창적인 길」,『철학연구』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편집위원회, 1990; 강승춘,「주체적 민족관」,『철학연구』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편집위원회, 1991.

상이다. 많은 문헌들에서 민족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성, 해당 민족에게만 있는 우수한 특성'으로 정의된다. 더 자세히 민족성은 '민족성원들이 피줄과 언어, 지역과 문화생활의 공통성을 가지고 오랜기간 살아오는 과정에 생활체험을 통하여 형성하고 공고히 한 공통적인 사상감정과 기질, 지향으로 나타나는 특성'[124]인 것이다. 이러한 민족성의 강조는 기존 맑스-레닌주의가 문화의 계급성만을 염두에 둘 뿐 각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125], 이러한 민족성이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구축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126] 결과적으로 민족을 다루고 있는 여러 글에서 민족문화유산계승에 대한 강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대의 철제도구와 청동도구, 고구려벽화와 고려자기, 첨성대, 금속활자와 금속제 측우기, 거북선 등 찬란한 민족문화' 등부터 '슬기롭고 용감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예의도덕',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고 있는 민족음식', '설·정월대보름·한가위와 같은 민족명절', '백의민족으로 대변되는 민족옷차림', '조선화·조선민요·조선무용·미술전통과 같은 민족문화예술',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반영되어 있는 민족어' 등이 민족성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전통적 요소들로 규정된다. 여기서 전통문화를 설명하는 수사들로 '깨끗함', '순결함', '맑고 부드러움', '우아함', '고상함', '자연스러움', '조화로움', '아름다움', '선명하고 간결함'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전통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전통유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덕적 우수성도 포함한다. 이때 민족의 정신도덕적 우수성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으로 규정된다.

둘째, 민족에 대한 원초론적 개념규정이 공고화되는 것과 함께 민족주의의 발생과 그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이 정립되었다. 북한 사상이론문헌들의 민족주의 규정은 기존 사회주의 인식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서유럽의 민족주의는 봉건적 억압과 신분차별을 반대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된 요구와 이익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맑스와 레닌 그리고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기존 사회주의 인식은 전 세계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던 나머지 민족주의를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으로서만 규정해왔다는 것이다.[127] 하지만 이것은 후에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위치한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계급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지, 인민대중과 신흥 부르주아지의 이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던 시기에는 타당한 이념이었다. 즉 민족주의가 민족의 이익아 아니라 소수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가 아닌 것이다.[128] 오히려 참된 민족주의는 민족의 불열을 막고 민족적 단결을 강화하며, 자기민족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추동하고, 다른 민족들과의 상호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견지하며 국제주의적 평화와 연대를 보장하는 것이다.[129]

이들 문헌들에서는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의 협조와 교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

124) 송경문, 「민족성과 민족의 공통된 리해관계는 민족적단결의 기초」, 『철학연구』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편집위원회, 1993.

125) 강명상, 「민족문화유산계승에 대한 선행리론과 그 제한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2009.

126) 특히 2002년 9월 8일 김정일의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려나갈데 해하여」가 발표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127) 안영란, 「민족주의는 진보적인 사상」, 『철학연구』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편집위원회, 2002.

128) 조성환, 「민족주의에 대한 주체적리해」, 『철학연구』 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편집위원회,2003.

129) 권효남,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호상관계에 관한 맑스주의적견해와 그 제한성」, 『철학연구』 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편집위원회, 2006; 전미영, 「민족주의에 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철학연구』 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편집위원회, 2007.

러한 협조와 교류는 절대적인 상호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견지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의 기본 구상을 엿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상은 민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사상과 이념이 있다는 서술과 조응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성은 곧 이어 등장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김일성민족'와 만나게 되면서 이론적 자기모순을 드러낸다.

셋째,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확산과 '김일성민족'으로의 담론적 이행은 2000년 이후 북한 민족·민족주의 이해의 최종결과이다. 민족주의의 발생과 그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이 정립되는 것과 동시에, 1980년 중반 이후 '우리(조선)민족제일주의'가 본격화되었다. 북한 철학문헌들에서 엿보이는 민족의 본질이자 근본속성으로서 자주성에 대한 강조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자주성은 '주체사상'의 핵심요소이자 1990년대부터 민족개념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술이기도 했다. 그 결과 자주성은 1990년대의 '조선민족제일주의'와 2000년대 강조되는 '김일성민족'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하지만 자주성에 대한 강조는 결국 '김일성민족'을 표상하는 핵심가치로 전환되면서 그 보편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1986년 7월 김정일의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사상이론문헌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높은 자각과 의지'를 담고 있는 숭고한 감정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들 문헌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내포될 수 있는 자민족중심주의이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민족 관련 사상문헌들은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강조하는 한편,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워 민족 간의 평등과 연대를 저해하는 '인종주의'와 '민족배타주의', '민족이기주의'와 '민족적 교만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30]

그러나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나마 자민족중심주의의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했던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규정도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 수령제와 철저하게 전일화되어간다. '김일성 수령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조선민족제일주의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것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부터 분명했지만, '민족=김일성'의 일체화는 엿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김일성'이라는 어휘와 직접적으로 노출된다거나 연결되기 시작한다. 즉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김일성민족'과 동일시되고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규정으로 자리매김한다.[131]

결과적으로 김일성민족주의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민족주의를 대체한다. "민족의 우수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132]로부터 시작된 민족과 수령의 일체화 전략은 사상이론문헌들에서도 그 내용이 반복된다. 민족과 수령의 일체화는 결국 '김일성민족'이라는 퇴행적 민족주의로 전개된다. 특히 1999년 송경문의 글은 사상문헌에서 '김일성민족'을 표명한 최초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는 '민족의 요구, 이해관계,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수령'이자 '수령제가 없을 경우 민족의 대단결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으며, 따라서 '김일성민족'은 민족의 대표적 표상으로 상승한다.[133]

---

130) 김일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본질」, 『철학연구』 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편집위원회, 1990; 장석소, 「조선민족제일주의형성의 중요요인」, 『철학연구』 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편집위원회, 1993.

131) 리원봉,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본질과 내용」, 『철학연구』 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편집위원회, 2002.

132)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1997년 6월 19일)

1990년대 이후 민족·민족주의를 다루는 북한의 사상문헌을 개관하면 민족·민족주의의 '구심력적 수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강고하게 작동한다. 민족구성의 다양한 요소가 사상되고 동질적 측정이 가능한 원초적인 혈연, 언어, 문화, 지역과 같은 특정 공통지표로 수렴되는 방식은 결국 자연스럽게 '김일성 수령제'에서 그 논리적 최종단계로 진입한다. '민족=동일한 혈연·언어·문화·지역을 갖는 운명공동체'는 동시에 '민족=김일성수령'으로 이행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 주장의 배경은 현실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을 타개하고, 세계체제의 변혁기의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한 이념적 재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민족·민족주의 구심력적 수렴에 의한 논리적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민족담론이 대체로 원초론과 근대론으로 구분된다고 할 때, 북한 철학문헌의 이해방식은 원초론과 근대론의 기묘한 결합 양상을 보인다. 민족을 혈연과 언어의 공통성으로 이어진 자연적 공동체로 보는 원초론적 입장과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근대 특유의 운동으로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근대론적 이해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족주의에 대한 근대론적 이해방식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은 원초론적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초론적 민족 개념은 동일한 혈연과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이 바로 민족이고 민족의 대표적 표상이 궁극적으로 김일성 수령이라는 특정 신화화된 인물로 전일화되어 북한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

4. 남북 민족·민족주의 이질적 이해가 남긴 '또 다른 결과': 정체성 충돌의 가능성들

위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의 민족·민족주의 이해는 그것의 자체적 한계를 초월해 시민과 같은 새로운 집단주체와 구성원리의 도입으로 이행하는 '원심력적 분산'의 양상을 띤 반면, 북한의 민족·민족주의는 종족적 단일성에 기반하여 신화화된 특정 개인을 민족과 일체시키는 '구심력적 수렴'의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민족주의 이해방식의 대립화는 분단체제의 강화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원심력적 분산과 구심력적 수렴의 귀결은 민족의 이질화를 거쳐 분단국가주의의 강화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는 남북의 민족 개념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지만, 민족의 자리를 분단국가의 대립적 국가성이 대신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 재현적 양상만을 놓고 볼 때 1990년대 이후 남북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방식의 차이는 원초론과 근대론의 구분과 유사하지만, 분단체제의 특수성은 분단국가들의 국가정체성을 강화시켜 '분산의 끝'에, 그리고 '수렴의 최종단계'에 상호적대적인 국민정체성을 위치시켰다.

좀 더 자세히 말해, 남의 경우, 원심력적 분산으로 인한 민족의 공백을 '대한민국 국민정체성'이 대신했다. 1990년대 이전 냉전기 한국인의 정체성은 민족정체성과 구분되는 별도의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민족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134] 그런데 최근 민족정체성과 구분되는 국민정체성이 증가하고 있다. 박순성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정체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예리하게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한국(인)정체성의 증가는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 및 북한의 민족 개념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실상 국민주의적 형태와 다를 바 없다.[135] 한국(인)정체성의 강화는 박순성의 지적처럼 북한이라는 타

133) 송경문, 「민족성과 민족의 공통된 리해관계는 민족적단결의 기초」, 『철학연구』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편집위원회, 1993.

134) 이병수·정진아, 「한국인의 민족정체성 이해와 대한민국 중심주의의 극복」,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74쪽.

자에 대한 대응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민족·민족주의의 원심력적 분산이 낳은 자체적인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족의 공백과 결핍을 북한이라는 적대적인 국가에 대응한 국민정체성으로 대체한 것이다. 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구심력적 수렴으로 도달한 '김일성민족'이라는 표상에는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수령제와 그 수령제가 존속하는 사회주의국가가 내재되어 있다. 민족의 과잉은 자신의 본질적인 매커니즘이기도 한 내부적 일체화와 맞물려 수령제 국가의 국민정체성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이러한 대체가 '대한민국 국민정체성'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정체성'의 배타적 정체성 형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남북의 민족정체성의 자리를 분단국가체제가 만들어 낸 상호적대적인 국민정체성이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정체성의 현실은 통일 이후를 사유한다고 할 때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된다. 통일과 관련해서 민족정체성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첫 번째 입장은 이질화된 남북의 역사,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민족공동체라는 자기의식의 확립을 강조하거나, 혈연적 유대나 막연한 전통에 기반한 민족정체성을 넘어 민족내부의 차이를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성찰적인 민족주체의 형성을 주장한다.[136]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둘 모두는 민족정체성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두 번째 입장은 민족정체성보다는 향후 통일한반도에서 구성될 통일헌법을 한반도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을 주장하거나[137], 남북한이 경직된 폐쇄적 민족주의와는 달리 평화·인권·반전·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시민정체성으로 민족정체성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의 입장은 반세기 이상 계속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완화시키고 통일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민족정체성의 현실적 규정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후자의 입장 역시 분단 이후 극심해진 남북 민족정체성의 비대칭성을 반영하고 훨씬 더 유연한 새로운 정체성을 제기함으로써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고민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는 남북 민족·민족주의의 이질적 변화양상과 국민정체성의 강화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한쪽은 남북의 민족·민족주의 전개양상이 그 내용에 있어서 통일을 담아내기 힘든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한쪽은 민족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보편적 가치를 억압할 수 있는 분단국가의 국민정체성 강화를 고민하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 민족정체성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한반도에서 급속화되고 있는, 다시 말해 상호적대적인 국민정체성이 민족정체성을 압도하는 정체성의 불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동기는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개별정체성간의 비균질성과 불균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결과, 통일 이후 동서독간의 정체성의 대

135) 박순성,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0, 93쪽. 최근 종족-혈통과 같은 선험적 요인이 아니라 국적, 한국어 취득 등과 같이 후천적 요인을 더 중시하는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의 성격을 분석하는 연구들(윤인진 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 통권 55호, 평화문제연구소, 2011; 황정미, 「다문화담론의 확산과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변화」, 『재외한인연구』 제24호, 재외한인학회, 2011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136) 김미숙, 「남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난 민족정체성」,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2, 62쪽.

137) 원준호, 「헌법애국심과 통일 독일의 정체성 문제」, 『국제지역연구』 제6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2, 205-206쪽.

립이 발생했음을 지적한다. 특히 통일 이후 독일은 서로 다른 '동독정체성'과 '서독정체성'이 '독일정체성'을 압도하고 있었기에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138] 독일통일의 사례는 분단국가가 만들어 온 국민정체성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서 어떠한 부작용을 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군다나 설사 한반도가 통일된다하더라도 독일과는 달리 통일된 민족국가건설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단체제가 만들어 낸 상호적대적인 국민정체성이 더욱 더 확장·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 다른 맥락에서 민족주의가 민족단위와 정치단위의 일치에 대한 열망 속에서 자리잡고 있음을 염두에 둘 때, 민족정체성이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동인이 된다는 구상을 전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구상은 과거 한반도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으로부터 일종의 설득력을 획득한다. 즉 외세에 대한 저항과 해방 그리고 남북 분단극복과 통일을 목적으로 했던 민족주의의 긍정성은 정당했다는 점에서 분명 민족정체성은 통일 의지와 연관되며 통일에 대한 실천을 불러 오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런데 상호적대적인 국민정체성으로 쏠린 균형추를 회복하는 것은 민족정체성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또 다른 문제와 연관된다. 앞 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북 민족·민족주의의 전개양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통일에 대한 요구를 수행할 수 없는 성격들로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왔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대립적인 국민정체성을 형성시킨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남북 민족·민족주의의 양극단을 탈피하고 민족·민족주의의 개방성과 긍정성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민족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사상이론문헌들에서 혈연이 생물학적, 유전적 속성이 아닌 '사회적 관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많은 글들에서 혈연적 연대로 표현된 핏줄의 순결성은 민족정체성의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 홉스봄의 지적대로 실제 한반도에서 혈연과 문화의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해서[139] 민족정체성이 몇 몇 지표로 환원될 때 이미 상당 정도의 단순화가 동반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이러한 단순화는 "민족 내부의 다수 집단 또는 주류집단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진 민족정체성은 민족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들을 무시"[140]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북한의 사례로서 치부할 수 없다. 한국 역시 북한을 적대시하는 관점, 해외 동포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시선, 특정 범법사례로 인해 국내 이주 동포들의 집단거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족정체성은 거주지와 국적·언어와 문화·의식주와 생활양식을 초월하고, 정체성의 경계와 내용, 그 구성요소까지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실제로 언어·생활문화·가치관을 비롯하여, 심지어 혈연에 이르기까지 민족정체성의 구성요소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통일 이후에 더 급속하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의 긍정성은 민족공동체를 혈연, 지연, 문화, 언어의 공통성에 기반한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을 협소한 관점을 넘어, 다가올 통일한반도의 이념적 지향을 만들어가는 노력 속에서 남북이 서로 만나 몸으로 체감하면서 민족적 연대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

---

138) 이동기,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통일과 평화』 제1권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9, 192쪽.
139) 에릭 홉스봄,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2008, 94쪽.
140) 정영훈, 「민족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정체성」, 『민족학연구』 제9호, 한국민족학회, 2010, 6쪽.

5. 나가며: 내셔널리즘의 '결핍' 또는 '과잉'인가? 다시 요구되는 문제들

최근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704개교 학생 11만 9551명과 교사 4672명을 대상으로 '2015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63.1%로 집계됐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서 '한민족'이라는 답변이 16.6%였던 반면, 통일의 걸림돌에 있어서 '남북한 이질감'을 답변한 비율이 7.4%라는 점이다. 이는 여전히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통일을 바라는 심리적 동인에 잔존해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남북의 '이질감'이 통일을 막는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일차적으로 '같은 민족, 다른 국가'로 해석할 수 있다.

장문석은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무관심이 어쩌면 '내셔널리즘의 결핍'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41] 그의 문제의식은 내셔널리즘의 과잉만큼이나 그것의 부재는 한반도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이다. 조금은 기계적 적용일 수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남북의 민족、민족주의의 '원심력적 분산'과 '구심력적 수렴'은 민족주의의 결핍과 과잉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장문석이 지적대로 남북의 민족주의 전개양상이 더 이상 한반도 통일과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민족주의의 결핍과 과잉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어떠했는가이다. 민족주의의 해방적 가능성에 주목했던 최장집이 2000년 들어 '한국'이라고 부르는 국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족적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민족주의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포기하는 모습은[142] 내셔널리즘의 과잉이든 결핍이든 궁극적으로 국가의 강화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내셔널리즘의 결핍과 과잉이 현재 한반도에서는 분단국가주의의 강화와 연결된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민족정체성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데, 우선 공통된 혈연과 언어와 같이 동질적인 민족적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는 민족정체성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국민정체성이 압도하고 있는 민족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결코 한반도에 "실체로서 두 개의 주권체가 존재한다는 냉엄한 현실"[143]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본 논문이 통일 '이후'를 사유한다고 했을 때, 통일 이후와 통일 '과정'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통일 과정에 대한 사유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당위적이고 추상적으로 민족을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앞 선 논의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민족을 허구로 간주하는 담론은 유행의 시기를 따져볼 때 자본주의 세계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반대로 민족을 실체화된 특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담론은 동질성의 척도로서 민족의 관계를 판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입장 모두 민족을 자본의 척도와 동질성의 척도로서 판단하고 민족 내부를 차등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한계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는 본 논문이 민족정체성을 초점화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

---

141) 장문석, 「내셔널리즘의 딜레마」, 『역사비평』 제99집, 역사문제연구소, 2012, 215-216쪽.
142) 최장집, 「해방 60년에 대한 하나의 해석: 민주주의자의 퍼스펙티브에서」, 『세계와 시민』 제8호 2006, 22쪽.
143)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1998, 289쪽.

마지막으로 앞 서 언급했던 박순성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한국(인) 정체성'의 강화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박순성의 낙관과는 달리 남북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으며 상호적대적인 국민정체성 강화의 흔적은 너무나 쉽게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견해가 결코 틀렸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실제 남북관계의 개선이 남북의 접촉을 강화시킬 것이며, 민족적 연대의 경험이 축적되면 될수록 또 다른 민족정체성이 생성되고 구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르낭의 규정을 빌리자면 민족 구성의 최종적 요인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결집되겠다고 하는 '의지'[144]인 것이다.

144) 에르네스트 르낭, 신행선 옮김,『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61-62쪽.

참고문헌

1. 기초문헌

『철학연구』(사회과학출판사 편집위원회, 1990-2009)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2005-2009)

2. 논문 및 연구서

김갑식,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통일문제연구』 제18집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6
김광운,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환경」, 『한국사연구』 제152집, 한국사연구회, 2011
김미숙, 「남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난 민족정체성」,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2,
김원열, 「동북아시아 삼국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대와철학』 제16권 제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5
문태운,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의 장애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0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박순성,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0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3
송두율, 『경계인의 사색』, 한겨레신문사, 2002
이동기,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통일과 평화』 제1권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9
이병수、정진아, 「한국인의 민족정체성 이해와 대한민국 중심주의의 극복」,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1998
이헌근, 「민족주의 담론과 한민족통합」,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4집, 한국시민윤리학회, 2001
윤인진 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 통권 55호, 평화문제연구소, 2011
원준호, 「헌법애국심과 통일 독일의 정체성 문제」, 『국제지역연구』 제6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2
에릭 홉스봄,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2008
에르네스트 르낭, 신행선 옮김,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장문석, 「내셔널리즘의 딜레마」, 『역사비평』 제99집, 역사문제연구소, 2012
조민,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민족사상연구』 제4호, 경기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1997
정영철, 「북한의 민족、민족주의」, 『문학과 사회』 제16집 제4호, 문학과 지성사, 2003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이중구조 연구」,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3호, 평화문제연구소, 2010

정영훈, 「민족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정체성」, 『민족학연구』 제9호, 한국민족학회, 2010
진은영, 「탈민족시대의 국가, 민족정체성에 대한 고찰」, 『시대와철학』 제19권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
최상욱, 「민족 개념에 대한 하이데거와 히틀러 사상의 비교」, 『철학연구』 제52집, 철학연구회, 2001
최장집, 「해방 60년에 대한 하나의 해석: 민주주의자의 퍼스펙티브에서」, 『세계와 시민』 제8호 2006
차성환, 「북한의 산업화정책과 민족주의」, 『담론 201』 제16집 제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3
최윤수, 「동도서기 논리와 민족담론의 해석」, 『동양철학연구』 제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한승완, 「통일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시론」, 『사회와철학』 제1호, 사회와철학연구회
홍윤기, 「이산과 집산의 민족정체성」, 『황해문화』 통권 35호, 새얼문화재단, 2002.
홍윤기, 「다민족연방ㆍ민족연대체로서 '연성국가'」, 『인문연구』 제43, 44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황정미, 「다문화담론의 확산과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변화」, 『재외한인연구』 제24호, 재외한인학회, 2011

〈포스트 통일과 민족정체성: 남북 철학계의 민족 · 민족주의 이해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병태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별지첨부※

3부
민족적 연대의 실천적 방안

발표3. 포스트 통일과 동아시아 지역연대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발표4.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을 통해서 본 남북연대 방안

이승환(시민평화포럼)

발표5. 민족적 연대를 가로막는 남남갈등의 실체와 극복 방안

이창언(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포스트 통일과 동아시아 지역연대

이병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1. 들어가는 말

냉전 시기 동아시아 지역은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 지역의 국가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사고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세계적인 탈냉전의 추세로 냉전기에 적대하던 구소련, 중국, 몽골 등 사회주의국가들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그 동안 결여되었던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전망이 회복되었다. “특히 냉전기 단절되었던 중국과의 접속은 동아시아를 상상할 수 있게 한 핵심적 추동력이었다. 냉전기 분단체제 아래서 한반도의 남반부에 제한되었던 ‘반국(半國)적’인 지리적 상상력이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전후해 동아시아로 확장해갔다.”[145]

탈냉전과 더불어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전망이 부각된 후,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의 문제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 수립과 뗄 수 없는 연관을 지닌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가들의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은 진즉에 있어왔지만,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이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과 긴밀하게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탈냉전 이후 확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나 통일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동아시아 지역연대(동아시아 평화공존 및 그 최종 목표인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지역연대의 상관성을 논의하려면 어떤 통일이냐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통일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 통일 후 통합의 과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이 현재의 국민국가 체제가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별국가주의가 강화될 경우 통일을 계기로 남북의 수많은 차이가 억압됨은 물론 주변국가들의 국가주의적 대응이 강화되어 동아시아 지역 내 새로운 대립의 소인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통일이 현존하는 권력단위 안팎의 변혁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형식의 정치공동체가 등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하며 지역적 연대로의 이행이 강화될 수도 있다.[146]

따라서 통일의 과정이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정치공동체, 즉 남북연합이 등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때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번영에만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남북연합을 통한 통일은 이처럼 규범적 차원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적이며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경우 거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147]이기도 하다. 국가주의를 강화한 통일은 어떤 의미로든 파국적 과정을 동반할 뿐만 아

145) 백영서, 「연동하는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창작과 비평』 제39권 1호, 2011, 18쪽.
146) 박명규, 「복합적 정치공동체와 변혁의 논리」, 『창작과 비평』 제28권 1호, 2000, 21쪽.
147) 이종석, 「동아시아와 분단한국, 현장경험과 몇 가지 단상」, 『창작과 비평』, 제39권 2호, 2011, 358쪽.

니라 주변국가의 협력을 얻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남북연합은 남북이 합의 불가능한 통일국가의 최종형태 열어두었기 때문에 남북 각각의 체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 남한 단독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남북합의의 산물이란 점에서 현실적 가능성을 지닌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의 문제는 통일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통합의 과정을 포괄한다. 만약 통일을 단일형 국민국가로 합쳐지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볼 경우 통일 이전과 통일이후의 명료한 이분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정으로서의 통일개념에서 포스트 통일의 기준을 말할 수 있다면, 위에서 말한 평화적이고 순조로운 통일과정을 보장할 수 있는 남북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포스트 통일은 두 주권국가가 서로를 인정하는 남북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 다룰 주제는 남북연합을 통한 통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적 지역질서와 맺는 긴밀한 연관을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통해 밝혀보려는 데 있다.

2.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두 갈래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난점들

1)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두 갈래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는 복잡하고 유동적 개념이며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들을 묶기보다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교역의 현장으로 예컨대 '황해도시공동체' 같은 개념이 더 적절할 때도 있으며,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마당에서는 동북아에 남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타이완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 미국을 빼놓을 수도 없다.[148] 이처럼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가 지리적으로 고정된 경계나 구조를 가진 실체가 아니라, 이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가 수행하는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역사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대부분의 논자들은 동아시아의 범위를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정치안보 측면과 관련된 남북문제의 중요성을 염두에 둘 때는 좁은 의미의 동아시아로 동북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149]

지금과 같은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라는 용어의 사용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우선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특히 1997년 아세안+3 체제가 출현하자 동아시아는 밀접한 경제적 연관을 지닌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겪고 아세안+3 체제가 출현하자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이 경제적 지역주의의 핵심 단위를 맡게 되고, 동남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모색과 더불어 제도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학계에서 동아시아는 유럽과 북미의 지역통합에 대응하는 제도적 권역의 성격이 강해졌다.[150] 이어서 노무현 정부 시기 동북아시대론이 제기되면서 둥북아라는 지역명이

148) 백낙청,「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가능한가」,『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비, 2006, 228-229쪽.

149) '동북아' 대신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서구가 구획한 동북아와 동남아의 경계를 일정하게 교란하는 한편, 동아시아론이 동북아 중심주의로 경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이중효과를 기대"(최원식, 2004,「주변,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313쪽)하거나. "아세안+3 협력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동남아와 한국의 전략적 연대가 가능"(백영서, 「연동하는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23쪽)하기 때문이다.

150) 윤여일,「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2015, 62-63쪽.

부상하였고, 동아시아보다는 동북아라는 지역 범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동북아시대론은 북한을 필연적으로 삽입함으로써 동북아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그런 진전된 한반도 정세덕택에 동북아지역 전체에 안보위협이 불식된다는 사고를 담고 있다.[151]

이상에서 보듯 199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주로 경제 영역과 정치안보 영역에서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경제블럭이나 안보공동체 등 제도적 차원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국가나 자본의 주도로 정치·경제·문화 영역에서 날로 긴밀하게 상호의존성을 높여가는 지역적 현실(곧 지역화)과 그에 기반한 지역협력체의 제도화(곧 지역주의)에 초점이 있다.[152] 지역 통합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안보적 이익을 제고하려는 제도적 차원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한중일 등 정부주도의 논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경제통합이 추동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며, 또 다른 공통점은 대체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도 그런 구조적 제약 안에서 동아시아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기위해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열린 지역주의와 중층적 지역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이다.[153]

반면 제도적 동아시아공동체의 흐름과는 달리 탈냉전 직후부터 한반도의 분단현실과 동아시아 지역의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대안적 공동체 건설을 주장해왔던 창비 그룹의 동아시아공동체론 역시 존재해왔다. 백낙청, 최원식, 백영서 등 창비 그룹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을 공통된 이론적 근거로 삼고 분단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가 지닌 선순환 관계를 탈냉전 초기에 선구적으로 사유하면서 인문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를 이론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들은 분단체제의 해소가 한반도 수준에서의 문제 해결을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54] 창비 지식인 그룹에 의해 다듬어진 이 동아시아론은 당대 한국의 현실을 일국적 시각에서 벗어나 한반도 전체, 나아가 동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현실분석의 도구이자 이론으로 자리를 드물게 지켜오고 있다.[155]

이들은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는 제도적 동아시아공동체라기보다 제도와 가치를 통합한 시각에서 진정한 공동체로 다가가는 과정으로서의 동아시아공동체를 추구한다. '위로부터의 동아시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동아시아'를 꾀하며, 행위 주체로서 국가만이 아니라 시민 내지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와 시민 간의 공치를 모색하기도 한다.[156] 제도적 동아시아공동

151) 이수훈, 「동북아시대 신구상」, 『21세기의 한반도 구상』, 창비, 2004, 229쪽.
152) 백영서, 「연동하는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24쪽.
153) 백영서,「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성찰」,『시민과세계』 제10호, 2007, 116쪽,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창작과비평』 통권 139호, 창비, 2008, 42쪽,
154) 이종석, 354쪽.
155) 이정훈, 「동아시아 담론, 온 길과 갈 길」,『창작과비평』 통권 163호, 2014, 397쪽. 중국 학자 쑨꺼(孫歌)도 "근래 동아시아에 관한 근본적 사고를 이끌어낸 것도 바로 한국의 사상가"이며, "그들은 이미 동아시아 각 지역의 이론 생산에 효과적인 참조체계를 제공해왔다"(쑨꺼, 「민중시각과 민중연대」, 『창작과 비평』 2011년 봄호, 83쪽)고 평가할 정도로 백낙청, 최원식, 백영서 등은 분단체제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왔다.
156) 백영서, 「연동하는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25쪽. 두 갈래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위로부터의 동아시아'와 '아래로부터의 동아시아', 국가주도형 동아시아와 시민참여형 동아시아, 제도적 동아시아와 과정으로서의 동아시아, 제도적 지역주의와 비판적 지역주의 등 다양하게 지칭할 수 있다.

체론에 대해, 개별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패권적 지역질서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이 지역의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돕는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가 크다[157]는 평가가 있으나, 이들은 다자주의적 협력체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제도적 동아시아공동체론이 지닌 의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제도적 동아시아공동체가 형성되기만 해도 중·단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수직적 지역질서가 수평적 지역질서로 바뀌고 미국 패권주의에 균열을 가져오는 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을 배제한 채 여러 영역에서 교류가 누적되면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믿는 기능주의적 발상이나, 국가는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민중연대에만 의존하는 근본주의적 관점을 모두 비판하면서, 정부 차원의 국제적 협력과 시민사회 차원의 국경횡단적 연대라는 두개의 층을 '민주적인 책임'(accountability)을 매개로 해서 연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158]

2)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난점들

그러나 어떤 의미의 동아시아 공동체이든 '동아시아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난점들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에 대해 회의의 눈길을 던지는 이들도 있다.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동아시아적 조건이란 무엇이며 동아시아 공동체론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잇는가?

첫째, 우선 영토와 인구 면에서 동아시아 대국인 중국의 존재가 유럽연합과 달리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왜냐 하면 국민국가로서 평등한 지위만을 기준으로 중국을 동아시아의 일국으로 보기에는 영토와 인구, 국력 등에서 다른 국가와 그 비대칭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영서에 따르면 "제도화를 동반하는 공식적인 통합(community), 나아가 연합(union)이 동아시아에서 쉽게 기대되지 않는 데는 … 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 곧 중국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는 이유가 작용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보다도 민중· 시민 중심의 협력이 더 중요해진다. 말하자면 시민참여형 동아시아공동체의 특성이 여느 지역보다 부각"[159]된다. 중국의 존재로 인한 비대칭적인 동아시아적 조건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국가가 기본단위로 연합하는 유럽연합과 다른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특성 내지 필요성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안에 따라 범위와 수준을 달리하는 지역연대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협력 수준을 높여나가되 동시에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유대 형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해 진다는 것이다.[160]

둘째, 동아시아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 미국의 역할과 관련된 난점이다. 미국은 비록 역외국가지만 그 막강한 힘 때문에 수평적 협력관계와 자율성에 기반한 동아시아 지역연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패권적 지역질서에 순응하는 경향을

---

157) 임우경, 「비판적 지역주의로서 한국 동아시아론의 전개」, 『중국현대문학』 제40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7, 4쪽. 강내희 역시 제도적 동아시아공동체론이 "동아시아라는 시야가 국가와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아시아에 연대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해방보다는 지배의 효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동아시아의 지역적 시야와 평화의 조건」, 『문화과학』 52호, 2007, 95쪽)고 주장한다.

158)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창작과 비평』 제36권 제1호, 2008, 43-44쪽.

159) 백영서, 「연동하는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25쪽.

160) 백낙청,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한반도」, 『역사비평』 2010년 가을호, 59쪽.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있어 열린 지역주의가 실현되려면 미국을 어떻게 위치짓는가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미국의 반발로 동아시아지역 공동체의 진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미국의 이익을 적절히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그 영향력을 제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161] 특수한 역내 국가로서 미국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미국의 힘이 긍정적으로 투사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체적 역량이 더 성숙하고 동아시아 공동체가 미국의 국익과 부합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162]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탈냉전기에도 불구하고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현실성과 장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극복하려는 당위적 지향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난 백여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진행된 식민과 전쟁의 역사적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역내 갈등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식민시기와 냉전기의 역사적 상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정서적 적대, 냉전적 사고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역사해석 갈등, 과거사 처리, 영토분쟁 등을 매개로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역사는 이처럼 식민 경험과 냉전의 체험을 매개로 한 국가 간의 갈등의 역사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억압과 냉전적 적대 속에서도 국경을 넘어 민중, 시민 간의 아래로부터의 연대 역사를 포괄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 제국주의와 냉전이 조성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된 경험 세계”[163]가 동아시아를 단순히 문화적 공동체가 아니라 역사적 실체로 실감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동아시아’라는 민중연대 내지 시민연대의 역사적 자산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제국주의 침략과 냉전적 대립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공통의 추모와 기념이 가능해지고, 은폐되고 억압된 진실들이 밝혀짐으로써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연대의 장을 발견할 수도 있다.[164]

넷째,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이 지체되고 있는 동아시아적 상황에서 “국가간 경계를 넘어 어떤 지역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165] 물론 동아시아에서 여전히 중요한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를 외면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현실과 유리될 수밖에 없지만, 국민국가라는 틀이 지구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질서를 국민국가들 사이의 협력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새로운 동아시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이라는 이중과제가 존재한다.[166] 그리고 국민국가 형성의 지체현상 혹은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현재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고 있는 북한과 대만 등을 어떻게 동아시아 공동체로 포괄할 것

161)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51쪽.
162) 이종석, 353쪽.
163) 백영서,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정문길외『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4, 15쪽.
164) 박명규, 20쪽.
165) 최장집,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아세아 연구』2004년 겨울호(통권 118호) 108쪽. 동북아 삼국은 근대로의 편입부터 냉전적 대립까지를 외부 세력에 강제당했고 정상적 국민국가로의 이행을 부정당했다. 탈냉전기에 이르렀지만 중국과 한국은 하나의 국민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분단상태로 남아있고, 일본은 여전히 보통국가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윤여일, 302쪽)
166) 이남주, 「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창작과 비평』, 제33권 1호, 2005, 402-403쪽. 여기서 말하는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란 구체적으로 전통적 국민국가의 강점을 살리면서(근대적응) 한층 민주화된 국가구조의 창안(근대극복)으로 나아가는 복합국가론을 의미한다.(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44쪽)

인가의 문제도 아울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공동체가 지역 내 일부 부자나라들의 클럽이 되지 않도록 북한이나 '국가와 비국가의 중간'에 위치한 타이완 같은 주변적 존재들을 포용할 장치가 요구된다."[167]

경제와 안보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달리 동아시아의 대안적 질서를 추구하는 과정으로서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이상에서 보듯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회의론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한 응답의 핵심은 동아시아 대국인 중국의 존재, 역외국가이지만 동아시아 질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존재, 냉전기에 봉합된 식민과 전쟁의 역사적 상처, 국민국가 형성의 지체현상 혹은 불안정성이라는 '동아시아적 조건'이 지역공동체의 성립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라기보다 오히려 여타의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동아시아 지역질서 성립가능성의 조건이라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성립가능성을 둘러싼 회의론과 별도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및 공동체 수립 사이에 존재하는 내재적 연관이 해명되지 않았다는 비판,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한반도의 필요성만을 앞세운 한반도 중심주의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 지속되어왔다. 이는 창작과 비평 그룹의 동아시아론 즉 과정으로서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지닌 핵심적 문제의식, 즉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명제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창비그룹의 동아시아론은 이러한 비판에도 응답하면서 복합국가론, 소국주의론, 이중적 주변, 핵심현장 등 다양한 개념을 제출하면서 한반도의 분단극복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초래하는 긍정적 변화를 다각도로 탐문하는 이론적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3. 분단체제 극복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연관성

1) 분단체제론의 '동아시아적 시각'과 한반도 중심주의

창비 그룹 동아시아론의 가장 큰 관심은 한반도의 분단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극복하는가에 있었다. 이처럼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관심이 동아시아론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한반도 분단극복의 문제가 결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탈냉전 및 평화를 향한 도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168] 요컨대, 창비 그룹의 동아시아론은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반도 통일을 동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틀로서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분단극복을 축으로 삼아 동아시아를 하나의 사유단위로 설정하는 지점에서 이들의 동아시아론은 출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동아시아적 시각'이 딛고 선 지반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과제였으며, 따라서 동아시아론의 제기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과 깊은 이론적 연계성을 지닌다. 분단체제론에 따르면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은 세계사의 향방과 밀접히 관련된다. 분단체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서 진영모순과 민족모순이 복합적으로 엉켜있어 세계체제의 모순이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따라서 분단체제의 극복과 변혁은 세계체제 차원의 변혁운동과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론이 한반도를 중시하는 이유는 분단된 한반도가 세계 차원의 패권적 지배체제의 중요한 거점인 만큼, 이곳에서의 변혁이 세계적 차원의 억압체제에 대한 공격이자 자본주의 세계체제 변혁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169]

---

167)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51쪽.
168) 임우경, 「비판적 지역주의로서 한국 동아시아론의 전개」, 6쪽.

백낙청은 세계체제와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의 구체화 과정에서 탈냉전과 더불어 부각된 동아시아라는 중간항에 대한 체계적 인식의 필요성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분단체제와 세계체제 사이에 중간규모의 체제가 동아시아에 존재한다고는 보지 않았다.[170]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이 국민국가와 세계체제 사이에 놓여 있는 중범위 차원을 배제하는 국민국가-세계체제의 이중구조론이라 한다면, 백낙청 역시 한반도적 수준의 분단체제와 세계체제 사이에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버금가는 체제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러스타인의 이중구조론을 따르고 있다. 백영서는 백낙청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한반도 분단 상황을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결부해 파악하고, 세계체제와 개별 국가들 사이에 자리하는 중범위적 공간으로서 동아시아를 설정함으로써 "일국적 시각과 세계체제적 시각의 매개항으로 '동아시아적 시각'을 제기하였다.[171] '동아시아적 시각'은 국민국가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적 시공간 개념으로 매우 유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국민국가적 시공간을 절대화하지 않으면서도 곧 바로 '장기적 - 지구적' 시공간으로 옮겨가지 않는 중간적 시공간, 곧 '국면적 - 지역적'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민국가를 넘어선 지역질서의 공간과 수십년의 중기적 시간대가 만나는 범주"로서 "복수의 국민국가들이 독자적인 지정학적· 문명론적 조건을 공유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속해온 시공간"이다.[172]

우선, 분단체제의 변혁이 세계체제의 개선과 변혁을 초래한다는 인식은 '동아시아적 시각'을 매개로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백낙청은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동아시아의 협력과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으로는 첫째 남북의 대결 상황이요, 이어서 일본에 대한 타국 민중들의 불신과 중.일 간의 주도권 다툼 가능성을 들 수 있겠는데, 이 가운데 남북대결은 더 말할 것 없고 나머지 문제들도 한반도의 민중이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룩하느냐 마느냐에 좌우되는 바 크다."[173] 그의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곧바로 동북아 평화체제의 발단이자 핵심"이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분단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가 한반도에 형성될 때, 동북아는 당장의 전쟁위험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평화체제 건설의 한 모범을 얻고 그 연결 중심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를 것"[174]이라는 낙관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다음으로, 분단체제 극복이 동아시아 평화체제 혹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관건이라는 점은 동아시아와 세계체제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된다. 일찍이 최원식은 "동아시아는 특수한 지역사가 아니라 세계사의 향방에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풍부하게 내포한 세계사적 지역"[175]으로 동아시아의 지역적 위상을 추켜세웠다. 백영서는 동아시아가 세계사의 향방에 관건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라는 점을 보다 구체화하여, 동아시아를 "세계체제 수준과 적절한 국지화인 국민국가 수준을 동시에 감당하는 팽팽한 긴장을 지지해"주는 매개항이자, 나아가 "자본의 획일화 논리에 저항할 수 있는 거점"으로 간주한다.[176] 요컨대, 창비 그룹

169)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46쪽.
170) 백낙청,「다시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비, 2006, 125쪽.
171) 백영서,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동아시아의 귀환』, 창비, 2000, 66쪽.
172) 박명규,「복합적 정치공동체와 변혁의 논리」, 11쪽.
173) 백낙청,「다시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비, 2006, 127쪽.
174) 백낙청,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가능한가」, 241쪽. 최원식 역시 동아시아의 주변부인 한반도에서 분단체제를 변혁한다면 탈패권적 동아시아평화체제로 향하는 출구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최원식, 「주변,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4, 321쪽)
175) 최원식,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창작과 비평』 1993년 봄호, 219쪽.

에게 동아시아는 하나의 지역이면서도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변혁에 개입하려는 지향을 내포하며, 또한 세계체제에 변혁을 일으킬 만한 역동적 가능성을 내포하는 '세계사적 지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당연히 예상되는 것처럼, 이들의 동아시아론이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을 다른 것들보다 우선시하는 한반도 중심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한국의 타자적, 주변부적 위치가 동아시아의 균형적 세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인식론적인 당위성만을 주장할 경우… 동아시아론의 다양한 쟁점들을 한반도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177]거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상호외재성에서 연유하는 한반도 중심성"이 문제이며, 분단체제와 동아시아론이 내재적으로 결합하려면, "분단체제 극복 과정 자체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장이고 동아시아공동체의 출현을 예비하는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178]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 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창비 진영의 동아시아론을 두고 제기되는 한반도 중심주의라는 비판은 보다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한반도 중심주의는 마땅히 극복되어야 할 당위적 요청이지만, 한반도의 분단현장에 착근하여 문제의식을 발굴함으로써 그것을 지역화하는 시도 자체는 장려될지언정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체는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성립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양안(兩岸)관계, 중일 및 미중갈등, 동남아문제 등 각 지역의 다양한 현실문제들이 각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서로 연동될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체제 극복노력이 동아시아의 이러한 연동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 한반도의 분단극복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반도 중심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직결되어 있는 핵심사항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이들이 분단체제 극복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연관시키는 핵심개념인 복합국가론, 이중적 주변, 핵심현장은 모두 한반도중심주의라는 비판을 의식하면서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개념들이다.

2) 대안적 동아시아 상(像)과 복합국가론

일찍이 백낙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분단체제 극복을 논하면서 한반도 통일 이후의 국가 형태를 '복합국가'로 설정하고, 복합국가가 배타적 주권을 기반해 한반도의 주민만을 정치구성원으로 삼는 단일형 국민국가가 아니어야 한다는 지향성을 분명히 하였다. 국가주의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한반도가 단일형 국가로 통일된다는 것은 국내 민주주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연대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내부의 시민참여와 인권의 증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연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형태가 요구되는데 그것이 곧 복합국가이다. 복합국가 형성과정의 특성상 아무리 낮은 단계의 연합이라 할지라도 남북이 연합기구를 공동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주의가 완화되고 시민들의 권한은 증대된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실험중인 복합국가"는 "독특하게도 국가간의 결합이자 국민국가의

176) 백영서, 「진정한 동아시아의 거처」,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문학과지성사, 1997, 15쪽.
177) 이동연, 「동아시아 담론형성의 갈래들: 비판적 검토」, 『문화과학』 통권 52호, 2007, 110쪽.
178) 류준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아세아연구』 제52권 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9, 58-59쪽.

자기전환이라는 한 가지 양상을 겸"한다.[179]

백영서는 국가주의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이 자칫 단순한 반국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국가를 감당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이중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구체화될 '복합국가'에 대한 사고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복합국가란 "단일국가가 아닌 온갖 종류의 국가결합형태, 즉 각종 국가연합과 연방국가를 포용하는 가장 외연이 넓은 개념"이다.[180] 여기서 '국민국가를 감당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이중과제'란 근대와 탈근대의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논리를 복합국가론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국가 무용론(無用論)을 주창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통적 국민국가의 강점을 살리면서 한층 민주화된 국가구조의 창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복합국가론은 근대의 극복을 진지하게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근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181]

나아가 백낙청은 복합국가론이 분단체제 극복의 해법일 뿐 아니라 나아가 동아시아 협력과 연대의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실질적인 지역 통합은 주권국가 중심의 지역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초국경적 교류와 협동에 더 크게 의존하는 새로운 모형이 요구되는 데, 두 주권국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전제로 새로운 유형의 복합국가를 건설해가는 남북연합은 동아시아 지역연대를 위해서도 의미심장하다.[182] 주권국가로서의 불완전성이라는 동아시아적 조건을 염두에 둔다면 주권국가의 상호인정과 시민연대에 기반한 복합국가는 동아시아 지역연대에 하나의 참조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남북한이 느슨하고 개방적인 복합국가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곧 '동아시아연합'으로 이어지거나 중국 또는 일본의 연방국가화를 유도할 공산은 작더라도, 예컨대 티베트나 신장 또는 오끼나와가 훨씬 충실한 자치권을 갖는 지역으로 진화하는 해법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본토와 대만도 명목상 홍콩식 '1국2제'를 채택하면서 내용은 남북연합에 근접한 타결책을 찾아내는 데 일조할지도 모른다."[183]

백영서 역시 복합국가를 향한 과정이 동아시아공동체의 건설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복합국가란 틀이 갖는 중요성은 그 틀 안에 북한을 불러들여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면서 '남북의 점진적 통합과정과 연계된 총체적 개혁'에 북쪽을 참여시켜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덕에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할 때 늘상 '목에 가시'로 걸리는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요령이 된다. 나아가 대만과 중국대륙의 이른바 양안(兩岸)문제나 오끼나와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국민국가론이 안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참조물이 될 수 있다.[184]

백영서는 복합국가론과 결합된 동아시아론이 '한반도 중심주의'가 결코 아님을 역설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는 국가연합의 복합국가가 될 것이지만, 동아시아의 다른 곳에서는 제각기 국

179) 백영서, 「연동하는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29쪽.
180) 백영서,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63쪽.
181)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44쪽. 백낙청에 따르면, 복합국가는 자민족중심주의와 국가주의의 폐해를 경계하면서도 자칫 섣부른 반국가주의의 편향을 범하지 않도록 창안된 민주화된 국가구조다.(「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창작과비평』 105호, 1999, 23쪽)
182) 백낙청 「'핵심현장'에서 현대아시아사상의 탐구로」, 『논단과 현장』, 533-534쪽.
183) 백낙청,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한반도」, 242쪽.
184)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50-51쪽.

민국가의 형성경로에 대응해 '이중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합국가의 모습이 드러날 것[185]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복합국가는 한반도에서는 분단체제 극복운동을 통해 남북의 국가연합으로 드러나지만, 동아시아의 다른 곳에서는 각자의 처지에서 내부개혁을 동반한 다른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오끼나와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국민국가론이 안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참조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국가체계 내부문제인 오끼나와와 분단된 국민국가인 한반도의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오끼나와와 한반도에서의 작업을 쉽게 동일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두개의 분단국가가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와 달리, 일본이라는 강력한 단일형 국민국가가 자신의 '기지국가'적 성격을 호도하며 유지하기 위해 오끼나와를 거의 식민지처럼 이용하는 구조에서는 새로운 복합국가의 창출보다 기존 통일국가의 연성화(軟性化) 내지 복합화가 요구된다."[186]

이종석은 백영서의 이러한 주장이 남북의 체제통합의 구상으로 제기되었던 기존의 복합국가론을 보편적 지역통합이론으로 만듦으로써 복합국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동아시아 연구에 필수적인 역내 통합과 연대를 실천적으로 담아낼 이론적 틀을 제시한 것으로 고평(高評)하고 있다. 동시에 백영서의 논의가 규범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의 보편화 시도로 인해 시민참여형의 남북연합을 의미했던 초기 복합국가의 명증성이 어느 정도 희석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187]

3) 이중적 주변과 핵심현장

복합국가론에서 보듯, 창비그룹의 동아시아론은 한반도를 매개로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사유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 중심주의에 빠지거나 내부의 다양한 이질성을 억압할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한다. 백영서의 '이중적 주변의 시각'은 바로 이들의 동아시아론이 한반도를 특권화하거나 동아시아를 대안으로 내세우며 주변부의 특권화로 빠지기 쉬운 점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내부에도 다양한 주변-중심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복합적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기도 하다.

먼저, 백영서는 동아시아 내부의 중심-주변 관계에 대한 역사적 변화과정을 통해 동아시아의 주변에 위치한 한반도의 조절자 역할을 강조한다. 동아시아 내부의 제국적 질서를 형성하는 중심국가는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 미국으로 교체되어왔으며, 주변국가 역시 조공국, 식민지, 위성국으로 성격이 각각 변화되었다.[188] 중화제국, 일본제국, 미제국이라는 3개의 제국론에 입각할 때, 미래의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는 제국 중심부가 아닌 주변의 입장에 있는 한반도에서 그 역동성과 대안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주변에 위치해 있어 제국적

185) 백영서, 「연동하는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31쪽. 백영서에 따르면 '연동'은 연쇄와 달리 서로 깊이 연관된 동아시아가 다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서술하는 동시에 주체적인 연대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다.(16쪽) 그는 연동이란 말을 통해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는 복합국가론이 동아시아 협력과 연대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86) 백낙청, 「'핵심현장'에서 현대아시아사상의 탐구로」, 534쪽. 한반도에서 형성되는 국가연합이 동아시아 공동체에 필수적이나 그것은 "동아시아 고유의 지역연대 형성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을 제공"하는 것일 뿐임을 새삼 강조한 백낙청의 발언도 한국중심주의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주목된다.(백영서, 「연동하는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31쪽)

187) 이종석, 357-358쪽,

188)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2005, 11쪽.

질서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기억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소중심’의 역할을 한 적이 있어 그 가능성과 한계를 두루 경험한 한국이 여러 중심들 사이에서 조절자”[189]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변성’이 한반도에만 배타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현재 일본 영토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복잡한 근대사의 질곡을 거치며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한 오끼나와와, 흔히 중국의 일부로 인정되는 동시에 독자적인 정체성을 주장하는 대만의 경우 어떤 점에서는 한국에 비해서도 더 주변적이다.[190] 이런 점을 감안하여 백영서는 “중앙과 주변의 관계”를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가리키지 않고 무한한 연쇄관계 또는 무한 억압이양(抑壓移讓)의 관계를 맺는 것”[191]으로서 새롭게 정의한다. 중심의 중심에 있는 측은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은 주변에 있으면서도 한층 더 주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의 위치에 있게 되는 식으로 중심-주변의 관계는 무한한 연쇄고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관계를 통해 동시에 억압을 이양한다. 백영서가 말하는 이중적 주변은 중심-주변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오끼나와와 같은 또 다른 주변을 발견함으로써 무한한 연쇄관계로 중심-주변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주변‘들’을 발견함으로써, 중심-주변 관계의 절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편향, 예컨대 한반도의 주변성에 대한 강조가 그 역방향인 한반도중심주의로 경사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백영서에 의하면 주변이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각과 관련된 것이며, 따라서 가치론적 의미맥락을 지닌다. 중심과 주변의 자리가 이렇게 무한연쇄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면 언제든, 누구든 주변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심의 시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자신보다 한층 더 주변적인 부분을 억압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구조를 문제삼는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선택이다. 중심-주변의 관계 속에서 주변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차별 당하는 주변이면서 때론 한층 더 주변적인 곳을 억압하는 중심으로 기능하는 권력 구조에 자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주변이 스스로를 특권화하는 태도마저도 비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백영서는 주변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을 지배 관계에 대한 영원한 도전이요 투쟁이라고 본다.[192]

나아가 백영서는 ‘이중적 주변’이 중심에 의한 피동적 정의임을 고려해 동아시아의 시공간적 모순이 응축된 장소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핵심현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핵심현장은 중화제국-일본제국-미제국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의 이동에 의해 위계 지어진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모순이 응축되었고,식민과 냉전이 포개진 영향 아래 공간적으로 크게 분열되어 갈등이 응축된 장소”이다.[193] 그는 핵심현장에서 시공간의 모순과 갈등이 응축되고 서로 연동되어 있

189) 같은 책, 30쪽. 백영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행하는 한국의 역할을 두고, “동아시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중화제국이나 일본제국 질서처럼 중심국가에 주변국가들이 종속되는 형태의 통합이 아니라 주변에서 중심으로 확산되는 지역통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24쪽)

190) 이정훈, 앞의 글, 400쪽.

191) 백영서, 「프롤로그: ‘핵심현장’에서 찾는 동아시아 공생의 길」,『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 공생사회를 위한 실천과제 』, 창작과비평사, 2013, 9쪽.

192) 백영서,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4, 16-18쪽. 최원식 역시 “기존의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중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심주의 자체를 철저히 해체함으로써 중심 바깥에, 아니 ‘중심’들 사이에 균형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최원식, 「주변,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 321쪽)

193) 백영서, 「‘핵심현장’에서 찾는 동아시아 공생의 길」,『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2014, 17쪽.

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을 해결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핵심현장'인 오끼나와의 자치권 강화는 일본국가 개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그 배후에 있는 미일동맹에도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크며, 금문도, 오끼나와, 개성공단, 두만강 등 층위는 서로 다르지만, 국경횡단적으로 연결된다면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기반은 탄탄해진다. 이런 '핵심현장'은 모순의 집결지인 만큼 여기서의 변화는 지역 수준의 변화를 추동한다는 것이다.[194]

4. 나오는 말

한반도에 작동하고 있는 분단체제의 극복이 파행으로 점철되었던 동아시아가 새로운 연대 속에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냉전체제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은 창비 그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동아시아론의 핵심테제이기도 했다. 이들의 동아시아론은 완결된 담론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적 동아시아 상이 여전히 현실적인 동아시아적 조건과 괴리된 규범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동아시아 지역연대론은 분단체제 극복과정에서 기존의 국민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공동체, 즉 복합국가와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통일과 동아시아 지역연대의 내적 연관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양자의 내적 연관을 단순히 선언적 차원에서 표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개념을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미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먼저 미일동맹 강화와 미일 대 중국의 갈등이 동아시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분단극복 문제와 동아시아의 평화적 지역질서는 긴밀한 연관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반도 문제가 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안보현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은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분단극복 과정에서 출현하는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의 국가주의를 완화시키고 역내 시민사회들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민지 억압과 냉전적 적대 속에서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시민연대의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탈냉전후 역사, 평화,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시민연대는 분단체제의 극복과정과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아 지역연대의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동아시아 지역평화와 한반도 분단극복의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길도 열리게 된다는 점이다. 해외 디아스포라가 시민참여형 남북연합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연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열릴 수 있다.

194) 백영서, 「연동하는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37쪽.

〈포스트 통일과 동아시아 지역연대〉에 대한 토론문

이상훈 (대진대 역사문화콘텐츠학부)

※별지첨부※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을 통해서 본 남북 연대방안 -6.15민족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 경험을 중심으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들어가는 말 - 두 개의 경험

탈냉전 이후 한국 사회는 주요한 두 유형의 남북관계를 경험해왔다. 하나는 남북의 접촉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를 쌍방관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발전 혹은 규정하려는 노력이었고, 또 하나는 접촉과 교류를 억제하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남쪽이 원하는 단(單)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이었다. 전자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으로 공식화된 것이라면, 후자는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불리는 정책들이었다.

김대중정부는 6.15공동선언을 통해서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의 연합제 사이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을 설득하여 남북연합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노무현정부는 10.4선언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위의 가동과 남북군사공동위의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정상회담의 수시화(隨時化)와 총리급 당국회담의 총괄조정이라는 사실상의 남북연합 초입에 해당할 수 있는 단계로 남북관계를 진입시켰다.

이명박정부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선(先)비핵화 논리 위에 한국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핵심이 되는 '남북연합'론을 사실상 수정하려 하였고,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남북연합 무시 내지 수정의 기조를 강화하여 군사력 등 힘의 우위 과시와 내부 불안정성 자극을 통해 남한 주도의 '(비합의)통일국면'을 열겠다는 '통일대박'론을 제기하였다.

이상이 당국관계를 중심으로 본 소위 '남북연대'의 두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 당사자인 민간의 남북교류는 교류 자체의 자연적 발전의 흐름 외에 목적의식적 남북관계의 설계와 실천을 추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일반적인 사회문화교류 혹은 대북인도지원사업이 주를 이루는 민간교류는 목적의식적 설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해당 분야 혹은 부문에 한정되는 것이었다. 이는 경제와 문화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가 발전하면 그 '파급효과의 자동성'(spillover)에 의해 남북의 정치적 통합이 촉진될 것이라는 신기능주의의 영향이라기보다 민간교류는 본질적으로 교류내용과 추진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이 가장 크게 작동하기 때문이었다.

민간교류 중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통합에 독자적인 설계와 구상을 가지고 당국관계 중심의 남북관계 운영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온 거의 유일한 케이스는 6.15민족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의 경험이었다. 6.15남측위원회·북측위원회·해외측위원회로 구성된 6.15민족공동위원회와[195]

195) 이 글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공동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북측위원회·해외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북측위원회·해외측위원회)를 기본명칭으로 사용하되, 해외를 제외하거나 남북 간의 동학을 강조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현곤의 방식을 따라서 '6.15남/북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정현곤, "남북거버넌스연구(2001-2007) - 6.15남/북위원회를 중심으로"(경남대 박사논문, 2015. 6). 또 6.15남측위원회가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그 6.15공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6.15와 8.15 등의 민족공동행사 경험은 남북정상회담 등 당국관계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당국관계와 상보적(相補的) 관계를 형성하면서 '남북거버넌스'의[196] 형성과 성장의 한 주역으로 역할 하였다.

이 글은 6.15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의 경험을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의 추진이라는 맥락에서 총괄하고 그를 토대로 향후 남북연대 추진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이 글은 민족공동행사가 실제로 추진되었던 2001년에서 2008년까지의 6.15민족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의 경험을 주로 다룰 것이지만, 구체적 사례분석보다는 주로 민족공동행사의 설계와 이론적 배경,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시민참여형 남북연대의 발전은 시민참여 통일과정과 남북연합 추진의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시민참여형 남북연대와 관련된 일종의 시론적 문제제기이다. 관련 연구의 축적이 별로 많지 않은 조건과[197] 본격적인 사례연구에 필요한 기록 자료의 부족 등으로 많은 경우 필자의 기억과 경험에 의존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의 경험은 그 성과와 한계의 모든 것이 남한의 시민사회가 남북의 두 국가주의와 갈등하면서 새로운 남북거버넌스의 형성을 추구해나간 귀중한 역사적 경험이다.

1.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의 배경과 이론

1)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 구상(構想)의 역사적 배경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198] 추진의 이론적 연원은 사실 1949년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연석회의는 한반도에서 미소 대립의 질서가 확정되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의 정확한 의미는 2001~2008년까지 민족공동행사가 추진되던 시기 6.15남측위원회를 주도하던 백낙청 상임대표와 시민운동, 민화협, 종교계 등의 주요 인사들을 지칭한다. 이 구별은 이들이 몇몇 문제에서는 '통일연대'를 비롯한 전통적 통일운동세력과 구별되는 입장과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196) 거버넌스는 개념의 다양성과 모호함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복잡한 개념이다. 더구나 남북거버넌스라고 할 때는 초국적 거버넌스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현곤의 다음과 같은 남북거버넌스 정의를 대체로 수용한다. "남북 거버넌스는 남과 북의 정부 간 관계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합의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의 정부뿐 아니라 기관과 단체, 개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계하여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를 촉진할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이익이라는 목표를 놓고 이를 달성해 가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 전반을 말한다. 여기에는 제도나 레짐, 기구를 망라하며 오랜 기간 적대적 체제 속에서 다르게 살아온 관행이 남북의 제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정현곤, "남북거버넌스연구(2001-2007)," 39쪽. 정현곤과 필자는 6.15공동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적어도 2001-2008년 동안의 기간은 대부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이론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7) 6.15공동위와 민족공동행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글은 많지 않다. 앞에 언급한 정현곤의 연구가 가장 최근의 것이고, 이외에 김창수, "북 민간교류 사례 분석 : 2001년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을 중심으로"(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치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공동행사에 관한 연구 : 행사의 경과와 주최 조직의 변화 발전을 중심으로"(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진향, "남북한 민간 사회단체 교류협력방안 : 2001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 제6권 제4호 통권21호, 2001) 정도가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198) 이 글에서는 6.15공동위원회의 성립과정과 조직 및 운영구조, 그리고 민족공동행사의 구체적 추진과정의 서술은 생략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현곤의 논문과 6.15남측위원회가 2006년에 발간한 『민족공동행사백서 I 총괄편 2000-2006. 6.15』(서울: 여백, 200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고 있던 시기에 전개되었던 남북협상운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연석회의를 북한정권의 정통성 근거로 활용하면서 '남북 정당사회단체 정치협상회의' 혹은 '대민족회의' 등 비슷한 내용의 각종 제안들을 1990년대 말까지 거의 매년 제안해오다시피 하였기 때문에[199] 사실상 이 연석회의 구상은 통일전선에 기초한 북한의 핵심 대남전략으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남한에서는 이 연석회의의 역사 자체가 부정되거나 혹은 금기시되게 되었다.

전통적 통일운동의 전성기인 90년대에 진행되었던 '범민족대회'도 그 근원은 남과 북, 해외동포까지 광범위한 민족구성원이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구상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실에서는 정부 탄압으로 남북 만남의 장이 무산되면서 통일문제를 매개로 한 반정부투쟁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남북해외 3자연대조직을 표방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범민족대회의 틀 안에서 추진하려던 '범민족회의'는 북한이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주장해오던 '남북정당사회단체 정치협상회의' 혹은 '대민족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80년 말 이후 남한에서 민족해방론에 입각한 전통적 통일운동이 고양되면서 90년대 들어서자마자 북한은 이른바 '제 정당 사회단체 련합회의'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북한 스스로 이를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 북은 1990년 6월 4일에 '공화국 북반부 제 정당 사회단체 련합회의'를 열었고 뒤이어 7월 3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대표들의 련합회의'를 열었다.[200] 물론 북한에서의 정당, 단체 연합체의 위상은 당-국가기구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결의체, 운동체로 규정되는 것이었다.

금기시된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구상을 남한 민간통일운동의 발전 과정에 합법적으로 복권시킨 것은 1998년에 결성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였다. 민화협 결성 당시 민화협 주도세력들은 민화협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민화협은 그 출발 동기 여하를 떠나 통일시대의 대의기구를 준비하는 모체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 통일국가의 대의기구는 48년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예에서 보듯이 정당사회단체간 협의기구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설적인 정당사회단체협의체인 민화협은 통일시대의 대의기구로 발전할 맹아적 요소를 안고 있으며, 이 민화협을 토대로 김구 선생이 남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느냐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민간통일운동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201]

민화협은 이러한 정체성 자각을 토대로 결성하자마자 바로 북에 '남북정당사회단체공동회의'를 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민화협의 이러한 제안은 초기에는 북의 외면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은 당연히 민화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6.15남측위원회의 사업방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의 '남북연대'에 대한 인식과 구상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

한편 6.15남측위원회가 성립하면서 초대 대표로 취임한 백낙청은 그 자신이 '분단체제론'의

199)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 "북한의 「정치협상회의」 형태 대남제의 주요일지"(2000. 2).
20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1), 109-110쪽 참조.
201) 이승환, "민간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민화협정책위원회 지음, 『민족화해와 남남대화』(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주창자로서 자신의 이론을 6.15남측위원회 활동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 6.15남측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남북연대'와 관련한 자신의 인식과 구상을 심화시켰다.

백낙청은 1994년에 세계 자본주의 체계와 한반도가 만나는 매개항으로서 '분단체제'를 개념화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해 "분단체제 극복의 방편으로 채택되는 연방 또는 연합 체제가 '국가' 개념 자체의 상당한 수정을 동반하는 새로운 복합국가 형태의 창출이 아니고도 곤란할 것[202]"이라는 선구적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후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한 걸음을 뜻하면서도 분단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피하는 국가체제라면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복합국가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이 불가피하다는[203] 주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백낙청의 입장은 2000년의 6.15공동선언 발표와 이후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로 통일운동 전면에 나서면서 '한반도식 통일론'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그는 단일형 국민국가로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를 '1단계 통일'이라 간주할 수 있다면서, 무엇이 통일이며 언제 통일할 거냐를 두고 다툴 필요 없는 새로운 의미의 '한반도식 통일' 개념을 제안하였다.[204]

백낙청은 이런 1단계 통일이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는 "연방(federation)보다 북측에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연합(confederation), 그것도 '낮은 단계의 연합'(영어로는 Korean Confederation이라기보다 Association of Korean States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205] 이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이 만능통치약은 아니지만 "국가연합이 기존 두 국가의 주권을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통일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불식해주는 동시에, 분단체제를 그대로 둔 채 경제통합을 달성한다는 허황되며 위태롭기까지 한 발상을 '통일'을 굳이 앞세우지 않고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06]

제3당사자론

그리고 백낙청은 이러한 남북연합의 건설과정이 시민참여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한반도식 통일과정의 핵심 특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것(남북연합 건설과정)이 시민참여에 의해 추동되는 과정임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점에서 '제도로서 통일'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것은 아니다. 한반도에서의 연합국가 건설은 당국자들이 통일국가의 다양한 제도를 놓고 선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점진적·단계적 통일과정이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줌을 알면서도 그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던 당국자들이 앞으로 이 과정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어떤 제도를 갖출지조차 모른 채 미지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한반도식 통일의 핵심인 것이다."[207]

백낙청은 이런 견지에서 남한 시민사회가 '남북관계의 제3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른바 '제3당사자론'을 전개하였다. 백낙청의 '제3당사자론'은 6.15남측위원회의 활동에

---

202)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35쪽.
203)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27쪽.
204)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서울: 창비, 2006), 20-21쪽.
205) 백낙청, "2013년체제와 포용정책 2.0" 『2013년체제 만들기』(서울: 창비, 2012), 172쪽.
206) 백낙청, "북의 핵실험 이후: '제3당사자'로서 남쪽 민간사회의 역할"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서울: 창비, 2009), 150쪽.
207) 백낙청, 앞의 글, 151쪽. 백낙청의 이러한 인식은 "관은 민에 밀리면서 민과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 문익환의 '민 주도 통일론'의 맥락을 이어받고 있다.

대한 일종의 정체성 부여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것은 남북의 양 당국이라는 제1, 2의 당사자가 할 수 없는, 오직 '제3당사자'인 남쪽 시민사회만이 감당해야 하는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고, 백낙청은 국가연합으로의 '제한된' 권력이양을 추동하는 동력이자 다층적 참여 주체로서 시민사회를 상정하였다.

"남북의 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6.15공동선언 제2항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이 모두 그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 당장에 체제위기가 긴박한 북측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앞세워 남북의 점진적 통합과정이 가져올 또 다른 위험에 대한 논의를 미뤄두자는 경향을 보였고, 남측은 교류협력을 통한 개혁·개방 유도라는 낙관론 속에 '일정 기간 이후 흡수통일'이라는 단꿈을 꾸고 있는지 모른다. 그 내막이야 어떻든, 국가연합기구로의 극히 제한된 권력이양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한 추동력이 민간으로부터 나오지 않고서는 수습책이 마련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남쪽의 민간사회라는 '제3당사자'의 필수적인 몫이 떠오른다. 물론 북쪽 민간사회도 '제4의 당사자'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의 통합과정을 2개 당사자에게, 즉 정부당국에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원칙이다."[208]

그러나 백낙청의 제3당사자론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남한의 민간통일운동이 '제3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의 의미도 함께 지니는 것이었다. 이는 6.15남측위원회 안팎에 존재하는 몇몇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그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통일운동 역시 국가연합을 의식적인 목표로 설정한 예는 드문 편이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민족공조'의 원칙론을 되풀이하는 데 몰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당국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막연한 낙관론에 빠진 채 일상적 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만족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해결에 다가가고 남북교류가 대폭 확대되는 국면에 들어서면 이런 대응만으로 격변하는 사태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209]

이 언급은 이른바 민족해방이론에 근거한 전통적 통일운동만이 아니라,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대북지원운동이나 사회문화교류에 안주하려는 일부 단체들에 대해서도 제3당사자로서의 자각과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함을 촉구한 것이었다.

또 그는 당시 시민운동진영의 일반적 경향, 이른바 통일이라는 민족주의 대신 평화라는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평화공존이냐 통일이냐라는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3당사자라는 자각이 누구보다 분명한 남한의 시민운동이야말로 '국가연합'과 같이 굳이 통일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두 주권국가의 평화공존이면서, 한반도의 특이한 역사적 맥락에서는 남북의 재통합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디딘 '1단계 통일'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통일 대 평화'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하였다.[210]

결국 백낙청은 남북연합을 '평화공존과 1단계 통일'을 동시에 성취하는 '한반도식 통일'의 핵심과정이라고 보고, 그가 참여하고 주도한 6.15남측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가 남북연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확대와 '제3당사자'로서의 성장에 큰 의미를 갖는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

208) 백낙청, 앞의 글, 148~149쪽.
209) 백낙청, 앞의 글, 149쪽.
210) 백낙청, 앞의 글, 150쪽.

‘시민참여형 남북연합’

한편 이승환은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의 의미를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추구하는 일종의 시험과정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이라는 구상을 제시하였다.[211]

그는 당시 일반적 상식처럼 이야기되고 있던 평화체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남북연합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일종의 ‘평화체제 선행론’에 대해, “남북연합을 실현하려는 남북 민중의 합의와 이를 집합적 의지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남북연합에 대한 의식적 추진을 통해 평화체제의 문제를 더 진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평화체제가 완결되어야 남북연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남북연합을 상대적이지만 독자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아니다. 평화체제는 제쳐두고 남북연합만 추진하는 것도 안되지만, 남북연합을 준비하지 않고 평화체제에만 몰두한다고 해서 평화가 달성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다른 요소들은 불충분해도 낮은 단계의 연합부터 실현해갈 수 있다는 주장은, 남북연합의 추진과정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인식과 쌍을 이뤄야 한다. 이는 남북연합 프로세스의 ‘상대적’ 독립성을 의미한다.”[212]

이승환은 남북연합을 실현하려는 남북 민중의 합의와 이를 집합적 의지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남북연합 수립단계에서부터 정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13]

원래 시민참여의 문제는 “당위나 정치적 제스처로 제기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추상적인 국민 일반의 심정적 지지나 동의가 아니라 “남북관계에 다양한 사회주체의 자발적 영역과 활동공간을 수용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이다.[214] 그런데 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여가 얼마나 많으냐는 문제가 아니라, 통일과정의 단계적 진행에 합의한 순간부터 그 과정을 정부당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질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215]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다양한 사회주체의 자발적 영역과 활동공간의 수용은 그것을 보장하는 ‘당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플랫폼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승환은 ‘시민참여 통일운동’은 통일과정에서 시민참여형 플랫폼의 설계를 필수조건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그가 주목한 것이 바로 북한이 오래전부터 ‘연방제’를 합의·추진하는 플랫폼으로 제기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였다. 그래서 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혹은 남북연합을 추진하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설정하고 그를 위한 경험을 축적,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바로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족공동행사는 그 자체가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축소판이자 그 경험을 축적해가는 시험대(test bed)라 할 수 있다.

남북연합 건설과정의 시민참여형 플랫폼으로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상정하고 민족공동행사를 그 훈련과정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우선 남북연합은 북과 함께 수립해가는 것이라 북

---

211) ‘시민참여형 남북연합’ 구상과 관련해서는 이승환,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의 추진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의제 2013’』(서울: 민주정책연구원, 2012)를 참조.

212) 이승환, 앞의 글, 35쪽.

213) 이승환, “이명박정부 이후의 대북정책 구상,” 『창작과비평』 2012년 가을(통권 157호).

214) 박명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서울: 창비, 2012), 79쪽.

215) 백낙청, “2013년체제와 포용정책 2.0,” 170쪽.

한의 주장을 일정하게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남쪽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같은 숙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다원화된 남쪽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보다 남이 이를 더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된 상황변화 때문이었다.[216]

또한 정당사회단체협의구조는 정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민관 협치(協治)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지니기 때문에 '정부간 협상'과 다종다양한 민간교류의 중간지대에서 정부간 협상과 민간교류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6.15북측위원회의 '남북연대' 논리

1) 연합과 연방의 문제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들의 남북연대에 대한 기본인식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①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 실현, ② 제3당사자인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국가주의 통제, 즉 시민참여형 남북거버넌스의 추구, 그리고 ③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의 추진 플랫폼으로서의 '남북정당사회단체협의구조'의 형성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의 인식과 6.15북측위원회의 인식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었을까? 물론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의 인식은 남측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별개이고 때로 불일치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6.15북측위원회의 경우 북한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다.

우선 6.15공동선언 제2항의 현실태가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백낙청 등 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의 인식과 달리 6.15북측위원회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연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연방국가'를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제2항 합의와 관련한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안경호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 그해 10월 6일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기념식에서 한 보고연설에서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관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217]이라고 하여, 사실상 남측의 남북연합보다 더 국가연합에 근접한 구상으로 보였다. 민족통일기구라는 초국적 기구는 '국가연합'의 핵심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고에 대한 당시 <노동신문>의 해석은 "북과 남의 합의대로 통일방도에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고 민족자주통일 실현에로 나가야 하며 련방통일국가 창립에 저촉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하고 북남 사이의 대화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218]고 하는 것이었다.

이는 201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30돐 평양시 보고대회'에서의 보고내용도 마찬가지

---

216) 이승환, "이명박정부 이후의 대북정책 구상"

217) <조선중앙방송>, 2000년 10월 6일자. 이종석, 『한반도평화통일론』(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356-357쪽에서 재인용.

218) <로동신문>, 2000년 10월 7일자.

였다. 당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은 "련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1991년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과 지방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가는 방향에서 련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 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 조국통일을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연방국가 창설안이라는 기존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219]

장석의 주장은 보다 명료하다. 그는 "김정일 장군의 <련방련합제>와 관련해 우리가 명백히 인식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련방연합제>가 고려련방제를 포기하고 남한의 련합제를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고려련방제를 국가련합 통일안과 기능주의적으로 절충한 것이라는 견해는 잘못된 리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조선에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제시된 낮은 단계의 련방제는 높은 단계의 고려련방제로 가기 위한 것으로 고려련방제 통일방안에 포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220]라고 주장하였다. 장석의 주장은 6.15공동선언 제2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통일국가로서의 고려연방제 추진이라는 기본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더 낮은 수준의 연합'과 '포기할 수 없는 고려연방제 통일' 사이의 차이는 6.15공동위원회의 활동과 민족공동행사 추진과정에서 그 자체로는 6.15남/북위원회 사이의 갈등으로 외화되지 않았지만, '남북정당사회단체 협의구조'의 형성이나 남북거버넌스의 추구과정에서 6.15남/북위원회 사이의 근본적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을 이루고 있다.

2) 민족공조 혹은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북한이 남북연대의 제도적 내용을 낮은 단계의 연방 추구를 통해 '잠정적으로는' 남쪽 정부와의 공통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북이 추구하는 '고려연방제' 실현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서 찾았다면, 그런 통일과정의 성격을 이념화하여 제시한 것은 '민족공조' 혹은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이었다.

6.15공동선언 제1항에 나오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이념으로 격상시켜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으로 처음 정식화한 것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었다. 그는 "북남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민족단합의 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대강"[221]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북이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을 강조하면서 그 표현을 6.15공동위원회의 각종 문건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대개 2003년 이후부터였고, 그 이전에는 주로 '민족공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민족공조라는 표현을 북한식으로 해석하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족구성

---

219) <로동신문>, 2010년 10월 8일자. 이 기사에 따르면 "보고회에는 양형섭 동지와 로두철 내각부총리, 김영대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련학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사회단체,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6.15북측위원회의 구성원들이다.

220) 장석, 『김정일장군의 조국통일론 연구』(평양: 평양출판사, 2002년), 385쪽.

221) 김정일, "조국통일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2000년 6월 30일), 『김정일 선집 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62쪽.

원 모두가 마음과 뜻, 힘과 지혜를 하나로 합치고 서로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사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과 전혀 의미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민족공조는 남쪽에서 '반미자주'의 의미보다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을 호소하는 '민족단합'의 강조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6.15남/북위원회 사이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별 논란이 되지 않았고 각종 문건에도 민족공조라는 말이 아무 문제없이 상용되었다.

반면 북한이 새로 정립하고 남측에 수용할 것을 요구한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은 민족공조와 달리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222] 북한이 강조하는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이 한미동맹의 해체와 조선민족 대(對) 미국의 대결구도를 통해 통일을 이루자는 의미로[223] 이해되기 십상이고, 이는 6.15선언의 제1항의 의미를 '북한식 해석'으로 대체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념화는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북은 이미 1992년 초에 미국에 사람을 보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다고 전했다는[224] 북한의 대미인식 유연화 경향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 유명한 일화는 북한이 남한의 대미관계, 즉 한미동맹을 인정하면서 그를 전제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고, 이런 바탕 위에서 6.15공동선언 제1항과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었다.

'우리민족끼리'가 이념화되어 북한의 통일전선적 반미통일론으로 교조적으로 해석될 경우 "평화는 민족의 생존과 통일의 이름하에 군사주의에 자리를 내주고, 민족은 반미주의 또는 반제국주의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엄중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225]

이는 결국 '우리민족끼리'라는 보통의 말이 '리념'으로 격상되면서 발생하는 과잉 이데올로기화의 문제였다. 따라서 6.15남측위원회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라는 6.15공동선언 제2항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으로 이데올로기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6.15남/북위원회 사이의 논란과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쉽게 정리된 것은 매우 의외의 일이었다.

남북 양 정부는 2005년 6월 21~24일 개최된 제15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우리민족끼리 이념'이란 말을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이 공동보도문에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회담 직전의 6.15평양축전 중에 개최된 김정일-정동영 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참가 약속을 받아낸 조건이라 남측 당국이 그만한 유연성을 발휘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당시 정부 일각에서 북의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특별한 이론적 체계나 정치한 논리가 없고 현실의 필요에 의해 구호로 제시된 것" 정도로[226] 보던 시각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

222) 6.15공동위원회가 정점에 있던 2005년의 경우 공동문건을 채택하면서 북한이 6차례 '우리민족끼리 정신' '우리민족끼리 이념'과 같은 문구를 요구해왔으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등의 표현으로 바꾸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6.15기념일의 명칭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할 것을 남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는데, 2005년 6.15평양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4월의 실무접촉에서 당시 북측 단장은 "우리민족끼리의 문구는 이미 북남의 최고 수뇌부가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왜 남측은 말로는 우리민족끼리 하자면서 활자화하는 것에는 주저하는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명칭을 정하는 문제는 근본문제이며 이를 합의하지 못하면 6.15공동행사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발언하고 있다.

223) 엄국현,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평양: 평양출판사, 2007), 170-206쪽.

224) 임동원, 『피스메이커』(서울: 중앙북스 2008), 115~116쪽.

225) 박순성, "북핵실험 이후, 6.15시대 담론과 분단체제변혁론," 『창작과비평』, 2006년 겨울호, 338쪽.

226) 이종석, 『한반도평화통일론』, 195-198쪽. 당시 이종석은 NSC의 사무차장이었고 이후 2006년 2월

된다.
어쨌거나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으로 정식화한 북한의 남북연대 논리는 통일문제를 반미자주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북한식 민족해방통일론의 연장 시도라 할 수 있고, 6.15남/북위원회 사이의 문건 조율과정에서 항상 논란을 발생시켰다. 이는 6.15남측위원회의 남북거버넌스 확장 노력에 지속적인 부담을 안겨주었다.

3. 6.15공동위원회와 ‘정당사회단체 연대기구’

1) ‘정당사회단체 연대기구’라는 정체성

남북이 서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일은 없지만,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모델을 중시한 것은 6.15남/북위원회 사이에 별다른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은 6.15공동위원회의 결성으로 그간 북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혹은 ‘정치협상회의’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판단하였다. 종단과 시민사회, 민화협과 전통적 통일운동 진영 등 남측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간통일운동 진영을 포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6.15남측위원회와 달리, 6.15북측위원회은 처음부터 정당사회단체연합체의 성격을 지니는 구성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아래 표에 제시된 6.15북측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표1>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구성

	1기(2004.12)		2기(2006.3)
명예 위원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김기남(노동당비서)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로두철(내각부총리)
	류미영	조선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위원장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	안경호
부 위 원 장	강련학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오익제(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
			강련학
	김경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김경호
			김진성(문화상)
	렴순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렴순길
			김완수(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강창욱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창욱
			권호웅(북남상급회담 북측단장)
	박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박순희

부터 정동영에 이어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장	성자립(김일성대학 총장)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
			강능수(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삭제
	김정호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김성국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국
	전금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전금진
	정운업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정운업
			정덕기(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
	김유호	범민련북측본부 부의장	김유호
			박경철(김일성고급당학교 부교장)
	리충복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리충복
	유영선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유영선
			김인삼(김일성고급당학교 교원)

출처: 정현곤, “남북거버넌스연구(2001-2007),” 135쪽.

6.15북측위원회의 정당사회단체연합체적 구조는 정당을 대표하는 3인의 명예위원장(노동당을 대표하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조선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북의 주요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부위원장단의 면모로 확인된다. 특히 명예위원장인 양협섭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김경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렴순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창욱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은 6.15북측위원회의 정당과 단체연합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6.15북측위원회는 정당사회단체연합의 구성이라 하더라도 조선노동당과 북한정부의 지도를 받는 조직으로서의 구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안경호 6.15북측위원회 위원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과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6.15북측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의 실무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상임 부위원장 역할을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인 이충복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이 맡고 있던 것이 그 증표이다. 즉 6.15북측위원회는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를 정점으로 하는 지휘체계 속에서 통일문제 전담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핵심 조절기능을 담당하면서 각급 사회단체들을 움직이는 구조인 것이다.

그 자체로서 정당사회단체연합구조를 지니고 있던 6.15북측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를 통해 정당사회단체협의구조를 보다 확장시켜나가려 했던 6.15남측위원회가 6.15공동위원회의 정체성을 “분열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북과남), 해외의 각 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가장 폭넓게 망라하여 결성된 상설적인 전 민족적 통일운동연대기구”라고 규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227]

227) “6.15민족공동위원회 결성선언문”(2005. 3. 4).

그러나 정당사회단체 상설연대기구라는 남북 공통의 정체성 부여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방향에는 남북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들은 6.15공동위원회가 정당사회단체 상설협의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측 내에서 '더 다양한' 세력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6.15해외측위원회의 구성도 현재와 같이 북과 가까운 몇 개 단체의 협의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정당사회단체연대구조 내에서 시민참여 생태계의 다양성과 확장을 중시하는 인식이었다.

반면 북한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6.15공동위원회의 조직적 발전을 추구하려 하였다. 북한은 민간 중심의 민족공동행사기구로는 북이 제기해온 '남북정치협상회의'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 정당사회단체연대기구가 실질적인 정치협상회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참여가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북한이 제기하는 조직적 발전의 실체는 '남북 국회·정부 혹은 정당사회단체 대표 상설위원회'였던 것이다.[228]

결국 6.15북측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이 정당사회단체연대구조를 정부와 별개의 시민참여 플랫폼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논리와 조직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6.15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에 남과 북은 "남북(북남)해외의 민족대단결을 더욱 폭넓게 실현하고 공동행사 준비위원회에 남북(북남)해외의 더욱 많은 각계각층 단체와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공동행사준비위원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보장하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는 하였지만,[229] 이에 대한 6.15남/북위원회는 판단과 해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고, 남과 북은 각기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조직적 발전을 추구해나갔다.

북한이 2005년부터 6.15공동행사를 정부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간 것이나, 6.15남측위원회가 6.15해외측위원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보다 많은 보수 정당이나 단체를 민족공동행사에 참여시키려 했던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2) '통일전선'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사실 정당사회단체연대기구를 바라보는 6.15남/북위원회의 차이는 남북의 체제 자체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일정한 정세나 이슈와 만나 현실의 운동방향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매우 급속한 갈등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본질적 지점은 이른바 '통일전선'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통일전선은 '일정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당·사회단체 또는 계급들이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전술로 설명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통일전선을 추진하는 세력이 전체 통일전선을 주도하거나 그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할 때만 의미를 두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분열시키거나 상호 대립시키려고 한다는 점이

228)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다양한 형식과 이름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남북 당국 혹은 국회,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였다. 위의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 자료를 참조.

229) "6.15민족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5. 3. 5).

다. 이런 비판을 고려하여 북한은 통일전선의 정의를 “상대를 고립시키는 전술적 연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체계에 동의하는 인사와 조직의 연대”라는 의미로 변경시키고 있다.[230]

그러나 이런 정의 자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남북거버넌스’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는 통일전선적 사고 자체가 문제가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이 소위 ‘반통일세력 배제’ 혹은 ‘반보수대연합’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한나라당 의원의 주석단 배치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던 2007년의 평양 6.15대회가 바로 이런 사례의 정점에 해당한다.

이 해에 북한은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와 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보수투쟁은 민족단합 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사회의 진보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이다.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동보수세력은 외세를 등에 업고 매국반역적인 기도와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악으로 책동하고 있다. 사회주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연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231]

반면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들은 남측에서의 반통일 혹은 분단 기득권 세력과의 투쟁 혹은 경쟁은 남한 내에서 남측 시민·민중운동이 수행할 과제이지 남북연대의 장에서 남북 공동의 투쟁으로 전개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며, 남북연대의 공간에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남북거버넌스’를 확대하여 정부 혹은 보수진영의 안보국가주의를 축소·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민족공동행사에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을 참여시키는 것은 ‘시민참여를 통한 남북거버넌스’의 확대이자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연대가 확장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2007년 신년사에 나타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라는 공간에 한나라당 등 반동보수세력을 배제하는 것이 ‘반보수대연합’이라는 통일전선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차이는 운동방식의 차이로도 연결된다. 북한식 통일전선론의 입장에 서면,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생태계의 다양화나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가치의 공유와 그 수준의 향상이 된다. 반보수대연합이라는 통일전선이 중요하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북한이 한편이 되어 남한의 정부나 반동보수세력과 대결하는 구도가 남한 여론과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주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북에게 남한의 복잡한 정치상황을 고려하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결국 북한이 말하는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와 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반통일세력인 한나라당이나 미국에 반대하는 명확한 구호를 내놓고 투쟁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이런 인식은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참여형 남북거버넌스’의 확대를 추구해왔던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의 상황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

230) 남희웅,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통일전선 리론의 사상리론적 기초,”『철학연구』2, 2008. 참조.
231) 허문영 외, “2007년 북한신년공동사설 분석”『통일정세분석』2007-01, 통일연구원. 36-37쪽.

는 사람들과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명백히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런 세력들이 서로 국민대중을 놓고, 말하자면 중원점령을 위해 치열하게 각축하는 상황인 것이다. (…) 누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가 더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 세력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적 내용을 더 강화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232]

6.15남/북위원회 사이의 이러한 입장 차이가 가장 갈등적 상황으로 표출된 것이 앞서 말한 대로 2006년 6.15평양대회였다. 6.15남/북위원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나갔는가는 별도로 다룰 것이다. 이 문제는 다른 의미에서 통일전선론에 표출된 북한의 국가주의를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나갔는가 하는 문제이다.

4. 6.15공동위원회의 경험과 '남북연대'의 조건

1) '시민사회'와 비대칭성의 문제

남북연대의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이른바 시민사회의 비대칭성 문제이다. 이런 경우 의례적으로 북한에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없는데 어떻게 남북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는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을 제기할 때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북한에 남한과 같은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이 없다고 해서 분단체제 극복과정에 북한 민간사회의 기여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또 다른 냉전식 북한 이해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민중이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속에서 자발적인 장마당을 형성하여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에 큰 전환을 가져온 것에서 보듯이, 북한 민중들의 "생활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행해온 다양한 자발적·창의적 노력들이 모두 일종의 시민참여 행위이자 분단체제 고수세력의 사회장악력을 이완시킨다는 점에서 한반도식 통일의 공헌"이라는 주장이 성립하기 때문이다.[233] 그러기에 "북은 전혀 변하지 않고 민간사회도 없고 시민참여가 없다"는 주장은 북한의 공식적 논리인 '당과 인민 사이에 한치의 틈도 없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234]

문제는 남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다양화에 따른 남북간 비대칭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시민사회의 성장 자체를 두려워하는 시민사회 경계 내지 부정론이라 할 수 있다.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에 흡수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주장은 부르주아계급들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파쇼폭압체제를 '민주주의'의 얼굴로 가리며 그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한다"는 식의 시민사회론을 경계하는 주장은[235] 북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공유하는 경향의 하나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발전의 비대칭성 문제는 북한 시민사회의 존재 여부보다 북한의 사회단체의 성격을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남북 사이의 비대칭성을 남북관계의 새로

232) 이승환의 발언, <통일뉴스> 2006년 6월 24일자.
233) 백낙청,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51쪽.
234) 백낙청, 앞의 책, 194쪽.
235) 장철민, "'시민사회'론의 반동성," 『철학연구』 2002년 제1호, 루계 제88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46-47쪽.

운 특징으로 포착하여 이에 조응하는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단체는 사회주의 사회 일반의 '인전대(引傳帶, transmission belt)'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인전대는 당과 대중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하며 광범한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정치적 조직을 의미한다. 인전대는 당의 '령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상적 일치성이 중요하고 그 자율성은 제한적이 된다.[236] 또한 인전대는 인적, 물적 자원을 실체적으로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달리 말해 당이 제시한 방침은 공장을 건설하는 일이건 수해를 복구하는 일이건 인전대는 바로 그 일에 자신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총동맹이나 농업근로자동맹과 같은 전통적인 대중단체만이 아니라 북한이 대남·대외 사업을 위해 조직한 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 이후 대남 교류와 협력에 관여한 대표적인 3대 조직인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북한이 대남사업이라는 목적 수행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직한 사회단체인데, 이러한 조직체들의 결성은 대남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이러한 조직체들이 접촉하려고 하는 파트너 단체들과의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이다. 즉 북한은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 대상국가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중적 태도에서 비대칭성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게 된다.[237]

'비대칭성'이란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질적 차이, 역할과 상호기대의 체계가 동질적이지 않은 데서 오는 불균형과 불일치의 차원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238] 남북관계에서 남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커질수록 비대칭성은 더욱 확대되어나갈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결국 문제는 비대칭성 자체의 해소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또 재구성되는 자율적인 민간 부문의 관계를 중요한 차원으로 수용"하여[239] 이 구성적 관계의 확대와 제도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6.15공동위원회 역시 '남한의 시민사회와 북한의 인전대 사이의 연대'라는 비대칭성을 내포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한 권력의 성격이나 남북 당국관계의 변동에 따라 그 존재의 성격과 의미가 변화하는 구성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 날로 발전해가는 경제와 사회문화교류 등의 구성적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는 6.15공동위원회가 아무리 민간교류의 중심이자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 정당단체의 상설적 연대기구라 하더라도 포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당국관계의 몫이 된다.

북한은 6.15공동선언의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한 합의와 10.4선언에서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

---

236) "근로단체들은 자립적으로 활동하여야 하지만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 밖에서 활동하여서는 안된다. (…) 근로단체들은 어디까지나 당의 로선과 방침에 기초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 근로단체의 '독자성'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근로단체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반혁명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된다."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1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31-32쪽.

237) 정현곤, "남북거버넌스연구(2001-2007)," 47쪽. 정현곤은 이러한 단체들을 '정부가 만드는 NGO'라고 규정하고, 남측 민화협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38) 박명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80쪽.

239) 박명규, 앞의 책, 83쪽. 박명규는 구성성(構成性)을 항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시적인 것도 아닌 일정한 제도화의 힘을 나타낸다고 정의한다.

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각종 사회문화교류의 제도화는 계속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의제의 확장보다는 선택된 의제에 한정해서 그것도 북이 선호하는 특정세력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240]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시민사회' 부정과 경계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사회문화교류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율된 제도화'를 통해 남북의 비대칭성과 북한의 시민사회 경계론을 동시에 극복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조율된 제도화'는 2007년 제1차 남북총리급회담에서 합의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다.[241]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남북은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진 사회문화교류의 중복 회피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북한 체제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민간의 교류 자체는 확장해나가는 '조율된 제도화'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다. 이때 제3당사자로서의 남한 시민운동의 발전과 그에 따른 시민참여형 통일과정의 활성화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민간분야와 관련된 남북 사이의 조율된 제도적 장치는 일방적인 정부간 기구가 아니라 '민간의 주도성이 보장되는' 협치(協治)기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북핵 및 평화문제

당국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6.15공동위원회의 남북연대 과정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북핵 및 평화의 문제였다. 이 문제가 곤혹스러운 것은 우선 6.15남/북위원회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쉽게 좁혀지기 어려운' 심각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북핵·평화 의제가 핵심적인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6.15남/북위원회 차원을 원천적으로 넘어서는 의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6.15남/북위원회 사이의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 정치군사문제와 남북교류협력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핵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남북연대를 추진해나가기 어려운 현실 사이의 간극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북핵·평화문제와 관련된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과 북측위원회 사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금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초래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어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북한은 지금의 전쟁위협은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남한 정부의 선제 핵타격 계획을 포함한 대북 전쟁준비로부터 오고 있으며, 따라서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응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은 한미 양국만이 아니라 북한 역시 한반도

240) "실제 교류현장을 보면 북은 자기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방문조차 허용하기를 꺼려한다. 게다가 방문시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훈련받은 인력을 동원한다. 방문 프로그램에도 체제 보호를 위한 선전이 들어간다. 이러한 북의 태도는 남북주민의 교류가 북한 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의제 2013'』, 73쪽.

241)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합의서'에서 남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008년 상반기 중에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사적 긴장 악화에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242] 대표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개발은 어떤 이유로든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핵문제는 북미 간 논의사항이지 남북관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북측 주장에 대해서도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은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이 교류와 통일문제는 남한과, 안보 및 평화 의제는 미국과 협상한다는 남북장관급회담과 6자회담의 분리전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243]

북핵문제는 동아시아 질서와 북한의 발전전략을 비롯한 본질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6.15남/북위원회 차원에서는 제한된 수준의 논의도 불가능한 의제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위급 6.15북측위원회 인사라 하더라도 북핵 및 평화문제는 북 최고지도자 혹은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발언도 하기 어려운 의제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남측인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지도자와 당의 방침을 설명하고 '교양하는' 것 밖에는 없었다.[244] 더구나 이런 교양이 "핵무기는 결코 남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북한 공식입장을 강변하는 경우, 6.15남/북위원회의 관계 역시 북핵·평화문제 앞에서는 매우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6.15공동위원회를 통해 형성된 남북거버넌스를 활용하여 2005년 6월 17일 김정일-정동영 면담이 성사되고 거기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합의되어 이후 9.19공동성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의 중요한 역사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2005년의 6.15공동행사를 배경으로 남북회담에서도 북핵·평화 의제가 논의되는 변화가 시작되었고, 남·북·미·중의 4자평화포럼 설치 등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문제가 6자회담의 주요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6.15공동위원회를 통해 형성된 남북거버넌스 성과 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의 미국 및 북한 설득 노력과는 별개로, 그리고 남북 양 정부가 단지 민족공동행사의 장을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라 하더라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북핵·평화문제의 진전 정도는 6.15공동위원회의 남북연대 추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핵·평화문제가 진전될 때 6.15공동위원회의 남북거버넌스는 증대되지만, 반면 이 문제

---

242)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들의 솔직한 판단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핵 수단을 동원하는 군사훈련의 위협 실체로 인해 북한과의 책임 논란이 쉽지 않았다. "정세 인식에 있어 북은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북은 이런 정세를 과장하여 군사력을 보강하고 이를 통해 내부 통치력을 갖는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15남/북위원회 관계에서 북을 앞에 놓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편에서 미국의 행동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러하다. 미국으로서도 북의 군사적 대응까지를 염두에 두고 군사 훈련을 먼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행위가 북의 주장처럼 전쟁을 하려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절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크기에 북의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정현곤, "남북거버넌스연구(2001-2007)," 165쪽.

243) 이승환, "6월항쟁 20년,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변화와 통일담론," 『창작과비평』 2007년 가을(통권 137호). 박명림은 안보, 평화 의제가 배제된 6.15공동선언은 불가침과 비핵화를 선언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으로부터의 후퇴라고 주장한다. 박명림, "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비평』, 2006년 겨울 호(서울: 생각의나무, 2006).

244) 때로 공식적 연설을 통해 이러한 북한 입장의 일방적인 '교양'이 진행될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2003년 서울에서 개최된 '3.1민족대회'에서의 조선그리스도련맹 중앙위원회 오경우 서기장의 연설이다.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는 오늘의 전쟁위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핵전쟁의 검은 구름은 결코 동족이 사는 땅인 북의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미국이며 그 핵무기로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선포한 것도 미국입니다." 이런 경우, 남에서도 '북의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는 연설을 하면 '상호주의'는 되지만, 그것이 남북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길은 아니다.

가 악화되면 6.15북측위원회로서는 북 지도자와 당의 방침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논의가 불가능해지기기 때문에 6.15공동위원회의 남북거버넌스와 의제 확장 노력은 본질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5. 남북의 국가주의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1) 국가주의의 맨얼굴

6.15남/북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부딪친 모든 문제들은 사실 남북 양 당국의 국가주의와 정부주도성의 문제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245] 국가주의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정책 전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이 글에서 말하는 남북 양 당국의 국가주의는 그중에서도 특히 '안보국가적 본성'의 발현이란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 이는 실제로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관철 요구와 민간 활동의 통제로 주로 외화(外化)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6.15북측위원회 자체가 인전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당적 지도에 철저히 복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 남북의 양 국가주의와 부딪치는 세력의 실체는 6.15공동위원회가 아니라 결국 남한의 시민사회였다. 이는 북한의 시민사회, 즉 제4당사자라고 할 만한 세력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남한의 시민사회(즉 6.15남측위원회의 주도세력)가 남북 양 당국의 국가주의와 가장 전형적으로 맞닥트리는 지점은 공동호소문, 연설문 등 공식 발표문건의 내용과 관련된 조정이었다. 문건 내용 조정과정에서 남측 정부의 개입과 의견 전달에 의해 남측 정부와 갈등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으나, 쟁점의 가짓수나 갈등의 정도에서 6.15북측위원회와의 그것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남측 정부로서는 6.15남/북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건 조정 결과를 대체로 큰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었고, 또 6.15남측위원회에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관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었다. 6.15남측위원회는 북측위원회와 달리 민간의 자율성이 강한 독자적인 운동체이지 정부 지도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

문건과 관련해서 발생한 6.15남/북위원회 사이의 쟁점은 유형화할 때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① 북한의 민족해방론적 통일관을 관철하려는 내용(미제국주의라는 규정과 표현, 전쟁위기 미제 책임론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② 통일전선적 관점에서 남한의 반통일세력과의 투쟁 등을 강조하는 내용, ③ 국가보안법 철폐나 촛불시위 지지 등 남한 내정과 관련된 지지나 반대,[246] ④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문제나 북한 체제를 생경하게 드러내는 표현 등.

이 네 개의 유형은 그야말로 국가주의의 맨얼굴들이라 할 수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논란들을

245) 정현곤은 국가주의와 정부주도성의 문제를 '권력정치'라고 규정하고 이를 시민참여 거버넌스와 대칭시키고 있다. 정현곤, "남북거버넌스연구(2001-2007)," 234-237쪽 참조.

246) 이 세 번째 문제는 약간 상호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 번째 문제도 비슷하다. 만약 북한이 북의 체제와 내정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을 용인한다면 이 쟁점들은 사라질 수도 있다. 물론 그런 현실은 불가능하겠지만.

거치면서 6.15남/북위원회 사이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반복된 협의와 논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떤 경우는 충분한 이해 위에, 또 어떤 경우는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후자의 경우도 대체로 6.15남/북위원회가 상호 양보 가능한 지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①과 ②의 문제는 외세의 간섭 반대와 모든 군사적 긴장고조 조치 반대 등으로 내용 일부의 삭제·수정과 표현 완화의 방식으로 정리되었으며, ③과 ④의 문제들은 대체로 문건에서 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물론 때로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주로 북이나 해외측이) 문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문건을 둘러싼 논쟁은 우선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이 6.15북측위원회에 남측의 원칙적 입장과 남측 사회의 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과 함께, 6.15북측위원회가 북한의 정부 및 당의 상급지도부에게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두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후자의 과정은 그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문건 협상과정은 통일의 상대와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문제와 과정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아울러 남북 양 당국과 6.15북측위원회, 그리고 남한 시민사회 사이에서 '남북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성장해나가는 하나의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충돌 - 2007년 6.15평양행사

문건 외에도 국가주의와 충돌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247]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6.15남/북위원회는 남북의 양 당국과 협력하는 기조를 중심으로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하였다. 남북 양 당국의 간섭에 따른 갈등보다 협력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민족공동행사였기 때문이다. 행사 규모나 참가 숫자의 제한, 일부 대표단의 방북 불허, 활동공간과 동선의 엄격한 제한, (특히 북의) 당국 중심의 정보 공유 등은 대체로 수용할 수 있는 갈등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 범위을 넘으면 남한의 시민사회가 (북한의) 국가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의 평양 6.15 공동행사였다.

2007년 평양 6.15행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주석단 배치를 현장에서 6.15북측위원회가 거부한 일로 인해 발생한 28시간의 행사 파행은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즉 남한 시민사회)이 북한의 보수대연합 방침 강요에 맞서 충돌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당시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들은 북의 한나라당 주석단 배제 방침에 대해 이것은 '정파와 관계없이 6.15선언 지지하는 모든 세력의 단결'이라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또 남측 사회 내에서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즉각 공동행사의 진행을 중단하고 항의하였다.

행사가 중단된 28시간 동안 6.15남/북위원회 간, 북한 당국(통전부)와 6.15남측위원회 간, 그리고 6.15남측위원회 내부에서 격렬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남측이 북측

247) 이것이 '정부간 협상'에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 정부 주도는 안보국가 단계에서는 '시민 주도'의 상황이라기보다 '시민참여'의 상황 혹은 단계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의 수습안인 11인 주석단 안을[248] 수용하고, 6.15북측위원회의 안경호 위원장 역시 남측위원회 앞으로 '사죄문'을 보내오는 것으로 28시간의 파행은 마무리되었다.[249]

이 사건은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이 남북거버넌스, 그것도 시민참여형 남북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국가주의와 충돌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충돌을 남한 시민사회는(물론 6.15북측위원회와 북한 당국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수습하였다.

남북연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한 시민사회가 남북 양 당국, 특히 북한의 국가주의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의 사례는 두 가지 시사를 주고 있다.

하나는 6.15공동위원회가 갖는 의미인데, 이는 곧 정당종교사회단체 연대기구가 갖는 거버넌스의 힘이다. 국가주의가 충돌하는 당국관계의 틀만으로는 양 당국의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낮은 수준의 국가연합이라 하더라도)을 만들어내기 어렵지만,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틀로 남북이 만날 경우에는 남북의 국가주의를 연성화 혹은 통제하는 것도 더 수월하고, 또 주체들의 설계와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로운 시민참여형 남북거버넌스를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다.

더구나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와 같이 북한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우선 남측만이라도)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시민참여형 남북거버넌스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남북의 양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 즉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국가연합 수준의 '남북연합'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된다. 아무리 낮은 수준의 국가연합이라 하더라도 남과 북은 이를 위해 최소한 일정한 권력을 연합기구에 이양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런 점에서 남북연합의 본질은 남과 북이 각기 자기 중심의 국가주의를 '규율'하겠다는 협약이라 할 수 있다. 남북이 각각 국가주의를 규율한다는 것은 결국 분단체제 아래 과대성장한 안보국가를 규율한다는 것이고, 이는 안보국가의 통제와 시민참여에 의한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확장으로 가능해진다. 더구나 남과 북도 문제지만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조차 어려워 보이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한 안보국가주의의 견제가 너무나 중요하다. 남북연합의 원동력이 남북을 포괄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추구한 바로 그 지점에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의 경험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가 존재한다.

또 하나는 숙의제 민주주의의 힘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반보수대연합 방침을 강요하고[250] 한나라당 인사를 배제하는 공동행사를 치르려는 것은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의 입장에서는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확장과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6.15남측위원회 주도세력으로서는 참가

---

248) 11인 주석단 안은 남북해외측위원회의 위원장과 연설자 등만 주석단에 올리자는 안인데, 이는 모든 정당 대표를 주석단에 올리지 않는 안이었다. 당시 행사에 참가한 한나라당 박계동, 정병국, 진영 등 3인의 의원은 이 안도 결국 한나라당을 배제하는 안이라고 수용을 거부하였다.

249) 안경호위원장의 사죄문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총화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6월 22일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는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축전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남측대표단에 제패거리들을 한사코 끼워 넣고 행사진행에 장애를 조성"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는 6.15남측위원회가 시민참여 거버넌스 확대 차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여를 추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김형오 원내대표가 직접 6.15평양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6.15선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거치면서 한나라당 내에서의 대북인식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는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250)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3-2)에서 다루었다.

자 모두의 마음을 모아내는 일과 함께 이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들, 여야 정치권 모두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해야 했다. 게다가 참가자들 사이의 소통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높은 민주주의적 덕목'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6.15남측위원회가 북의 (11인 주석단) 안을 받아들이기까지 기다린 28시간의 의미는 물론 소통과 민주주의 문제였다. 다양성, 소통, 공감, 협력의 계기들이 작용함을 통해 남한 시민사회의 힘이 발현된다는 점을 북이 이해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북은 안경호 위원장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사죄'라는 표현을 받아들이도록 조정했다는 점에서 남한 시민사회에 대해 좀 더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251]

결국 파행의 28시간은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소비한 시간이었고, 동시에 남북연대의 파국을 막기 위해 사실상 한나라당을 소외시키는 북측의 안을 불가피하게 수용하는데 따른 다수의 동의와 관용, 그리고 북의 남한 사회 이해의 심화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맺음말 - 시민참여형 남북연대의 복원을 위하여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는 문익환목사를 대표로 하는 탈냉전기의 새로운 통일운동 흐름과 한국의 시민운동이 자신의 독자적인 설계와 목표를 가지고 전개한 남북연대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남북 시민사회 발전의 비대칭성,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정한 남북관계의 한계와 함께 남북의 국가주의와의 지속적인 갈등에 시달리면서도 일관되게 시민참여형 남북거버넌스를 추구해나간 귀중한 역사적 경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운동의 기본모델은 1948년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라 할 수 있지만, 남측 시민사회는 통일전선으로서의 정당단체연대기구가 아니라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성장을 위한 남북연대기구로서 정당단체연석회의의 형식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남한 시민사회의 확장과 다양화가 과거 정부 일변도의 관계와 질적으로 다른 다층적인 관계로 남북관계를 변화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남북연대와 통합방식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 '통일전선전략'이라는 또 하나의 국가주의의 맨얼굴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시민참여형 남북거버넌스의 성장이야말로 남북이 각각 상대를 향한 자신의 안보 국가주의를 통제 혹은 연성화시키고 시민참여 통일과정을 통해서 비록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국가연합과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해나가는 가장 주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2001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전개된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의 경험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전향적 태도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시민참여 통일과정에 대한 포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남한을 중심으로 보면, 6.15남측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는 이 정부들과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일종의 '협약체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도 했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협약체제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세력 간의 구조적 타협의 결과물이지만, 6.15남측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는 정부의

---

251) 정현곤, "남북거버넌스연구(2001-2007)," 236쪽.

‘전략적 선택’이 가장 크게 작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2001-2008년의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의 경험이 갖는 한계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협약체제 지속의 사회적 조건이나 제도적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약체제를 구성하는 주도적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결정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핵심 행위자인 정부와 여당이 협약정치를 무시 혹은 거부할 경우 이러한 협약체제는 사실상 와해되기 때문이다.

남한 사회 내에서 협약정치가 파기되면, 남북연대기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로서의 의미보다 ‘통일전선’으로서의 성격이 더 전면화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예컨대 2013년 3월에 6.15북측위원회가 남측위원회에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이라는 호소에 호응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반미반전투쟁에 나서달라고 호소한 문서는 그런 점에서 매우 전형적이다.[252] 즉 같은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2001-2007년 시기의 그것과 다른 것이 된다.”[253]

6.15공동위원회는 2008년 6.15금강산 공동행사 이후 민족공동행사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 남북 거버넌스를 추구할 공간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6.15공동위원회의 남북연대운동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그렇다면 복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남북공동의 기구로서의 6.15공동위원회와 민족공동행사는 당국과 민간의 협약정치에 근거할 때 시민참여 남북거버넌스 추진의 실질적 힘을 얻게 된다. 결국 남한 시민사회는 “남북연합 건설작업에 역행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일”과 “나아가 시민참여형 통일과정을 수용하는 국정운영체제로 하루속히 전환하는 일”이라는[254]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협약정치의 조건을 다시 구축해나갈 수밖에 없다.[255] (*)

---

252) 2013년 3월 18일 6.15북측위원회는 남측위원회 앞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낸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삼천리 강토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초긴장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가 애국애족이 넘친 이 절절한 호소에 적극 화답하여 미국과 호전세력들의 무모한 도발과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떨쳐 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을 보내드립니다.” 당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하여 3월 17일에 발표된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의 발췌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민족은 정의의 통일애국성전에 총궐기하여 도발자들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수자.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도발과 전쟁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위험계선을 넘어섰으며 이제 불과 불, 철과 철이 오가는 최악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과 친미역적 패당의 침략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남조선과 해외 도처에서 전민애국항쟁, 반미성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온각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어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체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의 정의의 성전은 절세의 위인들의 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가시는 백두산 천출령장 김정은 원수님을 진두에 모시여 더욱 영광찬란하고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전민항쟁, 정의의 통일애국성전에 총궐기해나섬으로써 삼천리 조국강상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다.”

253) 정현곤, “남북거버넌스연구(2001-2007),” 157~8쪽.

254) 백낙청, 『2013년체제 만들기』, 119쪽.

255) 협약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협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남측 당국과 구체적 협약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남측 정부와 시민사회는 서로 충돌하면서 구성적으로 협약의 의미를 지켜왔다고 볼 수 있다. 협약 주도자인 정부가 먼저 협약정치를 파기할 경우 사실상 협약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6.15남측위원회 자체가 대정부투쟁기관으로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 협약정치의 복원과 관련하여, 남북관계 속에 존재하는 협약기구는 남측만의 협약기구가

<참고문헌 목록>

1. 논문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1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김정일, “조국통일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2000년 6월 30일), 『김정일 선집 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김진향, “남북한 민간 사회단체 교류협력방안 : 2001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 제6권 제4호 통권21호, 2001)
김창수, “북 민간교류 사례 분석 : 2001년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을 중심으로”(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치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공동행사에 관한 연구 : 행사의 경과와 주최 조직의 변화 발전을 중심으로”(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명림, “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비평』, 2006년 겨울 호(서울: 생각의나무, 2006)
박순성, “북핵실험 이후, 6.15시대 담론과 분단체제변혁론,” 『창작과비평』, 2006년 겨울호
백낙청, “북의 핵실험 이후: ‘제3당사자’로서 남쪽 민간사회의 역할”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서울: 창비, 2009)
백낙청, “2013년체제와 포용정책 2.0” 『2013년체제 만들기』(서울: 창비, 2012)
이승환, “민간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민화협정책위원회 지음, 『민족화해와 남남대화』(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이승환, “6월항쟁 20년,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변화와 통일담론,” 『창작과비평』 2007년 가을(통권 137호)
이승환, “이명박정부 이후의 대북정책 구상,” 『창작과비평』 2012년 가을(통권 157호)
이승환,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의 추진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의제 2013’』(서울: 민주정책연구원, 2012)
정현곤, “남북거버넌스연구(2001-2007) - 6.15남/북위원회를 중심으로”(경남대 박사논문, 2015. 6)
장철민, “‘시민사회’론의 반동성,” 『철학연구』 2002년 제1호, 루계 제88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허문영 외, “2007년 북한신년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1, 통일연구원

2. 저서

김정일, 『김정일선집1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아니라 남북연대기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 시민사회는 이 협약기구의 외부에서 별도로 시민참여와 시민행동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김정일, 『김정일 선집 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남희웅,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통일전선 리론의 사상리론적 기초,” 『철학연구』 2, 2008
민화협정책위원회 지음, 『민족화해와 남남대화』(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박명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서울: 창비, 2012)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서울: 창비, 2006)
백낙청,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서울: 창비, 2009)
백낙청, 『2013년체제 만들기』(서울: 창비, 2012)
엄국현,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평양: 평양출판사, 2007)
이승환 외,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의제 2013’』(서울: 민주정책연구원, 2012)
이종석, 『한반도평화통일론』(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임동원, 『피스메이커』(서울: 중앙북스 2008)
장 석, 『김정일장군의 조국통일론 연구』(평양: 평양출판사, 2002년)

3. 간행물 기타

“6.15민족공동위원회 결성선언문”(2005. 3. 4)
“6.15민족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5. 3. 5)
<로동신문>, 2000년 10월 7일자
<로동신문>, 2010년 10월 8일자
『민족공동행사백서 I 총괄편 2000-2006. 6.15』(서울: 여백, 2006)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2013. 3. 1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1)
<통일뉴스> 2006년 6월 24일자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 “북한의 「정치협상회의」 형태 대남제의 주요일지”(2000. 2)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을 통해서 본 남북연대방안〉에 대한 토론문

서유석(호원대 교양학부)

※별지첨부※

남북한 연대를 가로막는 남남갈등 : 진보진영 내부의 남남갈등과 해소방안

이창언 (방송통신대, 사회학)

1. 들어가며

남남갈등이란 남과 남의 갈등, 남한 사회의 갈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급 갈등 지역 갈등, 세대갈등을 포함한 남한 사회 내의 모든 갈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관행적으로 남남갈등을 남북관계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즉 남남갈등은 남북갈등에 대칭되는 의미로 주도된 용어로서 남한사회의 내부갈등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 사회의 내부 갈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손호철, 2004: 13). 남남갈등은 현 시기 남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갈등유형으로서 주로 북한을 보는 인식과 통일에 이르는 방법, 즉 대북관과 통일관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남남갈등은 이념이나 세계관과 같은 보다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특징되는 남남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 좌파와 우파의 갈등의 양상을 보인다(주봉호, 2012: 146).

남남갈등이 대북인식, 대북정책,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관계 일반으로부터 보다 추상적인 평화, 분단극복, 민족문제 등 모든 사안에 걸쳐 대립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정책적 대안 간의 사회적 선호의 차이에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주봉호, 2001: 151). 남남갈등은 분단과 전쟁의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으며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 북미. 한미관계,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시기에 될 때 국내정치와 맞물려 확대되고 과장되며 격화되어왔다(서재진, 2004: 3-4).

선행연구자들은 남남갈등의 원인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인식차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론의 차이, 여야 정치인들의 국민의 지지를 유도해 내기 위한 정치적 요인,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언론 등 복합적인 요인과 미국의 대북정책, 북한의 대남통일전선 전략 등의 외부요인을 거론하고 있다(변창구, 2011: 177). 남남갈등은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의 다른 사회적 갈등과 복합적으로 중층화되고 한국사회 다른 사회적 갈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남갈등을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대립 틀로 구획 지을 만큼 갈등의 상대가 단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노동운동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도 있다(이우영, 2004: 103).

진보진영에 속해 있지만 좌파적 가치인 탈핵이 아닌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남남갈등은 진보와 보수로 환원할 수 없는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해방과 분단이후 남남갈등의 양상은 대북포용주의대 대북강경주의의 대립을 큰 축이 형성되어 있지만 보수, 자유주의, 진보좌파진영 내부에는 분명한 결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한국전쟁 이후 87년 민주항쟁 이전까지 남남갈등은 극히 드물었고 예외적인 냉전보수주의 국가 대 자유주의 정치사회 간의 갈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남갈등은 남한 사회 내에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념적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시기는 극우반공주의 국가

가 국가뿐 아니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념적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손호철, 2004: 20-21). 다시 말해, 국가의 반공극우체제는 더욱 강고해지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수준에서는 진보세력은 사라지고 냉전적 보수세력의 절대적 우위 속에서 자유주의적 보수세력이 간헐적인 저항을 하지만 남북관계에 대해 반공주의를 넘어서는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남남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다.

87년 이후 남남갈등은 분단체제의 극복을 전면화하면서 등장한 NL세력이 등장하면서 전면화되고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심화된다. 1988년 3월 29일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유세 과정에서 김중기 후보는 김일성대학 청년학생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남북한 국토순례대행진과 민족단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체육대회를 제안했다. 이에 호응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는 1988년 4월 4일,6월 10일 실무회담에 응하겠다고 답변한다. 학생들은 6월 11일 1 남북학생회담 보고 및 공동올림픽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고 이후 6월 18일 전대협은 북한에 보내는 제4차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8월 4-15일까지 국토순례대행진을 거행하기로 하였고 8.15일 학생대중의 통일염원 판문점행진이 진행되었다. 다음해인 1989년임수경과 문규현신부 방북 및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후 판문점을 통한 귀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회 출범, 문익환목사 방북, 서경원의원 방북 등 일련의 민족통일 운동이 전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NL세력 주도로 전개된 통일운동의 이슈는 연방제 통일, 북미 평화협정 체결, 상호불가침 선언, 군축과 비핵지대화,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었고 북한바로알기 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수세력의 탄압 못지않게 진보진영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1980년대 그 주장의 급진성과 방법의 과격성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통일운동은 전반적으로 대중적 설득력을 가지고 남한정권을 압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 탈냉전과 함께 한반도도 탈냉전 시대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1991년 제2한국전쟁 위기, 1993-4년 북핵 위기가 조성되었다. 1995-97년 북한주민 200만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는 식량난 및 경제위기로 북한사회의 실상이 드러나고, 정부차원의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이 증가되면서 남한 내 민족통일운동의 정당성 기반이 약화되었다. 동시에 통일운동 자체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통일운동 진영은 범민족대회로 상징되는 북한당국의 '폐쇄적 민족주의'에 동조하는 통일운동가들만의 자족적인 자가발전 진영으로 축소되었다(박영자, 2007: 49)라는 내부 비판과 갈등이 심화되었다[256].

이 글은 남남갈등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진영 내부의 갈등의 기원과 현황, 이의해소 방안을 다룬다. 특히 87년 이후 남남갈등의 중심축에 있었던 NL세력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는 북한정권 친화적인 노선에 대한 동화가 가능했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가진 빛과 그늘, 그리고 건설적인 차원에서의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256) 박영자는 북한체제의 위기와 동시에 도래한 주류 통일운동세력, 그 중 사회진보의 담론을 선점하였던 학생운동의 몰락을 강조한다. 통일운동의 실질적 물리력을 제공해 온 학생운동 주류(소위 전통 NL진영)가 북한정권의 지지자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 내부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96년 <한총련 연세대사태>는 이후 학생운동의 공멸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통일운동의 '폐쇄적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인한 운동 이슈의 배타성으로 당시 사회적 문제였던 노동 및 민중생존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않음으로써 운동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었으며, 남북해외의 '3자연대' 및 자주교류 주장에서 나타나듯 만남 이외 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전망부재 문제가 김영삼정부 시기부터 드러났고, 김대중정부의 등장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중지하게 되었다(박영자, 2007: 49).

글은 진보진영 내부의 남남갈등이 '민족해방론'에 내장된 편향성 때문에 진보진영의 대 시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노선과 운동레퍼토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혁신)하지 않으면 반복될 위기임을 강조하며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진보진영 내부의 남남갈등의 역사적 기원

1) 광주민주화운동과 반제적 급진주의(NL) 전통의 부활

북한정권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가진 운동세력의 출현은 분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친북이냐 종북이냐의 기준은 북한 정권의 존재로부터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남갈등은 찬탁반탁, 유엔의 남한단독선거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세력이 곧 친북한 세력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단과 분단의식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잘 보여주듯이 북한이 한반도의 반제반봉건 민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민주기지라는 민주기지론에 기초해 남남갈등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입했다(손호철, 2004: 20)던 것은 사실이었다. 한국전쟁이후 진보당의 등장과 탄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도 남남갈등은 진보진영 내부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냉전보수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대 진보적 정치사회의 갈등의 양상을 띤다.[257]

진보진영 내부의 남남갈등은 나타난 시기는 1960년 4월혁명 이후 생겨났던 혁신정당과 관련한 남남갈등이다. [258] 1960~70년대에도 맑스-레닌주의나 북한의 입장을 추종하는 비합·비공개 정치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편적 주체사상」의 수용과 운동정치 공간에서 일정한 조직, 대중적 영향력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1986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가 광주항쟁의 결과로 민족민중주의의 광범한 확산이라는 시기적 특성도 있지만 북한의 전일적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 정립과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김일성(金日成) 정권수립이후 맑스·레닌주의 → 철학적 주체사상 → 보편적 주체사상이라는 변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986년을 전후한 시기는 보편적 주체사상이 안착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진보진영의 남남갈등이 급격화된 것은 80년대 NL과 PD의 등장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급진적 이념, 특히 '맑스주의의 수용과정'에서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서구 맑스주의의 경우와 반대로 비판이론의 수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맑스-레닌주의가 관념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힘을 가지고 단기간에 전폭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맑시즘은 서구와 다른 길을 거치며 또한 맑스주의이든 비판이론이든 충분한 수용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비판이론을 통해서 우회(右回)하기보다는 바로 맑스주의로 향하는 직로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의 진

257) 보수야당인 민주당은 1956년 대선당시 "조봉암에게 대통령자리를 맡기느니 차라리 김일성과 타협하겠다며 이승만 지지을 호소했다. 동아일보도 무력통일론을 전면불가 내지 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조봉암에게 투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유권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손호철, 2004: 22).

258) 통일사회당은 김일성 퇴진을 전제로 한 남북정치지도자 회담개최와 한반도 중립화를 통한 통일을 주장한 반면 사회당은 "1949년 남북노동당 합당으로 당 중앙이 평양에 있으므로 노동당 당적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기본당을 만든다는 것은 일국일당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손호철, 2004: 24).

보적 지식인들에게는 1980년대 초반이 세계사적인 국면에서 신보수주의가 강화되고 맑스주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었다.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혁명운동이 새롭게 부활된다는 점과 계급갈등의 잠재적 기반이 형성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맑스주의 이념에 입각한 노동운동이 태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현실이었다. 즉 한국 사회운동의 주기는 본격적 상승화의 국면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과 배치되는 사실들은 그러한 압도적 현실(paramount reality) 속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김동춘, 1993: 305).

이런 맥락에서 1980년대에는 1970년대까지 수용되었던 네오-맑스주의, 종속이론, 사회민주주의론, 비판이론 등 다소 수정주의적인 맑스주의 이론들이나 민족경제론 등의 민족주의적인 이론들과의 단절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세계시간의 보수화 국면'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세계시간과는 정반대로 때늦은 급진화를 경험한 것이었다(손호철, 2003: 3).

맑스주의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급진적 지식사회의 흐름은 민족주의와 완전한 단절을 이루어 낸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민중적 인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민족적 인식은 한편으로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경험과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 소개된 제 3세계론, 반제국주의론 등의 영향으로 인해 1980년대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심지어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계급적 인식과 '민족적 인식'의 대결양상으로 진행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두 인식은 결합되어 있었으며, 1980년대의 민족적 인식의 강화가 계급적 인식을 강화시킨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민족적 인식'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분단의식 재생산의 중요한 기제로 간주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그동안 금기시되어 온 다양한 경향의 맑스주의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진덕규, 1985: 74-75; 강수택, 2001: 246).

1980년대는 1970년대의 민중론을 보다 급진화한 '변혁주체론'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 연구나 계급구조, 정세분석 등이 일반화되고 정치적 실천의 지렛대로 활용되었다. 이후 한국사회 성격규명을 위한 민주주의 논쟁, 파시즘 논쟁, 자본주의 논쟁,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저항, 이를 위한 진보정치세력화 논쟁, 전선 논쟁, 대안으로써의 사회주의 논쟁, 혁명과 개량주의 논쟁, 한국사회 특유의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정립을 둘러싼 논쟁으로 비화·발전하였다(허상수, 2004: 308).

1980년대 급진적 지식인들과 운동권 내부 논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국자본주의의 독점적 성격과 제국주의 국가-자본에의 종속을 이해하는 문제,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재구성하는 문제와 분석과정에서 방법론적인 문제가 중심에 놓여 있었다. 한편 1980년대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민족민주운동의 성장, 그중에서도 NL주사파의 등장과 자주통일운동의 활성화로 인해 북한 정권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 강화되었다. NL 주사파의 등장은 진보진영의 남남갈등의 양상을 결정적으로 반전시켰다.

2) 단절론과 연속론

1980년대 운동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1960-70년대 민주화운동의 패턴(pattern)과는 기본적으로 질적 차이를 갖는다는 단절론[259]과 형식적으로는 대단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과거 민주화운동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는 연속론으로 구분된다.
'단절(복원)론적 시각'에서는 19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던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이념적 조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주체형성을 모색하고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시기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로부터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맥을 잇고 있으나 운동의 이념·가치·수단과 방법·목표에 있어서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한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과학계 연구자나 운동권 다수의 시각은 '단절(복원)론적' 관점에서 1980년대를 평가하고 있다. 먼저 단절(복원)론은 광주항쟁 이후 급진적 학생운동이 이전의 급진적 운동(사회주의운동)의 단절을 극복하고 자생적으로 급진성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1980년대를 급진적 운동의 부활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대체로 PD적 시각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폐허 속에서 1980년 광주를 거치면서 급진화가 새롭게 모색되었다고 보는데 반해 NL은 통혁당 등 지하당의 보존된 역량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하며 급진적 운동의 연속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NL과 PD 일각에서 일고 있는 연속론(NL)과 단절론(PD)이 제기한 이러한 주장은 단절된 혁명전통, 정확히는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의 전통,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을 둘러싼 대립이라 할 수 있다.
간고·치열한 노력에 의해 끊어진 혁명전통의 줄기를 되찾았다고 보는 견해(NL적 시각)와 1980년대의 변혁투쟁은 그 이전 어느 시대의 투쟁경험과도 완전히 무관하고 새롭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임을 주장하는 견해(PD적 시각)는 한국 사회성격 규정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북한과 북한정권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상이함을 반영한다.
1960년대 운동과 1970년대 운동이, 나아가 1980년대 전반부 운동이 과연 일국일당주의적 권위를 요구하는 당에 의해 지도된 것인가를 반(反)주사(PD) 계열은 의문시한다. 반면, 연속론의 입장에 서 있는 NL은 "남북의 혁명전통은 걸어온 길이 다르다고 하여 단절되는 것이 아니며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법도 없다. 민족해방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남과 북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여 서로의 연관 속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점을 이해한다면 남북의 역사를 동시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김민수, 1988: 161)"라고 본다. 주체사상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에는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연속론이 우세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1960-70년대 운동진영 내 소수의 좌익그룹은 유신독재의 최후와 함께 소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재야 반정부운동에서 분화해 나온 새로운 세대의 급진적 운동세력에게 자리를 내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의 지도성이 한국사회 운동에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259) 단절론은 엄밀히 말해서 1980년대 나타난 특정한 집단적 현상 즉, 탈자본주의적 사회변혁론의 등장과 운동의 급진적 성격을 강조하는 주장으로서 구(舊) 좌익운동과의 단절을 복원하는 한편 과거 민주화운동의 자유주의적이고 민중적인 성격에서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3) 진보진영의 남남갈등 : 민족해방론의 확산

진보진영의 남남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0년대 이후 급진적 이념의 등장과 확산과정 그리고 급진 이념의 차이와 한계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 급진화는 1,2차로 나눌 수 있다. 1차 급진화는 자유주의적 운동지향에서 더 전투적이고 민중지향적인 운동을 지향하는 해석 틀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시기를 말한다. 1차 급진화는 1980년대 초중반 유혈적 쿠데타와 국가의 파시즘적 재편과정에서 더욱 강화된 반공 보수주의적 단극구조가 가져온 적대적 갈등을 반영한다(이창언, 2009). 그것은 "1980년대라는 독특한 지적·정신적 지형, 즉 맑스사상의 지적 인프라가 불비(不備)한 조건에서 당면한 적의 탄압에 대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직면한 운동 주체가 선택한 이데올로기적 산물"(이혜영, 1999: 62; 이창언 2009 재인용)이었다.

맑스주의의 특정한 전략의 한 형태인 '볼셰비즘' 확산이라 할 수 있는 1차 급진화는 관념적 과격성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맑스주의의 한국적 적용의 실패'라는 비판과 도전에 직면한다. 1986년을 전후하여 레닌주의적 급진성(볼셰비즘)과는 구별되는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반영한 급진성, 반식민지 행동주의적 급진성 즉, 민족해방론이 등장, 상호 경합하는 2차 급진화가 시작된다.

2차 급진화(민족적)는 맑스레닌주의의 반정립과 비교우위를 수반하여 진행되었다. 1차적 급진화(맑스레닌주의의 확산)의 기반아래서 반제통일전선론은 CA-PD의 반정립 내지 비교를 통해 노선의 우월성(대중성, 현실적용 가능성, 구체성)을 입증 받을 수 있었다. 통일전선론의 확산은 한국전쟁 이후 운동진영 내부에 상존하던 변혁운동의 단절(복원)론적 해석보다 '연속론적 해석'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통일전선론의 확산은 행위 양식과 운동 전략상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통일전선적 혁명론'과 '소비에트 혁명론'은 체제의 통제와 관련된 갈등에서 도구적 행위논리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통일전선적 혁명론은 생활 세계의 양식과 관련된 표출적 행위논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두 개의 노선이 공히 권력 지향적 전략(power-oriented strategy)을 내포하고 있지만 통일전선적 혁명론은 기존의 가치관과 관행으로서 '사회적 정신' 내지 '사회의식(societal mentality)'에 근거해 '저항행동의 틀'을 구성하는 한편 정체성 지향적 전략(identity-oriented strategy)을 구사[260]함으로써 전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이창언, 2011)

레닌주의가 운동의 정통성과 혁명이론이라는 명분을 통해 확산되었지만 러시아의 특수한 경험, 계급론, 경제우위성 강조, 이론이 갖는 난해함 등 현실적합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정치주의와 행동주의적 요소가 강한 한국 사회운동 정서와는 맞지 않았다. 민족적 언어의 강조와 구사는 지식인과 대학생들에게 맑스레닌주의보다 정서적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일조 하였다. 이는 민족해방론(주체사상)이 구사한 언어가 더욱 '정체성 지향적'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이창언 2009). 조직-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민족해방계열의 선택은 가능한 행동노선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과 비용, 주체의 능력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우선 반제통일전선론의 확산에는 운동 목표의 포괄성(breadth), 성공의 정도(degree of success), 다른 집단들과의 연계성 정도, 기존 문화엘리트들과의 대성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혁명적 군중

260) 사회운동이 권력의 문제나 정체성의 문제 중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운동의 특성이나 운동 시기 그리고 운동의 경향성에 따라 어느 한 측면이 강조될 수는 있지만 두 가지 논리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전형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전략구성(사)와 관련해서는 조대엽(2005)을 참고하라.

노선과 대중조직 중심, 애국적 사회진출론, 광범위한 연대(야당과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는 최대민주화연합에 근거한 6월 항쟁의 성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었으며 민족해방파의 영향력과 통일전선론을 확산하는 토양으로 작용했다. 한편, NL운동 일각에서의 주체사상 수용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금단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역설적으로 군부독재와 가장 멀리 대척하고 있는 자가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 강렬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공존하였다. 주체사상의 수용은 민중에 대한 죄의식과 같이 개인이 손상된 정체성(spoiled identity)을 회복하는 길이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서 세계를 변혁한다는 자기만족을 얻는 과정이기도 했다. 반제민족해방론(NL론)은 민족적 에토스를 간직한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쉽게 접합될 수 있었다. 분단체제의 "과잉 민족주의적 상황은 한국의 타락한 보수적 민족주의자에 대한 반감으로 북한의 민족주의적 현상에 우호적인 태도를 창출"하였다. 일반민주주의 차원의 정치적 실천의 제시와 함께 이들이 강조하는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의 단합', 민족통일국가라는 '상상된 공동체'로의 귀속감, 타 공동체가 갖지 못하는 문화적 예외주의를 형성(차문석, 2003)함으로써 과거의 고통과 저항의 집단적 기억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 한국의 반정부 민주화운동의 궁극적 의미를 민족주의 지평 위에 설정하는 형식은 사실상 1960-7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 1980년대 들어오면서 민족주의는 하나의 혁명담론의 형식과 내용을 띠게 된다. 일종의 '광주 효과'라 할 수 있는데 특정한 계기가 주어지면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반미주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내적 동기를 갖고 있었다(하상복, 2005: 223). 이는 한국에서의 민족주의가 정치적인 지배질서와 동태적인 대쌍관계를 통해 그 성격이 만들어졌고 변화되었기 때문이다(최장집, 1996: 192). 1990년대까지 한국의 역사학과 사회과학은 물론 반체제운동진영에서조차 민족, 민족성, 민족 감정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민족' 개념은 한국의 역사에서 완전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 내지 그에 준하는 요소로 간주됐다. "한국의 저항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 두 개의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동일한 세력으로 양자를 결코 배타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체제운동으로써의 남한 민족주의가 갖고 있던 특징이었다고 해도 무방하였다"(김진철, 2004: 212-213). 이러한 배경 뒤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통치, 그로 인한 자생적인 근대 국민국가 형성 기회 상실, 냉전 질서 하에서의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민족주의를 반미구국통일전선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 존재한다(이창언 2009). 역설적으로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구조적 요인이자 통일전선론의 확산과 민족해방계열의 생존과 재생산의 기회구조가 되기도 하였다. 분단체제는 저항주체에게 경향적 반미, 감상적 민족주의, 대북화해주의를 촉발하는 한편 강한 민족국가(강성대국)를 선망하는 민족해방계열의 논리에 쉽게 동의하는 심리적 구조를 제공한다. 낡은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NL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을 가로막고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NL론이 1930년대 이후 1980년대로 이어지는 반제·공산주의 운동의 정통과 명분 강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교조주의 딱지 붙이기, 소련 몰락 이후에도 건재한 북한의 존재 과시 등을 통해 자기 노선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실례를 보여주었다. 조직전략차원에서도 혁명적 군중노선에 기반 한 품성론, 전투적(자주적), 애국적 사회진출론, 현실적인 개량투쟁노선도 NL론을 확산하는 요인이 되었다.

3. 진보진영 내부의 남남갈등의 내용

NL론의 확산은 냉전적 국가 대 진보적 시민사회의 대립이라는 과거의 갈등 틀 외에도 진보적 시민사회 대 진보적 시민사회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남남갈등을 특징으로 한다. 친북적인 NL 진영과 북한에 비판적인 PD진영 간 남남갈등을 전면화한다(손호철, 2006: 34-35). 이 또한 반미주의 확산이후 한국사회운동이 갖는 특수한 형태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여러 연구에서 제기된 통일논의의 쟁점은 첫째, 민주기지론의 위상과 성격, 지역 혁명론과 3대혁명 강화론의 배경, 1980년 이후 연방제 제기 배경과 그것이 남한 변혁운동에서 지니는 의미 둘째, 변혁운동에서 통일운동의 위상과 성격 셋째, 통일 분단문제의 성격과 그 재생산구조의 해명(한국사연구회 현대사 연구반, 1991: 281)과 같은 문제였다.

198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반NL진영(RS-CA소수파, 여명그룹,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연맹)의 통일론과 통일운동에 대한 견해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평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관된 체계로 자신의 통일론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은 신식국독자론을 취하고 있다는 점, 공히 선 혁명론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임정국, 1989: 189-210). ND의 경우 통일에 대해 절충적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NL추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PD진영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함을 보인다. 이들은 북한의 통일론을 절충적으로 이해함에 따라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연방제라는 통일방안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담보된 민중권력과 통일이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제안이라고 하면서도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연방제라는 원칙은 우리 노동자계급이 민족민주변혁에서 견지할 기본원칙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고심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전효관, 1990: 228). IS도 북한과 NL주도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통일운동을 노동자 계급의 단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통일을 지배계급과 민족주의자들의 수중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PD적 견해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을 전후하여 범NL내부에서도 북한관과 통일운동에 대한 갈등의 조짐이 나타난다.1992년 범민족대회는 대학가의 방북교류가 잇달아 실패한 이후 팩시밀리를 통한 북한대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전대협의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 일환으로 몇몇 대학에서 인공기를 내거는 등 통일운동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때 관악자주파의 후신인 생대련은 학생운동의 북한 추종적, 자주적 교류중심의 그릇된 경향을 비판하고 나섰다.[261] 생대련의 문제제기는 민족해방파 내 비주류였던 자주파가 북한 사회와 북한추종노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PD계열 그룹과 함께 새로운 학생운동조직을 출현시킨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진보진영의 전반적인 위기를 맞아 과거의 이론체계와 세계관에 근거했던 NL·PD의 대립구도가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진보의 흐름

261) 생대련은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의 전신으로서 정식명칭은 '생활진보대중정치 대학생연합'이다. 아래는 NL의 통일운동에 대한 생대련의 문제의식이 담긴 글이다.
"한총련식의 통일운동은 그간 노선상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 감성적 호소력과 열정에 의해 통일운동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통일운동을 염원하는 많은 뜻있는 이들의 격려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통일운동은 거의 모순의 폭발점에 다다르고 있다. 입지가 어려워진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우월성을 상실함에 따라 '북한=통일세력, 남한정권=반통일세력' 식의 등식이 설득력을 갖기 힘들어졌고, 대중들 역시 감성적인 열정만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요구하게 되었다." (생대련 기관지 『제 3세대』 中)

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1986년 이래 한국의 운동권을 사로잡고 있던 북한의 영향력이 명백히 퇴조하는 모습과 사회주의 위기를 맞아 북한 역시 맞고 있는 위기적 징후에 대한 남한 진보진영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민족해방파 내부의 의견 대립은 1995년 8.15 민족공동행사를 전후한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당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1990년부터 이어진 범민족대회가 통일운동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제기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았다고 평가하고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위해 다양한 민중ㆍ시민단체를 포괄하고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합법적인 공간에서 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민족해방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문익환 목사가 1992년 8월 범민족대회를 전후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해소와 새로운 통일운동체를 제안하면서 갈등은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통일운동을 둘러싼 NL계열의 갈등은 통일지형의 변화가 내포한 통일운동의 정치방침, 통일방안, 3자 연대, 통일운동 진영의 단결 문제를 둘러싼 시각 차이를 반영한다. 문익환 목사를 비롯한 전국연합과 한청협 내부의 '새로운 통일운동체' 주창자들은 통일 주체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통일 개념과 의미에 대한 재조정과 사회적 합의의 확산을 강조한다. 여기서 대북관의 변화는 대중적 통일운동을 위한 전제로 제시된다.이들은 조국통일이 민족의 단순한 단합의 실현을 넘어 상호변화를 통한 항구적 공영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때, 상호공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체제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통일운동에서 대중화를 저해하고 이분법적(통일/반통일) 사고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가 북한을 대안체제로 인식해온 운동진영의 편향적 사고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아직 친북적 이미지로 남아 있는 연방제를 대중적 구호로 제기하는 대신 대중이 통일문제를 깊이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고, 이 공간에서 공존, 공영, 흡수통합의 반대 원리를 공유하면서 연방제로 개념화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남 . 북 . 해외 실정에 맞는 3자연대를 통해 남한의 통일역량을 보존하며 통일운동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을 해결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남 . 북 . 해외의 3자 연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남한 통일운동의 준비정도와 남한의 정치현실(법적 . 제도적 제약)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면서 대중의 통일의식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3자 연대는 연대 대상의 상이한 역량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3자의 다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황변화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미근본주의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통일운동체(이하 새통체)' 주창자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되 미군기지반환운동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등과 같이 대중적인 반미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전략적인 반미주장에서 탈피하여 생활상에서의 민족자주의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에 대한 민족해방파 내부의 쟁점

요 단위		주계열 (주사파)	혁신계열 (사람사랑)
		서총련, 남총련, 부경총련 등	경인총련, 전북총련 등
정치 방침	주한미군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전략주의적 반미주의의 탈피. (미군기지 반환운동,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평화협정	북미평화협정 체결	남북미 3자 평화협정체결
	통일방안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면화와 확산	공존·공영·흡수통합 반대의 논리 확산
3자연대 (남·북·해외)/ 통일운동의 상과 조직		남·북·해외 범민련	민족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각자의 실정에 맞는 수준에서 연대

출처: 이창언(2009)

범민련의 발전적 해소와 새로운 통일운동체의 건설을 위한 노력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의 창립으로 이어지게 되고,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민족회의와 범민련, 대중적 통일행사와 범민족대회로 크게 나뉘는 인식과 실천의 편차가 조직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표 3> 참조). 전통적 NL계열은 보다 적대적인 프레임에 기초한 행위동원전략을, 새통체나 대중적 통일운동을 강조한 세력은 합의적 프레임과 합의동원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운동을 둘러싼 프레임 분쟁

집합행동 프레임		NL 주사 계열	비주사 NL 계열
진단적	원인진단	-. 미제와 김영삼에 의해 자행된 전쟁책동과 경제봉쇄	87항쟁이후 정치지형-통일운동 지형의 변화
	이슈	-.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 북미평화협정 체결 -.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면화와 확산	-. 생활상에서의 민족자주의식의 지평확장(미군기지 반환운동,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 남북미 3자 평화협정체결 -. 공존·공영·흡수통합 반대의 논리 확산
처방적	대안	-. 남북해외 민족대단결 -. 반미 반 김영삼투쟁 강화	-. 북한에 대한 편향(반대와 옹호) 극복 -. 통일 개념과 의미에 대한 재조정과 사회적 합의의 확산
	주체	-. 범민련강화 -. 범민족대회 강행	-. 남·북·해외 실정에 맞는 3자연대 -. 대중적 통일행사
집합행위프레임		체제 변혁적(전민항쟁)	체제 비판적·개혁적(정당-사회운동)
		행위동원전략	합의동원전략

출처: 이창언(2013a: 212)

참고로 범민련-한총련 주류가 강경한 입장에 선 이유는 북미·남북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북을 배려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1994년 6월13일 북한의 IAEA 공식 탈퇴, 6월 15일 빌 클린턴 미 행정부의 북한 핵시설 폭격까지 포함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발표로 긴장은 극에 달했다. 다행히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

통령의 중재에 힘입어 10월 북、미는 제네바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전쟁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 북한과 협상할 수 없다”며 북과 대화를 거부하였고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조문파동이 벌어지면서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통해 남한 배제전략을 사용했다(이창언, 2009).

1994년 이후 북한은 지구적인 거대한 전환(동구사회주의 몰락, 세계화)과 남한의 민주화 진전, 변화된 운동 모색과 실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동구사회주의 몰락, 93부터 94년까지의 북핵위기 상황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반미、반정부운동을 촉구했고 이 과정에서 ‘범민련’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방했다. NL주사와 한총련과 주류는 조문과 주사파 파동(1994), 두 개의 통일행사(1995), 연세대 사태(1996) 등을 거치면서 보수、진보 양자 모두로부터 제기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게 된다.

한편, 김대중 정부시기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햇볕정책에 대한 이념적 갈등은 보수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간의 갈등이 아닌 진보진영 내부의 긴장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NL은 햇볕정책의 탈냉전적 측면을 PD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의 북한 통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1) 민중중심의 통일, 2) 자본중심의 통일, 3) 적대적 분단, 4) 평화공전적 분단이라는 크게 보아 네 상황 중 지금까지가 3)의 상황이었다면 한국민중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1)인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페리프로세스에 기초한 2)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채만수, 2000; 손호철 재인용, 2004: 36)이라는 것이다. 햇볕정책에 대한 전반적 입장을 둘러싼 인식과 태도는 노무현 정부이후에도 지속된다.1980년 중후반 NL의 주된 구호는 반전반핵이었으나 1990년대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처럼 반제민족주의적 내면성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관점과 대안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NL론 일각의 언설과 성명서를 보면 핵무기를 권력, 안전보장의 기제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핵 보유는 ‘정의의 전쟁’(just war)을 위한 수단이거나, 최소한 적극적으로 지지하긴 어렵더라도 미국의 핵 위협에 대비해 일차적 비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핵 보유를 반대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 핵 실험에 대해서만은 방어적(핵 자위론), 변호론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다. ‘전쟁은 필요악’, ‘강한 국가’, ‘군사주의’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평화의 중심문제”에 대한 기초적 인식의 부재와 평화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줄 뿐이다. 이는 제국을 비판하며 제국을 욕망하는 것으로 평화에 대한 평화주의적 관점과 어긋난다. 북한이 내부의 비판세력 부재로 인해 내부의 자정능력이나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그 담화체계에 영향을 받은 남쪽의 NL은 이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거나 해결을 모색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논리와 정서를 역편향적(적과 아의 이분법)으로 수용한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운동적 상상력’은 거세되고 대중과의 간극은 벌어지게 되었다(이창언 2013).

4. 진보진영의 남남갈등 해소방안

진보진영 내부의 남남갈등은 분단체제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단체제의 “과잉 국가-민족주의적 상황은 한국의 타락한 보수적 국가-민족주의자에 대한 반감으로 북한의 민족주의적 현상에 우호적인 태도를 배태”하였다. 일반민주주의 차원의 정치적 실천의 제시와 함

께 이들이 강조하는 국가-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들의 단합', 민족통일국가라는 '상상된 공동체'로의 귀속감, 타 공동체가 갖지 못하는 문화적 예외주의를 형성(차문석, 2003)함으로써 과거의 고통과 저항의 집단적 기억을 붙잡아 둘 수 있었던 것이다. 분단체제는 저항주체에게 경향적 반미, 감상적 민족주의, 대북화해주의를 촉발하는 한편 강한 민족국가(강성대국)를 선망하는 자주파의 논리에 쉽게 동의하는 심리적 구조를 제공한다. 또한 낡은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주사파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을 가로막고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분단체제ㆍ국가보안법과 자주파는 적대적 공범[262] 관계에 있었다. NL의 저항담론의 심연에는 '제국은 집합적 유죄이고 악의표상(친일ㆍ친미ㆍ독재=비정상국가)', '민중(민족)은 집합적 무죄이며 선의표상(반일ㆍ반미ㆍ통일조국=정상국가)'이라는 '세습적 희생자 의식'에 기초한 '기억과 전선(戰線)의 정치학'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짙게 깔려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극우 중심의 비대칭적 관계구조를 지니게 된 분단체제에 기안하는 것이었다. 금단과 배제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수준과 방식의 차이에서 그 강도를 달리하게 되는데 보수정치세력의 '단극구조(unipolar structure)'의 강화는 운동 참여자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지배자와 피지배의 동일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해되지 않고,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는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하게끔 하게 만든다. 따라서 냉전체제, 분단체제를 확대재생산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남갈등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정치적 요인을 언급하고 있다. 냉전세력의 북풍의 정략적 이용, 일부 보수 언론의 반북, 색깔론 소동, 극우 보수단체의 친미반복여론 몰이와 국가보안법을 통한 다양한 통일논의의 제약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와 참여구조가 없다면 외눈박이 세력의 주장에 정당성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 대북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 참여의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극단을 조정,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남갈등의 1차적 근원은 대북관과 이념에 의해서 기인한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전제는 대화와 협력의 주체로서 북한을 인식하기 위한 전제로서 분석적, 거리두기 시각이 필요하다. 북한의 공식, 비공식적 입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은 그것이 형성되고 고착된 경로를 추적하여 문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비이성적이거나 무의식의 세계에 토대를 둔 편견과 선입견을 의식세계로 끌어내어 교정해야 한다(서재진, 2014: 11).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차원의 문제는 '어떤 사회가 나쁜 사회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새롭게 만들 것이냐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곧 북에 대한 고립과 남한 지배층의 정당성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한국사회 또한 북한 못지않게 사회적 부와 정치권력이 계급집단 내에서 '세습'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262) 주사파와 극우가 적대적 공범관계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박노자의 아래 글을 읽어보라.
"한 극단의 행동이 반대쪽 극단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적대적 공생'의 논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북한의 극좌세력과 남한 극우세력의 관계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판명되거나 추측되는 극단적인 폭력행위들이 남한 극우들의 정치적 생명을 많이 늘렸다는 것이 잘 기억할 수 있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다"(박노자, <한겨레21> 제377호, 2001년 9월19일).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권력체계, 진보진영의 오류를 반성하고 극복하는 과제와 관련이 있다. 오류를 인식하는 것은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한국 진보진영은 북한문제에 대한 과도한 보편주의적, 특수주의적(북한 특수성) 접근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 북한 인권을 내세운 미국과 보수주의자들의 정치공세(북한정권 타도만이 인권문제 해결) 같은 단선적·급진적 접근은 문제가 있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을 내세운 진보진영의 인권 침묵(이중 잣대),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방어적(핵 자위론), 변호론적 태도도 비판되어야 한다. 이는 제국을 비판하며 제국을 욕망하는 것으로 반전평화에 대한 진보주의적 관점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이다(이창언 2013b).

5. 마치며

지난 시기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보여준 NL의 긍정성(통일에 대한 열망과 헌신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혁신도 필요하다. 보다 자주적인 입장과 태도로 북을 대하는 한편, 시대정신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언행과 대안 개발이 요청된다.

혁신과 재구성은 운동의 목표, 구조(조직과 절차), 사람 모두가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대와 다중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인식 틀의 전환(rethinking)이다. 변화된 한국사회-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동해온 자신들의 가치와 이념에 대해 질문하고 성찰하고 개조하는 가치관의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급진주의 운동에 대한 임상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은 변화된 상황과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구체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성찰과 상호부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급진적인 사유의 틀이자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다. 나아가 급진주의와 민주주의의 재구성, 대안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형성 역량개발(reinventing)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 중 일부는 비단 NL에 국환된 것이 아닌 한국 진보진영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첫째, 인식 틀의 전환, 즉 '근대성', 성장과 발전주의를 내장한 저항성, 반제환원론,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 대중의 삶의 양식에 관한 천착 속에서 자주성을 재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자주성 확립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반제-반자본적 급진성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내적 자주성을 갖는 문제이고 북한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차별적 정체성 즉 외적 자주성을 동시에 확립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점을 넘어 평화주의에 기초한 대안, 민생과 복지와 같은 쟁점에 관한 실현가능한 대안제시도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동북아 평화와 통일실현을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정책적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국제, 국내 환경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선도할 활동가의 긍정적인 생활상의 변화(reorienting)와 적응능력(reskilling)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주의적 반미주의나 이념교육과 토론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대안을 중심으로 한 학습과 소통과 협동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남북한 대결과 반목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형 확장은 변화의 역동성에 대한 높은 반응성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형성 및 실행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사회적 능

력(social capacity)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교조(사상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열정(passion), 비전(vision), 행동력(action)은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가능성과 설계도이자 비전 추동력이 될 것이다(20. 한반도 평화의 재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논의할 때 핵심적인 질문은 이 이니셔티브가 국가-지방정책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연계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그 이니셔티브는 사회에 대한 어떤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도 없는 "운동장"이 될 수 있다(이창언, 2013c).

<참고문헌>

강수택. 2001.『다시 지식인을 묻는다』. 삼인.
국제사회주의자들(IS). 1995."민족통일 논쟁에 붙여".『사회주의 평론1』.
김진철. 2004.「비평: 민족주의 비판론에 대한 몇 가지 노트」.『역사문제연구』제 4호. 역사비평사.
박영자. 2007.「87년 민중항쟁 정신쇠퇴의 운동사적 평가와 과제- 통일운동을 중심으로」.진보평론『진보평론』2007.6.
변창구. 2011.「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요인」.한국통일전략학회.『통일전략』 제11권 제3호.
서재진. 2004.「남남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진보평론『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자료집』2004.11
손호철. 2004.「제1부 :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논집』.
양난주. 1994.「북한 조선노동당에 대해서도 자주적이야 한다」.『월간 사회평론 길』1994.9월호.
이우영. 2004.「북한관과 남남갈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이창언, 2009.『한국학생운동의 급진화에 관한 연구: 1980년대 급진 이념의 형성과 분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학위논문.
이창언. 2011.「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정치조직 논쟁: 반제 통일전선 전통의 복원과 정치세력화의 지체」.『기억과 전망 24』.2011. 여름호.
이창언. 2011.「포스트 민주화시대, 급진민주주의 기획과 민주주의 좌파의 과제 : 급진민주주의 리뷰《데모스 1: 민주주의의 급진화》,《데모스 2: 연대성의 정치학》(데모스미디어, 2011)」『경제와사회』 통권 제91호.
이창언. 2012. "4.11총선 이후 진보정당 정치의 위기와 진보좌파의 과제".『진보평론』제53호.
이창언. 2013a.「한국사회 구조변동과 사회운동의 내적 구성 변화 :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 프레임 분쟁과 조직분화를 중심으로」『기억과 전망』29호.
이창언. 2013b.「남북한 핵무장론에 대한 비판과 비전 평화(非戰平和)운동의 과제」.『진보평론』제57호.
이창언. 2013c.「반제적(NL) 급진주의의 한계와 혁신과제」.『진보평론』제58호.
이혜영. 1999.「사상사로서의 '1980년대': 우리에게 1980년대란 무엇인가」.『1980년대, 혁명의

시대』. 새로운 세상.
임정국. 1989. “노동자계급에게 통일이란 무엇인가”.『현실과 과학』4. 새길.
전효관. 1990. “1980년대 사회운동 논쟁의 정리를 위하여”.『현실과 과학』5. 새길.
주봉호. 2007.「한국사회의 남남갈등 현황과 과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제15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진덕규. 1985.「문화 식민주의 지식인론」.『정경문화』242호.
채만수. 2000.「노동자, 민중적 통일만이 살길이다」.『노동과 세계』제 101호(2000년 4월 28일자).
허상수. 2004.「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변혁주체논쟁」. 조희연 편.『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의 동학』. 함께읽는책.

기타 참고자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통신』1993~1997.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1.『'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 자료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1.「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방침에 대한 해설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2. “한청협 창립선언문(1992.02.23)”.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3. “청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위원회 종합보고서(한청협 2기 총회. 1993)”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4. “제 3기 대의원총회 결의문 - 조국과 함께한 우리이 청춘, 통일조죽에 빛나리라(1994.03.20)”.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5. “제 4기 대의원총회 결의문 - 청년의 힘과 지혜를 모아 96년을 민족승리의 해로 기록하자 (1995.03.12)”.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8. “한청협 해산결의문 - 우리는 쉼 없이 전진할 것이다(1998.09.20)”.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5.『자주의 길』1.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6a.『자주의 길』2.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6b.『자주의 길』3.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1996c.『자주의 길』4.

〈민족적 연대를 가로막는 남남갈등의 실체와 극복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광남(생활자치연구소)

※별지첨부※